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1-25-08

Happiness for ALL, with Global KOICA

2015 No.4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ement Cooperation

2015년 제4호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자의 글

2015년 한 해는 21세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개발노력을 이끌어온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종료되고,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인 Post-2015체제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UN개발정상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아울러 7월에는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UN개발재원총회(AAAA)가 개최되어 SDGs 달성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1월 30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SDGs 논의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오는 2016년 3월 SDGs 지표의 최종확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KOICA는 올해 2015년 한 해동안 SDGs 확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전국민과 공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본 협력지와 함께 연계되어 개최되는 개발협력포럼을 통해 지난 2,3분기 포럼에서는 SDGs체제의 각 목표별 세부내용 및 수립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이행 메커니즘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본 협력지 2,3호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번 4분기 개발협력포럼과 국제개발협력지에서는 그간의 SDGs 논의를 종합함으로써 SDGs 체제를 어떻게 KOICA의 중장기전략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호에서는 지난 11월에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중장기전략 수립논의'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9회 개발협력포럼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KOICA의 주요 5대 이슈인 교육, 보건,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어촌개발과 범이슈인 환경 이슈에 대해 KOICA 내부전문가 및 학계, 정부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이었다. 이에 본 호의 각 분야별 원고에서는 제29회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행정(권혁주), 농어촌개발(김경량), 기술(김우성), 에너지(황인철), 환경(이정호), 교육(유성상, 장은정), 보건(오충현) 이슈로 나누어 SDGs 이행을 위한 KOICA의 효과적인 분야별 중기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본 호에서는 "KOICA 중장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김인)"이라는 주제로 김인 KOICA

---

1) 2분기 포럼(제27회)에서 다루어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은 국제개발협력지2호 발간과 함께 KOICA 차원에서의 연구보고서로 별도 발간하였다(2015.07, 성남:한국국제협력단).

전략기획 이사의 특별기고문이 실렸다. 본 원고에서는 각 분야별 중기전략을 포함하여 Post-2015 개발의제를 반영한 KOICA 기관 자체의 중장기전략을 소개하고, KOICA가 국내외 개발흐름에 발맞추어 어떻게 기관 전략차원에서 SDGs의 주류화를 이행하고자 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섹터부문의 원고인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ssistance to Tackle Youth Unemployment in Devloping Countries (박상백)” 에서는 개도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공여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프로그램 및 정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실제 운영시 발생가능한 어려움 등을 소개한다. 이에 이어 한국정부가 개도국에 실시하는 VET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4호에서는 새로운 SDGs 체제 도래로 인한 국내외 개발환경변화에 발맞추어 KOICA가 어떻게 중장기전략을 수립 및 구성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KOICA 외부의 다양한 의견은 어떠한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KOICA가 앞으로도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으로서 보다 선도적으로 SDGs 논의에 대응해나가며 보다 양질의 원조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KOICA의 전략에 대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호가 독자들로 하여금 앞선 포럼 및 협력지에서의 SDGs 논의를 바탕으로 KOICA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KOICA를 비롯한 우리나라가 새로운 SDGs 체제하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5년 12월

연구개발팀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I. 개발협력 이슈

1. KOICA 중장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방안 ····· 3
김인 (KOICA 전략기획 이사)

2. KOICA 공공행정 분야 SDGs 대응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 37
김은주 (KOICA 공공행정팀 전문관),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3. SDGs 채택에 따른 농촌개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 53
김경량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김경철 (강원대학교 대학원)

4. 과학기술혁신과 ODA ····· 79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장)

5. SDG 에너지 ODA 전략 제언: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시장 조성 ····· 93
황인철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전략실 팀장)

6. 기후변화 적응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시 ····· 103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위원)
강주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원)

7.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
: KOICA 교육전략(2016–20)(안) ····· 119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장은정 (KOICA 교육보건팀 전문관)

8.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보건분야 중장기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 131
오충현 (KOICA 교육보건팀 전문관)

II. 섹터

1.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ssistance to Tackle Youth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145
Park, Sangbaek (ODA Expert, KOICA Cambodia Office)

III. KOICA 개발협력 자료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 187
2. KOICA ODA도서관 2015년도 학술DB 구독 목록 ····· 188
3. KOICA 2015년 9월~2015년 12월 발간물 목록 ····· 190
4.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 192
5.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 193
6.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 194

I

개발협력 이슈

1. KOICA 중장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방안
김인 (KOICA 전략기획 이사)

2. KOICA 공공행정 분야 SDGs 대응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김은주 (KOICA 공공행정팀 전문관),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3. SDGs 채택에 따른 농촌개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김경량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김경철 (강원대학교 대학원)

4. 과학기술혁신과 ODA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장)

5. SDG 에너지 ODA 전략 제언: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시장 조성
황인철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전략실 팀장)

6. 기후변화 적응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시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위원)
강주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원)

7.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
: KOICA 교육전략(2016-20)(안)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장은정 (KOICA 교육보건팀 전문관)

8.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보건분야 중장기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오충현 (KOICA 교육보건팀 전문관)

KOICA 중장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방안

김인 (KOICA 전략기획 이사)

목 차

I. 서론

II. 국제사회의 SDGs 체제 구축 노력
1.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2. UN 개발정상회의
3. UN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 (COP21)

III. KOICA 중장기전략
1. 수립 배경
2. 주요 내용

IV. KOICA 중장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1. KOICA 중장기전략 3대 핵심과제 및 5대 브랜드 프로그램
2. 이행 용이성에 따른 SDGs target 분류
3. 세부전략과 이행메커니즘의 조화 방안

V. 결론

초록(Abstract)

지난 15년간 개도국 빈곤퇴치에 기여해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 말로 종료함에 따라, 기존 MDGs를 승계하여 향후 15년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수립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새로운 SDGs 체제 하에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KOICA는 새로운 개발체제에 발맞춰 KOICA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 완료하였다. 본 중장기 전략은 SDGs 체제의 목표를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를 고려하여 작성한 종합적인 차원의 기관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KOICA는 현재 중장기 전략 내의 세부과제로서 KOICA 5대 중점분야 및 3대 범분야 각각에 대한 중기전략(2016~2020)을 2016년 6월 최종완료할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KOICA 기존사업을 Post-2015 목표를 기준으로 일치 · 통합시키고자하는 'KOICA Post-2015 브랜드화' 작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KOICA 중장기전략의 전체적 구성은 어떠하고, SDGs 차원에서는 어떠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먼저 전략 전체 차원에서, SDGs의 비전 및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난 후 SDGs 차원에서, KOICA 중장기 전략이 SDGs 이행을 위해 설정한 3대 핵심과제와 5대 브랜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렇듯, KOICA는 중장기전략의 전체적인 방향 및 틀을 완성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과제들의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순차적으로 완성해가고 있다. 이에 KOICA가 앞으로 국내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이자 SDGs 논의 및 대응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내에 설정한 핵심 과제전략 및 이행메커니즘 간의 유기성을 높여 상호간의 적절한 조화를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5대 브랜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SDGs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I. 서론

지난 15년간 개도국 빈곤퇴치에 기여해 온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 시한(2015년 말)이 도래함에 따라 국제사회는「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유엔 정부 간 협상결과 지난 2015년 9월 UN개발정상회의에서 최종 문안

에 합의하게 되었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결과문서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지속가능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2030 개발의제」의 변혁적 성격을 강조한다. 결과문서를 통하여 MDGs를 승계하는 2015~2030년간의 글로벌 개발목표로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공식 채택되었다. 이번에 공식 채택된 SDGs는 기존에 개도국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던 MDGs와 달리 선진국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체제이다. 또한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핵심주제로 모든 인간이 빈곤, 기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교육과 보건위생, 안전한 주거와 에너지 접근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의제,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변혁적 의제, 소외, 취약계층까지 고려하는 포용적 의제이자, 구체적인 이행수단 및 강력한 후속조치 및 평가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렇듯 Post-2030 개발의제는 기존 MDGs가 사회경제적 성장을 강조한 데 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목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 목표를 제시해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과제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SDGs는 다양한 개발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방대하고 야심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들, 즉 새로운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외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함으로써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 민간 · 시민사회 · 유엔시스템 및 기타 행위자들의 참여 및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SDGs 이행을 지원하는 범지구적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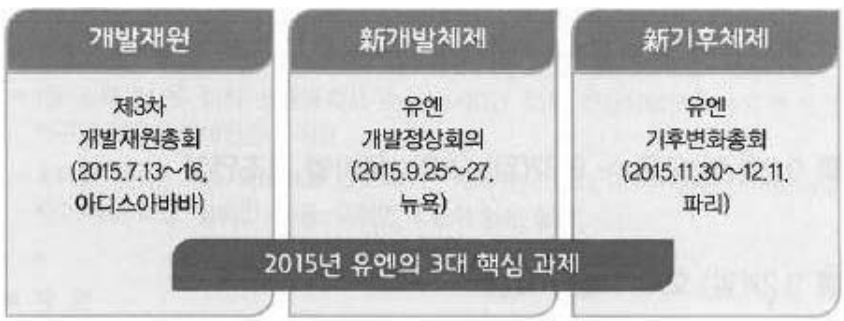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KOICA는 MDGs 시대가 종료되고 SDGs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개발체제에 발맞춰 KOICA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였다. 중장기전략 내 세부과제로 추진 중인 5대 중점분야 및 3대 범 분야 각각에 대한 중기 전략 수립이 2016년 6월까지 최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KOICA Post-2015 브랜드화 작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Post-2015 개발의제를 반영한 기관 전체 차원의 KOICA 중장기전략을 소개함으로써, KOICA가 국내외 개발변

화 흐름에 발맞추어 어떻게 기관 전략차원에서 SDGs 주류화를 이행하고자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SDGs체제 구축을 위한 2015년 UN 3대 핵심과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 시한(2015년 말) 도래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난 8개월간 논의해 온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유엔 정부간 협상(2015.1~8월) 결과 최종 문안을 지난 8월 2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개발정상회의가 개발재원총회, 기후변화총회와 함께 2015년 유엔의 3대 핵심 목표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부분에서는 SDGs 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주요 국제회의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SDGs 논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5년 UN의 3대 핵심과제



출처: 외교부 (2015)

1.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

지난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본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이 공식 채택되었다. 이번 제3차 개발재원총회는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와 도하선언(Doha Declaration)의 이행에 대한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박수영, 오수현 2015).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선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는 여러 유형의 개발재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에 대한 명확히 협의된 정의는 없으나, 포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anncing for Development)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사회, 환경 개발을 위한 동원가능한 재원이 무엇이며, 이러한 재원의 조달 및 활용을 위해 수행해야할 노력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행동의제 문서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4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문은 총론격인 Post-2015 개발재원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A global framework for financing development post-2015)로서, 이번 개발재원총회의 과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선언 이행상황 점검, SDGs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 및 이행수단 강화, 동 행동계획의 검토 및 후속조치 점검 방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적 협약(social compact)에 대한 약속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7대 행동분야로서 ▲국내공공자원 (Domestic public resources), ▲국내외 민간기업 및 재원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부채 및 부채지속가능성(Debt and debt sustainability), ▲시스템이슈대응 (Addressing systemetic issues), ▲과학기술혁신 및 역량강화(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building)를 설명하며, 결론에서는 데이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Data monitoring and follow-up)에 대해 언급하였다(UN 2015a).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성과물을 얻었다. ①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Addis Tax Initiative)를 통해 개도국의 조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②「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 출범한 기술 촉진 메커니즘(TFM,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은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과학계, 유엔기구 및 여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multi-stakeholder간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 ③ 다자개발은행이 주도하는 기존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기반한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 포럼을 설립함으로써 공여국과 수원국간 글로벌 인프라 간극을 메우고자 한다. ④ UN사무총장 주재 하에 Post-2015의 이행수단과 개발재원회의 결과물들의 이행상황에 대해 연도별로 보고를 담당하는 기구간 태스크팀(Inter-Agency Task Team)이 소집된다(UN 2015a).

또한 이번 개발재원총회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민간 및 공적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행동의제는 개발협력의 문제가 국제공적재원활용의 문제를 넘어 국내 공적 재원 및 국내외 민간재원 동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ODA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규모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개도국의 투자 수요와 공급간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방안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UN 2015a). 이를 위해 공적개발기관과 민간금융 부문간의 연대 방안

및 혼합금융, 공적기관의 보증, 개발금융상품의 유동화, 보험의 재난방지 역할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이 속속 창안되고 있으며, 유수한 글로벌 기업 및 은행, 펀드들도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본 행동계획은 지난 2015년 9월 확정된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향후 15년간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협력해야할 분야들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박수영, 오수현 2015). 특히 본 행동계획에서는 민간분야가 개발의 주요 동인임을 인정하면서 글로벌 기업활동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 UN 개발정상회의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에서는 UN 개발정상회의(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가 개최되었으며, 본 회의의 결과문서로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 공식 채택되었다. 이번 UN개발정상회의에서는 MDGs를 승계하는 2016~2030년간의 글로벌 개발목표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SDGs의 성공적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각국의 기여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MDGs를 승계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로서 공식 채택된 SDGs는 기존에 개도국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던 MDGs와 달리 선진국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체제이다. 또한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회의와 병행하여 총 6개 세션이 개최되었으며, 국각 대표 및 NGO,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세계의 변혁: 2015년 이후 개발의제의 실현(Transforming the World: realizing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라는 주제로 개최된 각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총 6세션의 주제를 다루었다(〈Box 1〉 참조).

〈Box 1〉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세션 주제

▲ (상호대화1) 빈곤 및 기아 종식
▲ (상호대화2) 불평등 해소, 여성 및 소녀 권익신장 및 포용
▲ (상호대화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변혁 촉진 및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 (상호대화4) 지구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 (상호대화5)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 제도 구축
▲ (상호대화6)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달성

출처: 외교부 (2015)

또한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 외교부와 UNDP, OECD가 공동 주최하여 「21세기 新농촌개발전략과 새마을 운동(A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and the Inclusive and Sustainable New Communities Model Inspired by the Saemaul Undong)」 주제로 한 새마을 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본 행사에는 OECD, UNDP, KOICA를 비롯해 한국, 베트남, 라오스, 페루, 르완다 등 주요정상 및 UN사무총장, World Bank 등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새마을운동을 21세기 개도국 농촌개발에 기여하는 '글로벌 개발 자산'으로 발전 및 확산시킴으로써 SDGs 이행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서 주요하게 소개된 국제기구와 한국간의 새마을운동 관련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한-OECD 新농촌개발패러다임 공동연구) 한국은 OECD와 함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新농촌개발 패러다임」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주요 성공요인을 기초로 21세기 변화된 개발환경에 적용가능한 농촌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12월 발간될 예정이다.
- (한-UNDP 새마을운동 협력사업) 한국은 UNDP와 함께 2014년부터 4년간 '한-UNDP 새마을운동 협력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근면, 자조, 협동에 근거한 새마을운동 이행 지침을 수립하여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기획하고 있다. 본 사업을 위해 한국과 UNDP는 라오스, 미얀마 등 6개국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MDGs와 SDGs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MDGs와 SDGs는 그 개발주체 및 개발 이슈의 범위에 있어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 가령, MDGs는 빈곤과 보건, 양성평등, 환경 등에 한정되어 있는 개발목표로 각 정부를 중점적으로 실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방안이 부족해 몇몇 목표 달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비해 SDGs는 에너지, 경제성장, 인프라, 지속가능성 등의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였고,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 정치가, 학자, 이익 집단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MDGs에 비해 SDGs는 목표별 달성 목표치, 이행방안, 강력한 국제규범을 확립함으로써 훨씬 강력한 적용성을 지녔다고 평가된다(다음 〈표 1〉 참조).

SDGs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universal) 의제이자, 기존의 선진국-개도국 간 이분법적 구분을 탈피하고, 인류공통의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환을 요구하는 변혁적(transformative) 의제로 된다. 아울러 저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을 강조함으로써, 소외 · 취약계층까지 고려하는 포용적(leave no one

〈표 1〉 MDGs와 SDGs 차이 비교

구분	MDGs (2001~2015)	SDGs (2016~2030)
구성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보편성)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야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분야 중심	(변혁성)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 · 사회 · 환경 통합 고려
참여	정부 중심	(포용성)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출처: 외교부 (2015)

behind) 의제이다. 또한 ▲다양한 재정적(ODA, 국내 공적 재원, 민간 재원 등), 비재정적(과학, 기술, 역량강화 등) 이행수단 동원,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다층적(국가-지역-글로벌) 후속조치 및 평가 체계 수립 등 구체적인 이행수단 및 강력한 후속조치와 평가시스템에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SDGs는 총 17개의 개발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17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Box 2〉 SDGs 17개 목표

⑴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⑵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⑶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⑷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⑸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⑹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⑺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⑻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⑼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⑽ 국가 내 및 국가간 불평등 완화
⑾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⑿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⒀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⒁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⒂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및 생물다양성 훼손 중지

⑯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⑰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출처: 김지현 (2014)

나.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민간, 시민사회, UN시스템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MoI)이란, SDGs의 방대하고 야심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의미한다. 즉, 국내외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함으로써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UN 2015b).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 민간 · 시민사회 · UN시스템 및 기타 행위자들의 참여 및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SDGs 이행을 지원하는 범지구적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필수적인 일부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는 「2030 개발의제」의 이행수단 관련 세부목표들을 지원 및 보완하면서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두 의제 모두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한 이행수단 동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UN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로 불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신(新)기후(氣候)체제'가 구축되었다. 교토의정서가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 38개국에 국한해 감축의무를 부여한 반면, 2020년 이후 신(新)기후(氣候)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극빈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함께 지게 된다.

1)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고 협약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이행을 촉진하고자 개최되는 국제회의이다.

이번 COP21 총회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교토의정서[2] 공약이 종료될 예정인 2020년 이후 적용될 신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 짓고,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인 '신(新)기후(氣候)체제'를 2015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는 2020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파리 총회에서는 각국이 제시한 감축방안에 법적 구속력,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진국의 대규모 재정지원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UN 2015c). 아울러 과거와 달리 각국의 책임회피를 막기 위해 정상급 회담을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합의한다는 원칙도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올 한해 각국이 제출한 신기후체제 기여방안(INDC)[3]을 토대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등이 결정되었다(UN 2015c). 그간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신규 감축목표를 포함한 각국의 기여방안을 파리 총회에 앞서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170여개 당사국이 UN에 제출을 완료하였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와 함께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포함한 기여방안을 지난 6월 30일 UN에 제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합하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이상에 달하는 목표치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이 불참하면서 그 관리대상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 의무적인 감축책임이 부과되지 않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新)기후(氣候)체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되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에 있어 국가별 의무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하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여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을 통한 동참의지 표명 이 외에도 최근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이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로서,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2008~20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 2005년 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함.

3) 각국이 정하는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란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감축목표, 적응정책 등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말함.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각국의 기여방안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격론을 벌였다.

본 회의에 우리 대표단은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역할을 통해 협상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양자협의 등을 통해 주요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총회기간 동안 현지에서 한국관(파빌리온)을 운영하여 온실가스배출거래제 도입,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경험과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은 협의의 개발협력을 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대응과 국제적 연대를 요구한다(UN 2015c). 이러한 과제들은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분야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여국 선진국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CO2 배출을 줄이는 경제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및 빈곤층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막대한 재원동원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진국들의 책무가 우선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II. KOICA 중장기 전략 수립

1. 중장기 전략 수립 배경: 대내외 환경 분석 결과

가. 국내 환경의 변화

1) 정부의 개발협력 추진의지 강화

정부가 설정한 국정기조 및 국정목표에 대해 KOICA의 기관차원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연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국정 기조를 통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개발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4] 아울러 ODA 시행부처간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

4) (ODA사업 관련 국정과제) ODA 규모 지속 확대, ODA 통합 추진 체계 공고화, 개발협력 글로벌 인재양성, 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범적 ·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적 기여 증대.
(non-ODA 과제)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등.

고 상생형 ODA를 추진함으로써 수원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한국 인력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동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1차 분야별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1-2015)이 올해 종료되고,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분야별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ODA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SDGs 이행목표달성 기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3대 기본방향 각각에 대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5)]

- ▲ 통합적인 ODA: 유 · 무상 통합 전략 강화, 무상 통합 전략 강화, 2기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 ▲ 내실있는 ODA: ODA컨텐츠 재정비, 종료 ODA 사업 사후관리 강화, ODA 평가 · 환류 강화, 사업투명성 제고, 인도적 지원 확대
- ▲ 함께하는 ODA: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민간파트너십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 삼각협력 활성화, 다양한 민간 재원 활용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2) ODA 집행주체의 지속적인 다원화

오늘날 다수의 ODA시행기관들은 기존에 KOICA를 통해 ODA사업을 실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체 ODA사업을 형성 및 기획하고 수행함으로써 ODA 집행주체의 다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OECD/DAC 가입 및 원조규모 증가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ODA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증가하였으며, 원조분절화 및 중복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 무상원조 시행부처는 2011년 22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31개로 늘어났다. 2015년의 경우 31개 기관이 859개의 무상 원조 사업(금액 8,446억 원)을 추진하였다. 지자체를 포함한 시행기관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며, 지자체가 전체 ODA 예산에서 집행하는 비중도 2010년도 0.2%에서 2014년도에는 잠정 0.68%로 늘어나는 추세다.[6)] 또한 2010년 기준, 총 43개의 ODA시행기관이 ODA 집행에 참여하였으나, 총 ODA 예산 중 기관별 예산비율이 1% 이상인 기관은 8개 기관[7)]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극히 소규모의 ODA만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5.11.10, 제 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6)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p.47(2015.11.10, 제 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7) 8개 기관에는 KOICA,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은행,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가 있다. (출처: 2010년 국무총리실 전수조사 기준)

3) 공공기관의 역할변화를 통한 상생형ODA 강조

과학기술의 발전, 난민, 불평등 이슈 등 다양한 개발협력 과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개발협력 기관 단독으로서는 수원국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강조되는 부산글로벌 파트너십 및 Post-2015 개발협력 논의 등을 통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 이슈 대응이 강조되어가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각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수도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ICA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원조사업에 있어 기존의 독점적 문제해결자 혹은 서비스 공급자에서 벗어나 조정 및 촉진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ODA를 추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나. 국제 환경의 변화

1) Post-2015 중심의 신규 개발과제 논의 활성화

2015년 MDGs 달성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 UN개발총회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공식 채택되었으며, 오는 2016년 3월에 SDGs 세부지표 역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SDGs 최종지표까지 확정되고 나면 개발목표는 향후 15년간의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기본 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SDGs 우리 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비전으로 수립한 "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이 공약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농촌종합개발사업" 등의 주요 이니셔티브들의 구체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

2) ODA정의 변화와 개발재원 다각화

ODA 정의변화와 정부주도의 ODA 감소, 다양한 개발재원의 확대 등의 변화에 맞추어 민간재원과 ODA간 연계, ODA와 기타재원과의 역할 및 기능 정립, 새로운 금융방식을 활용한 ODA 추진방안, 민관파트너십 확대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KOICA는 선진 개발원조기관 및 선진 공여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재원을 ODA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중이다. 또한 개발재원의 외연 확대 및 TOSSD로의 ODA개념 변화는 개도국에 관련되는 재원과 이해관계자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ODA가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재원과 이해관계자의 촉진, 통합, 조정, 연계 및 방향성 제공 등 KOICA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3) 개발협력 이슈의 영역 확대

최근 개발의 개념은 단순한 사회, 경제개발을 넘어서 안보, 인권, 취약국,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문제 등으로 개념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ODA 범위에 있어 평화, 사법, 안보 관련 활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TOSSD의 개념에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지원,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하여 산정하겠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공조강화와 UN을 비롯한 국제시스템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4) 혁신기술과 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필요성 증대

민간부문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협력에 접목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수원국 요청에 기반한 사업발굴 방식으로는 혁신기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사업형성에 한계가 노정된다는 점에서, KOICA는 민간의 창조적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개발협력에 반영한 혁신적 사업을 기획 및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교육, 보건, 금융분야의 ICT를 활용하거나,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거버넌스 개선, 농업생산력 제고, 새로운 산업과 창업 기회의 창출, AIDS/HIV치료제 및 말라리아 백신 등 신약 개발 등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국내외적 개발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KOICA를 비롯한 전세계 공여기관들은 Post-2015에 기여가능한 ODA 패러다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KOICA는 원조기관으로서 국내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KOICA의 중장기적 발전상(identity)을 명확히 드러내고, 기관의 발전방향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KOICA 중장기전략 수립계획을 확정하여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다. 그 후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KOICA가 단내 간부 및 본부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전략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KOICA 해외사무소 및 외부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2015년 3월 KOICA 중장기 전략이 최종 수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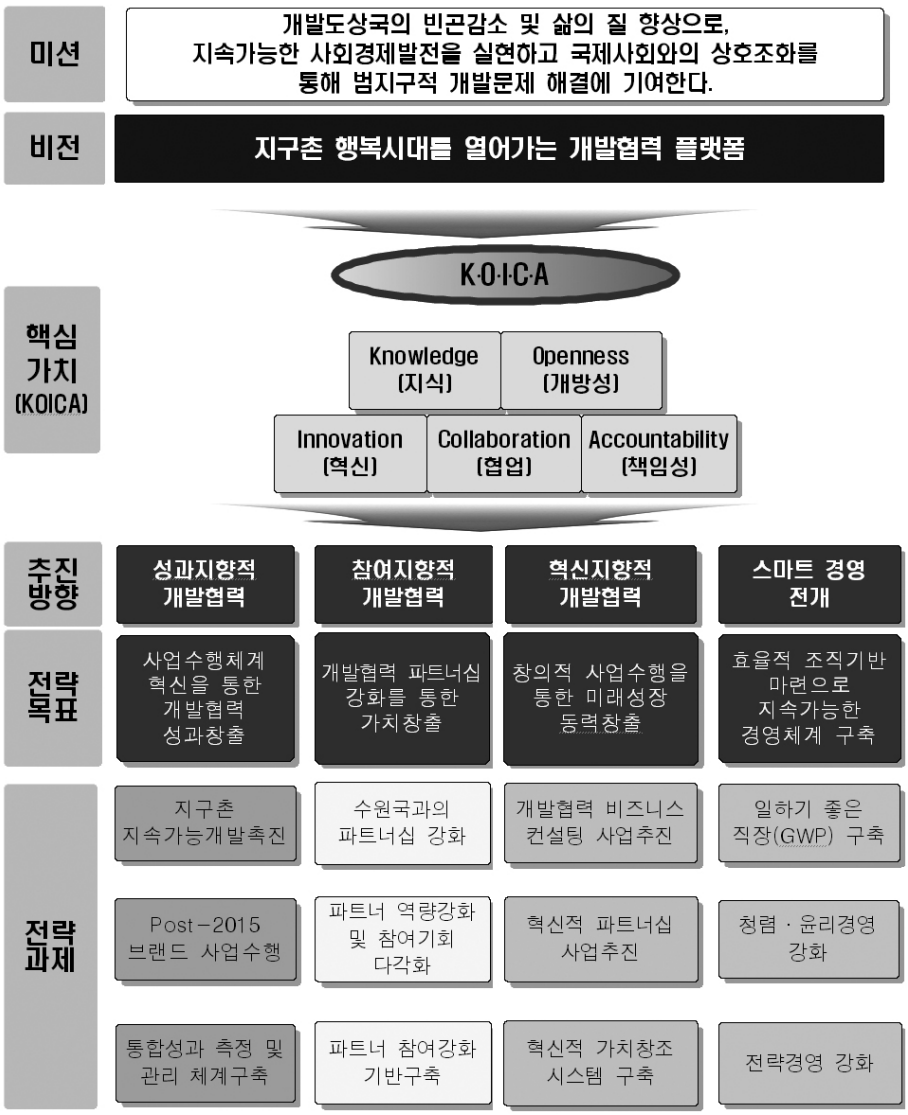
2. KOICA 중장기 전략 주요 내용

KOICA는 이러한 다양한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받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재원과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가치창조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KOICA는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개발협력 플랫폼'을 기관 비전으로 하는 KOICA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Post-2015 개발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합의 및 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이행 방향 모두를 반영함으로써 원조실행기관으로서 KOICA가 참여파트너들과의 협력

을 통해 지구촌 행복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OICA의 중장기 전략은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라는 비전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5개의 핵심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의 전략 목표 및 이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다.

〈표 2〉 KOICA 중장기전략 비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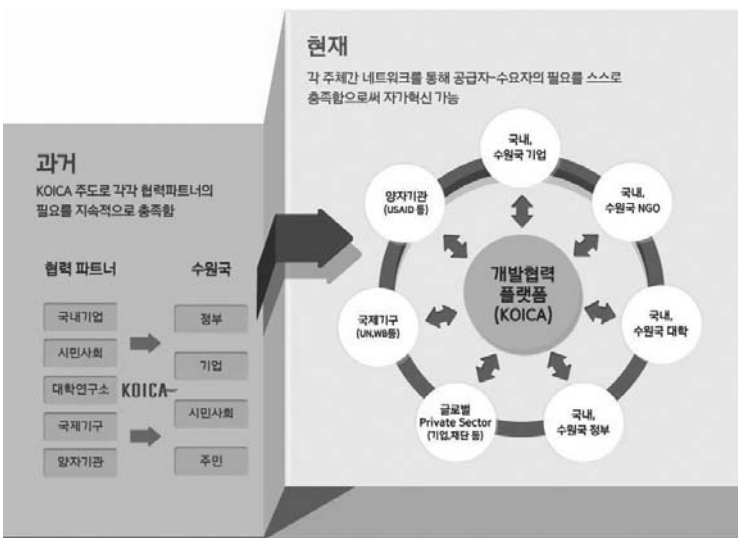
출처: KOICA (2015a)

가. 비전

우선 KOICA의 중장기 전략의 비전은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들과 KOICA와의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場)으로서 개발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에서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모범국가로서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방 및 공유, 협력을 통한 정부 3.0을 달성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KOICA는 수원국, 선진공여국, 국내 ODA시행기관 등 다양한 협력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비롯한 폭넓은 국제개발현안(global challenges)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지구촌 행복시대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KOICA는 기존에 KOICA 주도로 각각 협력 파트너들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독점적 문제해결자' 지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발주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함으로써 자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개발협력 플랫폼'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KOICA는 국내외 개발협력들과 KOICA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함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해 개발협력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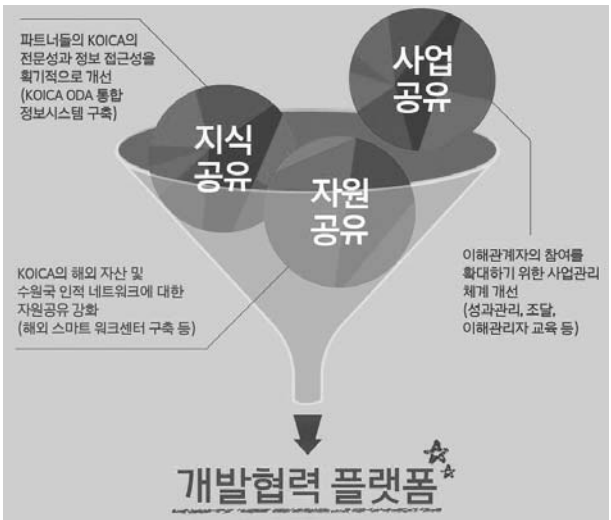
〈그림 2〉 개발협력플랫폼 개념



출처: KOICA (2015a)

개발협력플랫폼은 국내 개발협력 생태계 번성을 위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크게 '사업공유', '지식공유', '자원공유'의 3대 플랫폼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개발협력플랫폼의 주요역할



출처: KOICA (2015a)

우선 사업공유 플랫폼은 국내의 개발협력파트너들에게 KOICA의 개발협력사업추진 know-how를 기반으로 사업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방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추진 시스템, 조달 시스템, 교육 및 역량 개발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의 4가지 정보 시스템을 개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식공유 플랫폼이란 개발협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KOICA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공유 플랫폼은 KOICA의 해외 인프라 및 수원국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하여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과 자원공유를 위하여 KOICA 사무소를 개발협력 공유서비스센터화(Shared Service Center, KOICA SSC)하고 수원국 핵심인력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공유 서비스(Key Man Network Management 플랫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KOICA 개발협력 3대 플랫폼 요소 구축의 목표는 국내 개발협력 생태계 번성을 위한 장(場)을 마련하고 각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의 개발협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의 위상을 제고하여 공여국으로서의 국격을 높이는 것이다.

나. 핵심가치

KOICA는 기관 및 임직원 모두가 KOICA의 미션, 비전, 전략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핵심 역량 및 가치로서 지식, 개방성, 혁신, 협업, 책임성 등 5가지로 설정하고 조직 및 임직원 모두가 본 핵심역량 및 가치를 지니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본 핵심가치의 영문명 앞 글자를 따서 KOICA로 명명하고 있다. 5가지 핵심가치에 대한 각각의 목표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KOICA 중장기 전략의 5대 핵심가치

구분	핵심가치	주요 목표
1. K	Knowledge (지식)	지식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지향의 플랫폼 견인
2. O	Openness (개방성)	국내외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투명한 원조를 통해 신뢰의 리더십 발휘
3. I	Innovation (혁신)	혁신지향적 개발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선도
4. C	Collaboration (협업)	소통 · 참여 ·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파트너십 지향
5. A	Accountability (책임성)	KOICA의 의사결정,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 지향

출처: KOICA (2015a)

다. 추진전략

KOICA는 정부의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국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총 4개의 전략목표 및 12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KOICA 중장기전략의 추진방향은 크게 KOICA 각 분야별 KOICA 차원의 SDGs 주류화 작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지향적 개발협력'과 이러한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주요 이행메커니즘으로서 SDGs의 이행수단 및 글로벌파트너십 등을 포함하는 '참여지향적 개발협

력', '혁신지향적 개발협력', '스마트경영 전개' 로 구성되어 있다.

1) 성과지향적 개발협력

KOICA는 국제개발의제를 중심으로 한 성과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관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는 필요성에 절감하고 사업수행체계 자체의 혁신을 통하여 개발협력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는 Post-2015 브랜드사업 수행, 통합성과 측정 및 관리체계 구축, 지구촌 지속가능 개발 촉진 등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Post-2015 브랜드 사업 수행: Post-2015 브랜드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업무효율성 증대 및 Post-2015 브랜드 중심의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KOICA 사업의 목표를 국제개발목표와 일치(align)시키고자 기존 사업을 Post-2015 목표 등을 기준으로 통합하고, 원조예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단위 사업규모를 확대, 브랜드사업 모듈정립, 결과중심의 사업기획 및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KOICA 5대 중점분야?3개 범분야에 대한 분야별 중기전략에 Post-2015 브랜드화를 추진 중이며, 2016년 6월까지 전 분야에 대한 전략수립 완료 예정이다.

  * 5대 중점분야: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 3대 범분야: 젠더, 기후변화, 과학기술혁신

> * **(브랜드 사업 정의)** ① 국제개발의제(post-2015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② 수혜자 중심의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고, ③ 개발목표별로 정렬되어 다양한 사업모듈과 형태(modality)로 구성된 KOICA의 대표사업(flagship program)으로 추진

- 통합성과 측정 및 관리체계 구축: 기관의 성과목표를 객관적 · 정량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되,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와 기관-사업-직원의 성과목표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하여 SDGs에 대한 기여도를 대내외에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제시로 예산의 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한다.
- 지구촌 지속가능 개발 촉진: Post-2015 브랜드 사업 이외에 다양한 국내외 개발관련 의제를 실천함으로써 개발협력 성과 제고에 기여한다. KOICA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유엔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공식 채택보다 앞선 시점에서, KOICA의 Post-2015 브랜드사업이 도입되기 전의 과도기적 체제에서 KOICA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협력의제를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참여지향적 개발협력

아울러 KOICA는 우량 파트너 육성 및 인재 양성, 참여기회 다각화를 통해 수원국, 사업시행기관, 개발협력 인재 등 다양한 파트너들의 전문성을 결집하는 방식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성과 확대라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주요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수원국과의 협력강화 및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도 및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우수성과자원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
- KOICA 파트너 참여강화 체계 구축: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우량파트너의 참여 참대를 위한 제도 인프라 확립을 통해 우량 파트너 및 인재의 전문성 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파트너 역량 강화 및 참여 프로그램 개선: 우량 파트너 육성 추진, 사업참여 기회 다각화 추진, 개발협력 산업 인재 육성을 통해 개발협력사업 품질 및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3) 혁신지향적 개발협력

KOICA는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등을 개발협력사업에 접목시키고, 개발협력플랫폼으로서 신규사업 및 전문영역을 발굴하여 신규가치를 창출시키고자 하는 혁신지향적 개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 혁신적 가치창조 시스템 구축: 다양한 IT기반 및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혁신활동을 촉진하여 개발협력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하고자 한다.
- 혁신적 파트너십 사업 추진: △외부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 적정기술을 협력사업에 접목, △개발협력사업의 가치 및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
- 개발협력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 추진: △컨설팅형 업무의 공식화 및 기관성과 반영, △개발협력 비즈니스 관련 컨설팅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등 풀랫폼 기관으로서 신성장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 가속화하고자 한다.

4) 스마트경영 전개

또한 KOICA는 조직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다양한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스마튼 경영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주요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전략 경영 강화) 조직, 인사, 재무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전략과제 실행기반 구축하고자 한다.
- (청렴 · 윤리경영 강화) 청렴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및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사회적 신뢰기반 구축,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한다.
- (일하기 좋은 직장 실현) 내부 소통 강화 및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업무환경 및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IV. KOICA 중장기 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1. KOICA 중장기전략 3대 핵심과제 및 5대 브랜드 프로그램

가. KOICA 중장기 전략 3대 핵심과제

KOICA는 현재 KOICA 중장기전략 내에서 SDGs 기여를 위한 KOICA의 주요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KOICA의 중장기전략 3대 핵심과제로는 ① SDGs 이행전략 수립, ② Post-2015 브랜드 사업 추진, ③ SDGs와 연계한 통합성과관리 체계구축 등으로, 이는 KOICA 중장기전략상 '성과지향적 개발협력' 내 각 전략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Post-2015 브랜드사업화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KOICA가 5대 중점분야 및 3개 범분야에 대한 분야별 중기전략 수립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6월 최종완료될 예정이다.

나. KOICA 5대 브랜드 프로그램

아울러 앞선 중장기전략 3대 핵심과제와 함께 SDGs 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KOICA는 각 테마별 브랜드 프로그램을 발족하였다. 이에 따라 KOICA의 중장기전략 3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한 5대 브랜드 프로그램의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 〈Box 3〉과 같다.

〈Box 3〉 SDGs KOICA 5대 브랜드 프로그램

①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Saemaul Undong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

②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③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④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for Better Life)

⑤ 안전한 물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Safe Water & Clean Energy for Climate Change Response)

출처: KOICA (2015b)

SDGs KOICA 5대 브랜드 프로그램 중 첫 번째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Saemaul Undong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이다. 본 프로그램은 단기간 내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농촌발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 모델로서 개도국 및 국제사회는 새마을운동 모델을 빈곤퇴치 및 농촌개발의 좋은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중점지원 분야는 크게 4가지로, 그 세부사항은 다음 〈Box 4〉와 같다.

〈Box 4〉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 중점 지원분야

① 기업과의 포용적 파트너십 통한 새마을운동의 확산

– 우리 기업과의 전략적인 새마을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의 농촌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민간기업의 비즈니스적 수요)를 연계한 사회투자형 사업으로 협력 모델을 구축)

②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개도국 주민의 소득 증대

– 농업의 가치치슬 강화를 통해 개도국 마을을 하나의 Business Unit화하는 전략으로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기계 교육 · 훈련,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수확 후 관리, 가공 및 유통, 마케팅 강화를 목표

③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개도국 농촌에 창조경제 구현

– 개도국 현지에 맞는 적정기술의 활용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외부세계에 적응 가능한 신기술과 재생에너지를 사업요소로 적극 활용

④ 국제사회 주요 개발기관과 협업을 통한 새마을운동 현대화

– 스마트 새마을운동의 개발협력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국제NGO와 협업하고, Millenium Promise, WFP, UNDP, OECD 등 스마트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여기관들과 공동사업 추진, 공동 연구 및 사업평가 진행

출처: KOICA (2015b)

두 번째 브랜드 프로그램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이다. 본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여성청소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 건강한 보건 환경 조성, 미래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 리더 양성, 양성평등사회 실현, 사회경제적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를 목표로 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을 포함한 10대 여성청소년(10-20세)을 수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점지원분야로는 크게 교육(Girls' Right to Education), 보건(Girls' Right to Health), 직업(Girls' Right to Profession) 등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Box 5〉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브랜드 프로그램 중점 지원 분야

① **교육(Girls' Right to Education)**
- 읽기, 쓰기, 과학, 수학 등 학습성과 제고
- 취약계층, 재난 및 분쟁 지역 여성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② **보건(Girls' Right to Health)**
- 학교 내 청소년 보건교육 강화 및 학교위생환경 구축
- 지역사회 및 의료시설 기반 여성청소년 친화적 성생식보건 서비스강 화

③ **직업(Girls' Right to Profession)**
- ICT, 회계 등 공통역량 교육 및 기술 훈련으로 직업역량 강화
- 지역사회 여성인재 양성으로 사회적, 경제적 자립도 제고

출처: KOICA (2015b)

세 번째 브랜드 프로그램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로서, 본 프로그램은 에볼라, SARS 등 신종 감염병을 신속히 발견, 보고하고 국제 보건안보(GHSA) 분야 지원을 통해 질병전파를 조기에 차단, 개도국발전 및 국제안보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브랜드 프로그램의 중점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Box 6〉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브랜드 프로그램 중점 지원 분야

① **예방 영역:** GHSA 하부 계획 중 예방접종(Immunization) 분야 지원
- 감염병 예방백신 생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

② **탐지 영역:** 하부 계획 중 △국가실험실체계 강화 및 △보건안보 인력역량강화 지원
- 개도국 보건 거버넌스의 자체 역량 강화 및 효과지속성 제고 기대

출처: KOICA (2015b)

다음으로, 네 번째 SDGs KOICA 브랜드 프로그램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for Better Life)'이다. 이는 과학 · 기술 · 혁신을 통해 사

회경제 서비스분야에서 접근성을 높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여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혁신 관련 본 브랜드 프로그램의 중점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Box 7〉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브랜드 프로그램 중점 지원 분야

① **(정책컨설팅)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 제도 수립 및 집행 역량 강화**
- 산업, 대학, 연구원, 클러스터 등 R&D 혁신역량 강화 지원

② **(과학 · 기술 교육) 과학교육, 기술교육, 공학교육 분야 고급 과학 기술인력 양성**
- 기초 과학기술 교육 강화 및 산업분야 기술인력(직훈원 및 폴리텍) 양성
  벤처기업가형 및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인력 교육과정 개설

③ **(연구개발 지원) 사회개발 · 산업 수요에 맞춘 R&D 기관의 활동 및 역량 강화**
- ▲국내-개도국 연구기관간 양자협력, ▲국내-개도국-선진공여국 연구기관 간 삼자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혁신 활동 지원

④ **(기업 등 민간영역) 기업, 민간단체 등 민간의 기술혁신 · 사업화 역량 강화**
- 「창의혁신 개발센터」 건립 · 지원을 통한 창업 서비스 제공
- 개도국 주민 대상 비즈니스 기회 창출 프로그램 운영
- 기술기반 기업과의 민관협력 프로젝트 강화

⑤ **범분야(cross-cutting)에 걸쳐 과학기술 기반 솔루션 적용 확대**
- 보건, 교육, 농업, 공공행정, 환경 등 분야별 사업에 과학기술 적극 활용

출처: KOICA (2015b)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브랜드 프로그램은 '안전한 물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Safe Water & Clean Energy for Climate Change Response)'이다. 본 브랜드 프로그램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 본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및 생명유지와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경감, 미래역량 강화 활동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Box 8〉 '안전한 물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브랜드 프로그램 중점 지원 분야

① **수자원 분야의 통합적인 접근 및 지원**
- 식량안보확보를 위한 농촌지역의 수자원시설 확충, 지역사회 발전을 고려한 농어촌개발 사업 및 새마을 운동 사업 지원
-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을 위한 인프라 환경 구축, 보건위생인식 및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 강화
-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물관련 재해대응을 통한 회복력 증대
- 물 분야에 취약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물 안보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② **청정에너지의 보급 및 에너지 효율 향상**
-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연료화 등 시설 확충 및 제도 구축
- 에너지 저장장치(ESS), 고효율 조명(LED)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시설 확충

출처: KOICA (2015b)

따라서 KOICA 중장기전략 상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은 크게 중장기전략 전체 차원에서의 전략수립과 이행메커니즘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SDGs 기여를 위한 중장기전략 3대 핵심과제 및 5대 브랜드 프로그램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참여적, 혁신적 개발협력방식과 스마트 경영방식 등 다양한 이행메커니즘의 적절한 적용을 통하여 본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KOICA의 사업운영 방향이 SDGs가 목표하는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한다(〈표 4〉참조).

〈표 4〉 SDGs 달성을 위한 KOICA 중장기전략 구성

추진방향	성과 지향적 개발협력	참여 지향적 개발협력	혁신 지향적 개발협력	스마트 경영 전개
전략목표	사업수행체계 혁신을 통한 개발협력 성과창출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가치창출	창의적 사업수행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효율적 조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전략과제	지구촌 지속가능개발촉진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개발협력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추진	일하기 좋은 직장(GWP) 구축
	Post-2015 브랜드 사업수행	파트너 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다각화	혁신적 파트너십 사업추진	청렴 · 윤리경영 강화
	통합성과 측정 및 관리 체계구축	파트너 참여강화 기반구축	혁신적 가치창조 시스템 구축	전략경영 강화
SDGs 기여	• KOICA 중장기전략 3대 핵심과제 • 5대 브랜드 프로그램(전략)	이행메커니즘		

출처: KOICA (2015a) 재구성

2. 이행 용이성에 따른 SDGs target 분류

기존 MDGs에 비해 새로운 SDGs 체제하에서는 국제사회가 달성해야할 목표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라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한 현재, KOICA는 SDGs의 세부목표 중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KOICA 전략 및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작점으로, KOICA는 SDGs를 바탕으로 ① 공여국의 국내 이행부문 및 ②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ODA사업, ③ 수원국, 공여국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요하는 목표들을 분류함으로써 각 준위별로 이행가능한 목표체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공여국의 ODA활동에 있어 실제 어떤 세부목표(targets)들이 주로 관련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세부목표들을 다시 ODA활동의 이행 용이성 정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이행가능한 세부목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행주체에 따른 SDGs target 분류(안)

먼저 '선진국 국내', '선진국 ODA 개발협력',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준위를 나누어 각 카테고리별로 이행가능한 SDGs 세부목표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표 5〉 참조). 본 분류작업 자체에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되었다는 점은 사실이나, SDGs 목표체계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분류작업이 국내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이행주체에 따른 SDGs target 분류체계(안)

목표	선진국 국내	선진국 개발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1. 빈곤	1.2/1.3	1.1/1.2/1.3/1.4/1.5/1.a/1.b	1.a/1.b
목표 2. 농업	2.b	2.1/2.2/2.3/2.4/2.5	2.5/2.a/2.b/2.c
목표 3. 보건	3.4/3.5/3.6/3.9	3.1/3.2/3.3/3.4/3.7/3.8/ 3.9/3.b/3.c/3.d	3.a
목표 4. 교육	4.7	4.1/4.2/4.3/4.4/4.5/4.6/ 4.7/4.a/4.b/4.c	
목표 5. 젠더	5.1/5.2/5.4/5.5/5.b/5.c	5.1/5.2/5.3/5.4/5.5/5.6/5.a/5.b/5.c	
목표 6. 식수/위생	6.3/6.4/6.5/6.6	6.1/6.2/6.4/6.6/6.b	6.5/6.a
목표 7. 에너지	7.2/7.3/7.a	7.1/7.2/7.3/7.b	7.a
목표 8. 경제/고용	8.1/8.4/8.5/8.6/8.8/8.9 /8.b	8.1/8.2/8.3/8.7/8.10/8.a	

목표 9. 인프라	9.2/9.4/9.5/9.b	9.1/9.3/9.a/9.c	
목표 10. 불평등	10.1/10.2/10.3/10.4/10.5/10.7/10.c	10.b	10.6/10.7/10.a
목표 11. 도시	11.2/11.4/11.5/11.6/11.7/11.a/11.b	11.1/11.2/11.3/11.c	
목표 12. 생산/소비	목표 12 전체	12.1	
목표 13. 기후변화	목표 13 전체	13.b	13.a
목표 14. 해양환경	목표 14 전체	14.7/14.a	14.c
목표 15. 육상환경	목표 15 전체		15.3/15.a/15.c
목표 16. 거버넌스	목표 16 전체 (16.4/16.5/16.9)		16.8
목표 17. 이행수단	17.3/17.7(선진국–개도국 상호합의)/17.14/17.15	17.1/17.2/17.4/17.5/17.8/17.9/17.18	17.6/17.8/17.9/17.10/17.11/17.12/17.13/17.15/17.16/17.17/17.19

출처: 저자작성

〈Box 9〉 이행주체에 따른 SDGs target 분류 기준

- **선진국 국내:** SDGs의 기본 정신이 '보편성'임을 감안해야 하나, 선진국 (한국)의 국내적 이행과제가 더 우선되거나, 개발도상국의 이행역량이 현저히 낮아 이행하기 어려운 세부목표
- **선진국 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국내이행과제이면서 ODA 또는 기타 투자를 통해 선진국 개발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부목표
-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협력 또는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였거나, 국제조약의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목표

출처: 저자작성

위의 〈표 5〉는 〈Box 9〉의 분류기준에 따라 이행주체별로 SDGs target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SDGs 목표 분류를 보면, 빈곤, 농업 등을 비롯한 앞단의 목표들의 경우 MDGs를 계승 및 확대한 사안들로서, 본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이 이미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육상환경, 거버넌스 등 뒷단의 목표들의 경우, 기존 MDGs의 반성을 통해 새로이 등장한 목표들로서, 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새로운 이행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선진국의 경우, 국내적으로 SDGs를 이행하고자 할 때 이전 보다 많은 이행과제가 발생하게 되며, ODA 사업활동에서는 비교적 기존의 이행방안 및 경험을 바탕으로 운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선진국 국내 및 선진국 ODA 사업 준위에서의 SDGs 이행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개발재원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다 활용함으로써 보완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나. ODA사업 이행 용이성에 따른 SDGs 목표 분류

위에서의 이행주체별 SDGs target 분류에서 개발도상국의 주요 국내이행과제이자 KOICA가 ODA 및 기타 투자를 통해 실제로 사업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선진국 개발협력' 부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KOICA가 ODA 사업을 이행하기에 용이한 세부목표들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본 분류작업 또한 SDGs 세부목표의 전략화 과정에서 KOICA 뿐만 아니라 기타 ODA 시행기관들 역시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자가 자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 〈표 6〉에서는 〈box 10〉에서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진국 개발협력 사업 부문을 SDGs 이행과업별로 분류하여 해당 target을 정리하였다.

〈표 6〉 선진국 개발협력 해당 SDGs 이행과업별 target 분류(안)[8)]

목표	이행과업	중장기목표 과업	도전과업
목표 1. 빈곤	1.1/1.2/1.3/1.4	1.5/1.a/1.b	
목표 2. 농업	2.1/2.2/2.3/2.4/2.5		
목표 3. 보건	3.1/3.2/3.3/3.4/3.7/3.8 3.a/3.b/3.c/3.d		
목표 4. 교육	4.1/4.2/4.3/4.4/4.5/4.6/ 4.7/4.a/4.b/4.c		
목표 5. 젠더	5.1/5.2/5.3/5.4/5.5/5.6/5. a/5.b/5.c		
목표 6. 식수/위생	6.1/6.2/6.4/6.6/6.b		
목표 7.에너지	7.1/7.2/7.3/7.b		
목표 8. 경제/고용	8.1/8.2/8.3/8.7/8.10/8.a		

8) [10.c 2030년까지 이주 노동자의 송금 수수료 3% 이내로 경감 및 5% 이상의 송금 코리더 철폐] 등과 같이 KOICA가 이행할 수 없는 과제들은 제외하였다.

목표 9.인프라	9.5	9.1/9.4/9.a/9.c	9.3
목표 10.불평등			10.b
목표 11. 도시	11.5/11.6	11.1/11.2/11.3/11.c	
목표 12. 생산/소비	12.1/12.3/12.a		
목표 13. 기후변화	13.b		
목표 14. 해양환경		목표 14 전체	
목표 15. 육상환경		목표 15 전체	
목표 16. 거버넌스	16.6	16.5	
목표 17. 이행수단	17.1/17.6/17.8/17.9/17.18 /17.19		17.3/17.16/17.17

출처: 저자작성

〈Box 10〉 선진국 개발협력 해당 SDGs 이행과업별 target 분류 기준

- **이행과업:** MDGs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즉시 이행이 가능한 세부목표
- **중장기 목표 과업:** 현재 이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유상원조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인프라지원 또는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프로그램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음
- **도전과제:** 현재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세부목표임

출처: 저자작성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각 세부목표들간에는 실제 KOICA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 용이성이 명확치 않아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부분에서는 우선 아래 표와 같이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세부목표들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볼 때 먼저 이행과업 부분에는 교육, 보건 등 KOICA의 주요 전략분야가 해당된다. 현재 KOICA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5대 주요 이슈 및 범분야 이슈의 경우, 현재 기존의 MDGs 이행과정에서의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SDGs 세부목표의 즉시 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 과업에는 SDG 14와 15 등 자연자원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영역을 KOICA의 과업에 포함하여 이행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도전과제의 경우는 SDG 17.3(다양한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동원)과 같이, OECD DAC의 TOSSD 논의와 더불어 2015년 이후 개발협력에 있어 주요한 이슈이나 현재 KOICA의 법제상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한 SDG 17.2(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약정한 ODA/GNI 0.7%를 달성하는 등 ODA 활동을 완수해야하며, 이 중 0.15-0.2%는 최빈국에 제공), 17.4(부채조달, 채무탕감, 부채조정 등을 위한 공조정책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부채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고 부채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고채무국의 외채문제 고려), 17.14(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향상) 등과 같이 KOICA 만의 과제가 아니라 개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들도 해당된다.

3. 세부전략과 이행메커니즘의 조화방안

이렇듯 KOICA는 중장기 전략 내에 전략과 이행메커니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SDGs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OICA 중장기 전략 내에 각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및 총 90건에 다르는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주 담당 및 협업을 통해 실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KOICA 중장기 전략 전체에 대한 SDGs 주류화를 이룸으로써 궁극적으로 KOICA 5대 브랜드 프로그램의 각 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한다.

KOICA의 5대 브랜드 프로그램은 KOICA의 중장기전략 추진과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이니셔티브로, 각 분야별 중기전략을 비롯한 KOICA 3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본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었으나,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기타 다양한 이행메커니즘들의 활발한 운영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KOICA는 중장기 전략 내에 전략과 이행메커니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SDGs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OICA 중장기 전략 내에 각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및 총 90건에 다다르는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주 담당 및 협업을 통해 실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KOICA는 중장기전략 내에 수립 중인 각 분야별 중기 전략과 이행메커니즘들간의 상호긴밀한 접목을 통해 SDGs의 주류화를 확산시킴으로써 5대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감으로써 KOICA는 향후 SDGs 달성에 기여해가고자 한다.

V. 결론: KOICA 중장기 전략 기대효과 및 추가 논의 필요성

Post-2015 시대를 이끌어갈 SDGs는 보편성, 포용성,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면서 현재 지구촌 전체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발전,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이라는 조금은 상충되는 요소들간의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각자 보다 효과적인 SDGs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OICA는 새로운 SDGs 체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종합적인 'KOICA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전략 내 KOICA 5대 이니셔티브를 발촉하였다. 아울러 중장기 전략 내 내년 2016년 6월까지 최종 완료될 예정인 5대 중점분야 및 3대 범분야 각각에 대한 중기 전략 수립을 추진 중인 현재, KOICA는 기관 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 전략상의 다양한 이행메커니즘에 대한 SDGs 주류화 작업을 함으로써, 향후 5대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행수단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본래 SDG는 범정부적인 task로서, 국내 이행 현황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각 관련기관들의 공동이행과 모니터링 및 보고를 진행해야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을 일시에 수립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SDGs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위 차원에서의 SDGs 타겟 및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상위 단계에서 SDGs 이행 가능 부분을 가늠하는 작업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 원조실행기관인 KOICA는 이러한 작업의 시작점으로서, 최근 SDGs 타겟 및 지표들 중 KOICA 기관차원에서 이행 가능 부분을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내년 2016년 3월 SDGs 최종 지표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오는 KOICA의 주요 관련 타겟 및 지표분석을 완료하고, 오는 6월 각 분야별 중기전략까지 완성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KOICA는 내부 각 부처들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KOICA를 포함한 국내 차원에서의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될 때만이 KOICA가 진정한 국제개발 플랫폼으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KOICA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관계 부처, NGO, 학계,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때에 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KOICA가 보다 다양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한 양질의 원조를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의 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국내의 많은 관계자들의 KOICA 내 SDGs 논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및 지식,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KOICA가 보다 효과적으로 SDGs전략을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향후 KOICA가 '지구촌 행복시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KOICA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자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지현. 2014.12.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1: SDGs 초안분석”. 개발과 이슈 제1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박수영, 오수현. 2015.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함의 분석”. 개발과 이슈 제24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2015.09. “유엔개발정상회의(2015.9.25~27)”. 서울: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015a. “KOICA 중장기 전략” 내부문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5b. “2016년 KOICA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안)” 내부문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UN. 2015a. “Outcome document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ddis Ababa Action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http://www.un.org/africarenewal/sites/www.un.org.africarenewal/files/N1521991.pdf

_____. 2015b.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1&Lang=E

_____. 2015c.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New York: United Nations,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l09r01.pdf

KOICA 공공행정 분야 SDGs 대응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김은주[1], 권혁주[2]

목 차

I. 서론: SDGs에서 왜 거버넌스 목표를 주목해야 하는가?

II. 거버넌스 분야 도전과제: 국제 논의동향 및 개도국의 과제
1. 거버넌스 분야 국제 논의동향과 그 함의
2.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과제

III. KOICA의 거버넌스 분야 기존 원조활동에 대한 분석
1. KOICA 전체예산 대비 공공행정 분야 비중
2. 사업유형별 구분
3. 지역별, 소득수준별 원조 배분

IV. 공공행정(거버넌스) 분야 지향점: 중점분야 및 접근방법에 대한 제언
1. 중점분야
2. 접근방법

V. 결론

1) KOICA 공공행정팀 전문관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 서론: SDGs에서 왜 거버넌스 목표를 주목해야 하는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2015년 만료함에 따라 세계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지난 9월 말 UN 총회를 통해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의 모든 나라는 SDGs의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설정된 SDGs는 지난 15년간 MDGs 추진하면서도 제기되었던 정책적 한계와 과제를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과 함께 새로운 시도들이 내포되어 있다.

먼저 SDGs는 MDGs에서 빠져 있던 지구환경 보호에 대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MDGs에서 강조되었던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목표들, 즉 빈곤퇴치, 양성평등, 교육 및 보건 등을 큰 줄기로 단순화하면서도 국가 간, 국가 내 계층 간 불평등, 분쟁과 갈등의 해소와 법적 포용성 등을 강조하는 목표들을 포함하여 있다.

그런데 SDGs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논리가 SDGs체제 내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SDG 16번과 그에 대한 세부목표(target)에는 각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건한 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state's capacity)'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여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SDGs의 정책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당사자 추진하는 공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정부 중심의 위계적인 국정운영에 대비하여 정치인, 관료 등의 공적 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당사자, 시민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사회기관 등이 참여하여 공공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추진하는 활동을 거버넌스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다 정교하게 정의한다면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라 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는 단순히 정치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 행정, 경제 등 공공행정의 대부분의 영역을 포함한다.

여기서 MDGs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와 세계은행(World Bank)을 중심으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강조되어 왔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굿 거버넌스는 구체적으로 책임성, 투명성, 법치주의 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굿 거버넌스의 이러한 내용들이 개발도상국의 현실에서 적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Post-2015 논의 과정에서도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개발의 목표이자 다른 목표들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에 의해 합의된 사실이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원조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거버넌스가 강조되었고(Mosley, 1986; Boone, 1996; World Bank, 1998; Burnside and Dollar, 2000; Collier and Dollar, 2002), MDG 1번 목표인 빈곤율 감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거버넌스라는 점을 주목하였다(UN Millennuim Project, 2005). 그런데 정작 MDGs로는 포함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ost-2015 논의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반드시 새로운 개발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발의 문제들이 기존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국정운영이 민주적 측면을 강조했던 굿 거버넌스의 개념을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능력과 정치적, 행정, 법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강조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UNDP, 2014). 이러한 논의 끝에 마침내 SDGs 중 하나로 '거버넌스 개선과 제도 구축을 통해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16번째 목표로 포함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개발목표의 등장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추어 KOICA는 거버넌스 분야에서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까? 새로운 전략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먼저 거버넌스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동향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어서 그동안 KOICA의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전략이 이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비판적으로 탐색해본다. 끝으로 SDGs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KOICA 거버넌스 분야가 집중해야 할 중점분야를 제안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최근 거버넌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정책행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KOICA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언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거버넌스 분야 도전과제: 국제 논의동향 및 개도국의 과제

1. 거버넌스 분야 국제 논의동향과 그 함의

거버넌스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원조기관들이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슈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최근 논의가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지를 함께 살

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 내부의 자원동원(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2009 경제위기 이후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규모는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SDGs 달성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서 역설적이게도 ODA 영향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ODA 보다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개도국 개발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또한 국내재원동원(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을 통해서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재원 문제는 MDGs 시대에도 2002년 몬테레이 선언 이후 계속되어 강조되어 왔고 2011년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의 주요 합의사항 중 하나였다. 그런데 SDGs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논의한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개발재원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 내부의 자원동원이 전보다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Moore, 2015).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인 Addis Tax Initiative(ATI)에 가입하여 개도국 조세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2배로 지원을 늘릴 것을 약속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 KOICA의 거버넌스 분야 원조의 지향점으로 개발도상국의 재정개혁, 조세행정개혁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안보(security) 이슈와 분쟁 · 취약국(Fragile and Conflict Affected State, FCAS)에 적절한 개발협력 정책과 협력 방안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개도국들이 MDGs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안타깝게도 취약국들의 경우 대부분 목표달성율이 낮고,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Greenhill et al, 2015). 취약국의 평화구축과 국가재건(Peace building and State building) 과제는 2000년 9.11 테러 이후 2015년 11월 파리 테러 공격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책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국제기구와 양자 공여기관들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취약국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개발협력의 정의 자체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협력과 안보(security) 이슈를 결합하여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개발협력 내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인 것이다.

또한 최근 정국이 불안정해진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규모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며 심각한 국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긴급구호를 통한 대응을 넘어서서 취약국을 안정화하여 난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및 갈등, 그리고 취약국 문제에 대응 방안으로서 단기적인 군사적 대응이나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취약국이 기본적인 국가 기능을 회복하여 복원력있는 국가(resilient state)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다른 공여기관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한국 또한 2011년 제 4차 부산 고위급회담에서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을 채택하고 취약국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외교부 차원에서 부산에서 발표된 취약국 뉴딜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국의 지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KOICA 역시 2015년부터 별도의 취약국 예산을 신설하여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취약국의 거버넌스 복원을 위한 과제가 새로운 거버넌스 전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도국의 민주화와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버넌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양자기관들과 국제기구들이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거버넌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으로 인한 빈곤,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것이 선진국의 안보 이슈와 연결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정부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결국은 불안정과 분열, 폭력적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억압적인 정치체제나 종교와 민족간 갈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 내부의 구조적인 실업, 고용불안정 등이 만연하여 빈곤과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사회불안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SDGs에서도 취약계층을 포용하려는 노력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발전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 청년, 장애인, HIV/AIDS, 노인, 원주민 · 소수민족, 난민, 강제이주민 등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다른 공여기관들의 전략문건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젊은 세대(youth)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job creation) 문제이다. 청년들이 구조적인 실업상태에서 벗어나서 경제활동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정치 · 안보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의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전략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청년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과제

개발도상국들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각 국가별로 역사적, 정치 · 경제 구조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직면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거버넌스 분야의 문제점을 단순화시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KOICA의 협력대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과 행정의 발전 수준에 적합한 거버넌스 개선 접근방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빈국이나 도서 및 내륙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행정 및 경제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분쟁과 갈등 더 나아가 내전 등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행정체제가 붕괴된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에 필요한 체제가 매우 취약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이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군림하면서 부정과 부패 등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한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재정확보를 통해 국가의 기본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분쟁과 내전을 겪는 나라의 경우에는 갈등을 봉합하고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우리의 개발협력의 잠재력과 전략적 고려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개발협력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 가운데 일정한 소득수준과 사회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기본적인 행정체제 및 경제운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국가들은 행정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어느 정도 효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 행정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의 실상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거나, 효율성과 효과성이 매우 낮은 채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거버넌스 제도를 혁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거버넌스 과제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버넌스의 취약성은 실제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행정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그에 따른 좋은 정책도 실제 현장에서 집행이 되어야 그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으며,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지방행정 체제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은 위와 같이 발전단계별로 차이가 있는 개발도상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 KOICA의 거버넌스 분야 기존 원조활동에 대한 분석

KOICA 거버넌스 분야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현재 원조활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KOICA는 협력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인적 역량과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공행정을 5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KOICA가 공공행정 분야에 지원한 원조규모, 사업유형, 원조금액의 지역 및 소득수준 배분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겠다.

1. KOICA 전체예산 대비 공공행정 분야 비중

전체 KOICA 원조지원액 중에서 공공행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지원액 기준으로 약 16% 이다. 5년 단위 평균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설립초기에 비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지원, 2007~8년 아프가니스탄 지원 등으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1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기후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공행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OECD/DAC 국가들의 거버넌스 분야 원조활동에 대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2012년 통계 기준으로 DAC 가입국들은 연간 약 15~17%를 거버넌스 분야에 지출하였고, 다른 분야 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거버넌스 분야와 연계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평균 약 20%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OECD, 2014). 이에 비춰볼 때, KOICA의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액 비중은 DAC 기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배분에서도 15%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공공행정 분야 지원이 KOICA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간	'91–'95 5년 평균	'96–'00 5년 평균	'01–'05 5년 평균	'06–'10 5년 평균	'11–'14 5년 평균
전체 예산 중 공공행정분야 비중(%)	24%	16%	24%	23%	16%

출처: KOIC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

2. 사업유형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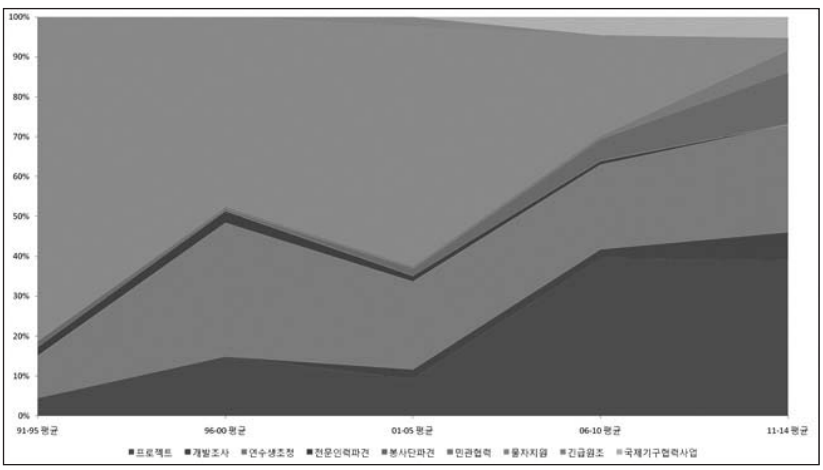
KOICA가 집행하고 있는 원조사업의 유형은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WFK, 중장기자문단),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유형별로 5년 단위로 평균을 구하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설립 초기에 비해서 최근에는 사업유형이 다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각화된 사업유형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2015년 5년 평균 자료를 보면 프로젝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등의 순서로 사업이 집행되었다.

프로젝트 사업은 기자재지원,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정책컨설팅 등 사업요소를 적절히 배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지원사업인데, 최근 KOICA는 프로젝트 유형의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이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연수생 초청 사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4년 자료의 경우 공공행정분야 예산 중 26%가 연수생초청 사업이었는데, 교육 및 보건 분야의 경우 약 10% 내외가 연수생 초청에 투입된다는 것에 비춰볼 때, 연수생 초청 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KOICA는 연수생 초청 사업 제도개선을 통해서 초청연수만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프로젝트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단년도 연수보다는 3여년 단위의 중장기 연수로 추진

〈그림 1〉 사업유형별 공공행정 분야 지원 현황



출처: KOIC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개선방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의 한 유형인 연수사업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별, 소득수준별 원조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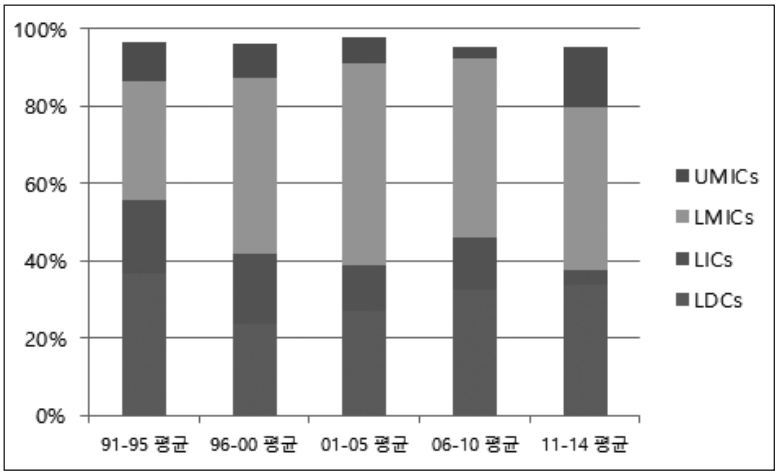
공공행정분야 원조가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 및 CIS 순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가 집중되어 있는데, 2010년의 경우 74%가 아시아 지역에 지원되었고, 2011년 54%, 2012년 47%, 2013년 43%, 2014년 40%가 아시아지역에 지원되었다. 최근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남미, 중동/CIS 지역에서 공공행정분야의 원조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교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함으로써 초래되는 기회비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아시아 집중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행정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에 있는데 협력국들의 개발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별로 구분해 본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배분이 적절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행정분야 ODA 지원을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초기단계인 90년대에는 저개발국가(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와 저중소득국가(LMICs,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분야에 대한 원조사업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저개발국가(LDCs, LICs)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거나 정체중인 반면 저중소득국가(LMICs)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그림 2〉 참조).

그런데 최근 4년간(2011-2014)의 추이를 보면 고중소득국가(UMICs,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에 대한 지원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 반면 중소득국가, 즉 저중소득국가와 고중소득국가에 대한 지원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2011-2014의 4개년 평균값으로 볼 때, LDCs에 34%, LICs에 4%, LMICs에 42%, UMICs에 16%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OECD/DAC 가입국들의 평균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저개발국가(LICs)에 41%, 중소득국가 중 LMICs에 23%, UMIC에 14%를, 미구분(unallocated) 22% 순서로 지원하였다.

〈그림 2〉 소득수준별 공공행정 분야 지원 현황



*주: Non-ODA 실적을 제외하고 ODA 실적을 기준으로 한 통계임

저개발국가보다 중소득국가 지원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저개발국가를 졸업하고 중소득국가로 진입한 많은 나라들에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빈곤계층으로 남아 있다는 연구자료에 비춰 생각해 볼 때(ODI, 2015), 중소득 국가 중 저중소득 국가(LMICs)에 대한 비중은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중소득국가(UMICs)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이들 국가들에서 출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V. 공공행정(거버넌스) 분야 지향점: 중점분야 및 접근방법에 대한 제언

1. 중점분야

이하에서는 SDGs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KOICA의 거버넌스 분야 전략의 중점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도상국 정부 효과성(effectiveness)을 높여주는 것을 중점 목표로 추진할 수 있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SDGs 16번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책임성 있고(accountable), 효과적이고(effective), 그리고 포용성을 갖춘(inclusive) 제도 구축' 인데, 이 중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행정부의 효과성을 높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달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수용하여 민주화를 이루어내었다는 것도 강점이다. 또한 산업화 이전에 1950년대 토지개혁을 이루어 평등한 사회구조의 근간을 구축했으며, 산업화 기간 동안 1960-70년대에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등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들이 정비되어 있어서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로 전환이 가능했다. 이러한 경험은 단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해야 하는 SDGs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은 공공분야에 우수한 인력들이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한 전형적인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 발전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 모델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기획역량을 통해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산업, 무역, 금융, 과학기술 정책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면서 성장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행정부가 발전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공공부문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지난 15년간 KOICA가 추진했던 전자정부 구축 사업 역시 정부의 서비스 기능별로 행정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해 행정부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 사업형태 중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현업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공여기관들의 기술협력 사업들은 주로 전문가가 개도국 행정부 기관에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제도수립과 정책집행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 현직 공무원 혹은 퇴직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협력 방식을 도입한다면 협력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 스스로 재원을 찾아 낼 수 있도록 조세(Taxation)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Addis Tax Initiative 가입국으로서 KOICA는 조세분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기존의 조세분야 사업은 관세시스템 현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연수생 초청사업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중기전략 하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전자세정(e-tax)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여 개도국의 조세청(Revenue Authority)과 조세행정을 현대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 이른바 BEPS Initiative(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발맞추는 사업으로서 금융정보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도국 내 불법자금을 발굴하여 세원을 확보하여 개도국 국내재원동원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조세역량 강화사업은 단지 개발도상국의 조세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조세야말로 국민국가 건설의 기본이고 책임성, 투명성, 참여와 같이 거버넌스의 주요 원칙들이 동시에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선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만 한다(Fjeldstad, 2014).

셋째, 거버넌스 원칙을 다른 중점분야로 확대하고, 사업수행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를 주류화(mainstreaming governance)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흥공여국들이 등장하여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고 있어 원조구조(aid architecture)가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KOICA는 무상원조기관이고, 국제금융기구들에 비해 작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없지만, 한국이 가진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경험을 개발협력의 컨텐츠로 활용하여 각 분야에서 제도개선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요소로 사업에 반영한다면 KOICA의 보완적 역할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를 들어, 최근 KOICA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한 경험을 활용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사업의 경우에도 농촌개발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다른 중점분야에서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프로젝트의 사업구성요소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한 원조를 확대하고, 특히 예산지원방식(Budget support)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수원국 정부의 역량 자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도국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접근방법

거버넌스 분야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KOICA에서 전략우선순위 도출을 위해서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공공부문 인적역량 제고, 전자정부 구축,

지방행정 및 조세행정 구축 등의 분야가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한 정책의제이고 동시에 한국도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음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에서 분쟁과 갈등을 정치적으로 봉합하고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내는 역할, 내전 상태에서 군사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안보를 구축하는 역할 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거버넌스 사업에서 주류를 이루어 왔던 인적역량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수사업을 넘어서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을 위한 문제해결 방식 중심으로 강조점이 전환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을 하기 현지에서 활동하는 정책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거버넌스 사업에 있어서 감안하여할 점은 단기적으로 사업수행의 결과가 나타나는 협력사업과 제도구축, 운영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을 구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정책 모니터, 정책 평가 등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V. 결론

본 논문은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KOICA가 거버넌스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끝으로 원조집행기관으로서 KOICA가 한국의 개발협력 부문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원조에 관심을 갖는 공공기관들이 많아지고 개발협력에 종사하고자 하는 신진 인력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KOICA가 이들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에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OICA가 플랫폼의 중심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많아짐에 따라 분절화(fragmentation)와 정책일관성(coherence) 문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소위 유 · 무상 원조 분절화가 문제화되었다면 이제는 많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원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원조의 적절성(relevance), 정책일관성(coherence)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공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간 중복적인 지원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ODA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급증하면서 정책일관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대내적 환경에서 KOICA는 지난 25여 년 원조정책을 집행해온 전문기관으로서 공공행정 분

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많은 기관들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 플랫폼의 중심에서 조정(steering)과 협력(coordination)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대한 노하우 뿐만 아니라 분야 전문성에 대한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Best fit)으로 지원하도록 수원국의 특성에 맞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KOICA의 핵심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거버넌스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 협력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잠재적 역량을 현재화하고 미래의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거버넌스 분야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협력 대상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분석을 통한 정책과제의 파악과 정책수단의 도출이다. 다시 말해 증거와 연구에 기반한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있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이 현지의 협력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및 사업수행을 통해 유능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젊은 개발협력 전문가가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수행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이 개발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도 KOICA의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권혁주 · 배재현 · 노우영 · 동그라미 · 이유주. 2010.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취약국가의 개발협력: 취약국가 모형과 정책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4). pp171-199

권혁주 · 이환성 · 배재현. 2011. 한국 ODA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방안. 정책연구 2011-01-003.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연구책임자: 권혁주 교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 제 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제21-1-5호)

류승석. 2013.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와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 개발협력정책과 이슈. KOICA

배재현 · 노우영. 2012.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원칙과 한국의 취약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행정논총. 50(1). pp279-301

Boone, Peter. 1996. "Poli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European Economic Review. 40(2). pp289-329

Burnside, Criag., and Dollar, David.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pp289-329

Collier, Paul. and Dollar, David. 2002 "Aid allocation and poverty reduc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6(8). 1475-1500

Greenhill, Romilly., Carter, Paddy., Hoy, Chris., and Marcus Manuel. 2015. Financing the future: How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should funda global social compact to eradicate poverty,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Fjeldstad, Odd-Helge. 2014. "Tax and Development: Donor Support to Strengthen Tax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34(3). pp182-193

Moore, Mick. 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Reject Tax Targeting, Retrieved at Sept, 30th, 2015. http://www.ids.ac.uk/opinion/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reject-tax-targeting

Mosley, Paul. 1986. "Aid-effectiveness: The Micro-Macro Paradox". IDS Bulletin. 17(2). pp22-27

OECD. 2014. Development Assistance Flows for Governance and Peace. Paris:OECD

ODI, 2015. The Changing face of development and what it means for global actors.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UNDP. 2014. Discussion Paper: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grating Governance in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March 2014

UN Millennuim Project. 2005.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orld Bank. 1989. Sub-Saharan Africa; From Crisis to Sustainable Growth: a Long-Term Perspective Study.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Washington D.C.:World Bank

KOIC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

SDGs 채택에 따른 농촌개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김경량[1] · 김경철[2]

목 차

I. SDGs 와 농촌개발분야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목표
2. 농촌개발분야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
3. 농촌개발분야 SDGs 지표 활용 방안

II.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국제협력
1. 한국 국제농촌개발협력의 개요
2. 한국 국제농촌개발협력의 문제점

III. SDGs 대응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추진전략
1. ODA 농촌개발의 이론적 접근
2.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추진전략
3. 한국의 SDGs 대응과제
4. 한국 농업농촌개발경험의 원용가능성(예시)

IV. 참고문헌

1)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033-250-8663, kimkr@kangwon.ac.kr
2) 강원대학교 대학원

I. SDGs와 농촌개발분야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목표

2000년에 UN은 천년개발목표(MDGs)라는 인류가 당면한 8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OECD/DAC 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농촌분야 협력 사업은 2015년까지 15년 동안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어느덧,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빈곤에 관한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노력해 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13년까지 조사된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MDGs의 목표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 감소, 안전한 식수에의 접근성 등의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사회문제와 환경오염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심각해졌다.

2015년 9월 25일, 전 세계 193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새로운 발전 목표이다. 이번에 채택된 SDGs는 MDGs에 비해 매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재원, 참여 주체, 발전대상, 거버넌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와 해결방안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 당사자가 모여 해결해야 하는 이슈이며, 더 이상 정부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ODA 외에도 민간의 기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시장의 자본(Capitals in the market)이 결합될 수 있는 노력과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수원국 자체의 재원 확보도 중요한 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의 비전과 결단이 긴요하고, 민간 투자와 개별국가의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국내자원 동원의 상호작용이

〈표 1〉 MDGs와 SDGs의 개요

구분	MDGs(2001~2015)	SDGs(2016~2030)
구성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보편성)
분야	빈곤 · 의료 · 교육 등 사회 분야 중심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 · 사회 · 환경 통합 고려(변혁성)
참여	정부 중심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포용성)

출처: 이재완, SDGs의 의미와 수립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국회 세미나 자료집 (2015)

〈표 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구성

새천년개발목표: MDGs(2000~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2015~2030)	차이점
1. 극심한 빈곤 및 기아 퇴치	1. 빈곤퇴치	빈곤문제를 기본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보고, 인권에 기반한 책무성 매커니즘을 강조함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식량안보와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3. 보건증진	MDGs가 사회개발에 집중하고 있었고, 보건을 세부적으로 다루었었던 것에 비해, SDGs에서는 다양한 이슈들 중 하나로 위치하게 됨
2.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4. 교육보장과 평생교육향상	초등교육에서 더 나아가 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3. 성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	5.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성평등 이슈의 중요성 유지됨
7.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물과 위생문제가 더욱 부각됨
	7. 에너지 보급	에너지 이슈가 추가됨
–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경제성장 이슈가 추가됨
–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인프라, 산업화 이슈가 추가됨
–	10. 불평등 해소	불평등 문제가 주요하게 추가됨
7.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추가됨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증진	소비생산이슈가 추가됨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문제가 주요하게 추가됨
	14. 해양과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환경 문제 중에서도 해양문제가 구체적으로 부각됨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환경문제중에서도 육상 생태계 문제가 구체적으로 부각됨
–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평화와 제도,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구체적 이행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됨

출처: 강하니, OWL 92호, ODA Watch (2014)

개발협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MDGs와 SDG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빈곤과 사회개발(보건, 교육), 양성평등, 환경문제 등에 한정되어 있던 주제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다양한 이슈들이 포괄화(Inclusive)된 것이다(강하니, 2014). SDGs에서는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평등, 인권, 평화, 환경,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성장, 생산/소비 개혁, 일자리, 지속가능 농업발전, 인프라 개발과 산업화, 거버넌스와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여, 도시, 해양, 육상의 자원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SDGs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책무가 모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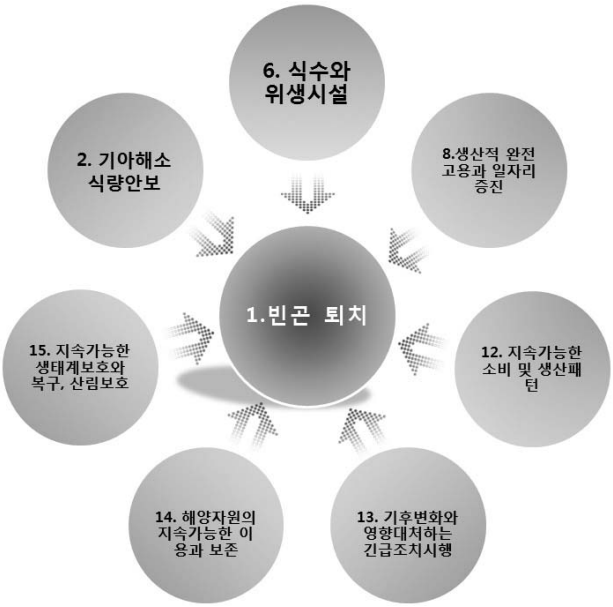
2015년 9월 UN개발정상회의 후 한국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SDGs가 이행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권고하는 포괄적 파트너쉽(Inclusive Partnership)과 신흥 공여국(Emerging Donors)간의 협력을 실증적으로 연계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무엇보다 POST-2015의 향후 15년은 SDGs가 전 세계적으로 추구되는 제2의 글로벌 협력시대가 펼쳐진다는 의미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SDGs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기관과 기관, 기관과 민간이 손을 잡고 협력 · 분업을 통해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개발기관들은 이행 과정에서 경제 · 사회 · 문화적 파급효과(Impact)를 최대한 창조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MDGs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불평등, 일자리, 에너지, 생태계, 평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세부항목과 지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개선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며,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행위자들의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 기틀은 정립했지만 무엇으로 얼마만큼 이들 목표에 다가갈 것인가라는 막중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2. 농촌개발분야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

SDGs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s), 그리고 100개의 글로벌 지표 및 국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SDGs의 17개 목표 중 농업 · 농촌개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SDGs의 목표는 목표 1, 2, 6, 8, 12, 13, 14, 15로 빈곤종식과 식량안보 확보, 식수 및 위생시설 관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 농촌개발이 주된 내용이다. 소비단계에서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통한 식량 절감과 생산 후 유통과 수확 후 처리 단계에서의 효율성 제고 시 전체 식량공급량의 30~50 % 이상을 증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DGs 에서는 이처럼 MDGs와 달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도 농촌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1〉 농촌개발 관련 핵심 SDGs 목표



출처: 김용빈, Mimeo (2015)를 재구성

〈그림 1〉은 SDGs의 17개 목표 중 농촌개발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직간접목표들은 목표1의 빈곤 퇴치를 위한 수단으로 설명된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 1은 5개의 세부목표와 2개의 이행수단관련 세부목표 등 총 7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다. 2030년까지 1.25달러/일 이하의 빈곤 퇴치와 모든 형태의 빈곤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DGs의 최상위 목표인 목표 1 중 세부 목표 1.1과 1.2가 농촌개발부문에 해당된다.

목표 2에서 농촌개발분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세부목표는 2.3, 2.4, 2.5, 2.a 등이 해당되며, 소농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은 개인에게는 영양결핍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만, 취약계층의 생계 및 경제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수준에까지 경제적 ·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효정 2015).

〈표 3〉 목표 1의 세부목표와 검토 지표

1.1 2030년까지 전 인류의 절대빈곤 퇴치 (현재 하루$1.25 이하 인구 기준)	
1	성별,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된, 하루 $1.25(PPP) 이하의 인구 비율
1.2 2030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별 빈곤정의에 따라 모든 면에서의 빈곤인구 50% 감축	
1	성별과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된,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는 인구 비율
2	성별과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된, 다차원 빈곤 지수(MPI)
1.3 최저생계유지 등을 포함한 각국별로 적절한 사회보호최저선을 설정과 정책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 제공	
1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성별 및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재피해자, 빈곤계층과 취약계층별로 세분화되는, 사회보호 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인구 비율
2	소득 및 빈곤선에 따라 평균 사회보호 이전 비율
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 토지 및 유산, 자연자원, 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등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 보장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구축 및 기후관련 재해와 기타 경제 · 사회 · 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경감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활용 보장	
1.b 빈곤퇴치활동에 투자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친빈곤적이며, 성차를 고려한 개발전략을 기초로 국가적 · 지역적 · 국제적 차원의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출처: KOIC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을 재구성

세부목표들의 검토지표들을 살펴보면, 2.3을 예로 들어 소농(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민)의 토지사용권의 문서유무와 목표치대비 실제 생산량 비율, 농촌지도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수혜한 농민비율, 축산물생산성 차이, 관개시설 접근성, 작물보험가입 농민비율 등의 다양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 · 축산업 · 어업 등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집의 과정이 요구된다.

그 외의 목표 2의 세부목표 등을 살펴보면 MDGs와는 달리 생태계시스템을 유지하고 기후변화나 홍수, 가뭄 등의 재해에 대한 대비 및 환경보호에 관련된 목표와 지표 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 목표 2의 세부목표와 검토 지표

2.1 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1	영양결핍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
2	식량불안정경험치(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에 따른 식량불안정 정도
3	식량 소비지수(Food Consumption Score, FCS)
2.2 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	
1	단위 면적(ha)당 농업생산 가치(USD/ha로 측정, 농지면적 기준 2/5 이하 및 여성 소농 통계 분류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있는 농업활동 이행	
2.5 2020년까지 국가 · 지역 ·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2.a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	
1	정부 지출 중 농업중심 지표
2.b 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	
1	정부 지출 중 농업중심 지표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1	식량 가격이상(Price anomalies) 지표

출처: KOIC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을 재구성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표 6은 세부목표 6개와 이행수단관련 목표 2개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세부목표로 되어있다. 목표 6에서 세부목표 1, 2의 항목이 농촌개발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과제라고 판단된다. 세부목표 6.1에서 '2030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과 6.2의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은 관정개발과 저수조 설치 등의 농촌개발분야에서 고려하여 계획되어진다면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세부목표 3, 4, 5, 6 등은 물의 관리와 생태계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수를 포함한 물은 공공재이며 사회 개발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식수관리를 위해 물 자원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5〉 목표 6의 농업분야관련 세부목표와 검토 지표

세부목표		지표
6.1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	– 안전 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율(%)
6.2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취약계층, 여성 및 여성청소년)	– 개선된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 비율 – 비누로 적절하게 손 씻는 비율

출처: KOIC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을 재구성

위에서 언급한 목표 1, 2, 6 이 외에 농촌개발분야 관련 목표들 중 목표 12, 14, 15의 주요 달성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추구하고자 하며,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 등의 사업으로 달성할 수 있다. 목표 14는 바다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 목표 15는 육상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6〉 기타 SDGs 농업분야 관련 목표와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2.a	지속가능한 형태의 소비와 생산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
14	바다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	14.1	육지 활동으로 초래된 부영양화 등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 저감/방지
		14.4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류 자원 보호를 위해 파괴적인 어획방식 금지, 초과 및 불법 어획 근절 등

15	육상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15.8	물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외래침입종의 유의적인 영향감소, 방제, 박멸 및 유입 방지 수단도입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존에 모든 자원 및 금융 자원을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증진
		15.c	보호종에 대한 밀렵, 밀거래를 방지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소득기회를 찾도록 역량을 강화

출처: KOIC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을 재구성

1) 농촌개발분야의 SDGs 지표

UN은 SDGs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 100개와 국별로 적용 가능한 지표(National Complementary Indicators) 148개를 제시하고 연간(annual) 모니터링을 통해 국별로 관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SDGs는 MDGs와 다르게 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MDGs가 국제개발협력의 재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SDGs는 MDGs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글로벌 지표는 단순하고 단일변수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지표, 국제 사회와의 합의가 근거가 되는 지표 등 10개 기준을 근거로 설정한 것이고, 국별 보완지표는 148개로 제시되어 있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협력대상 국가가 합리적인 지표를 선택하여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국별 모니터링은 협력 대상국의 책무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개발 전략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또한 협력 대상국은 활용하고자 하는 SDGs 지표의 정의와 성격, 자료 수집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세분화를 통해 국가개발 전략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를 권고된다 (이대섭 2015).

UN이 제시한 글로벌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의해 수립된 지표를 활용하여 대부분 공식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시행된다. 대부분의 글로벌 지표는 개별 국가에 적용될 수 있으나 어떤 국가는 소득 수준 및 정치 · 경제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게 될 수도 있으며, 원조 조화성 제고를 위해 국별 모니터링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권역별 모니터링은 지식공유, 동료검토, 권역 간 상호교차학습의 활성화를 토대로 구축될 수 있으며, 권역별 지표는 글로벌 지표나 국별 지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분야별 모니터링은 전문가 집단들이 기존에 사용한 지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농업 · 농촌분야는 국별 기술수준과 개별협력사업 시행에 대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농업 · 농촌 개발 분야는 SDGs 최상위 목표 1과 목표 2에 위치하고 있어 MDGs와 마찬가지로 중점 추진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농촌개발협력은 SDGs가 추구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농촌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KOICA는 지원 자금이 협력대상국의 농업분야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DGs의 성과 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이대섭 외 2015).

성과 관리 체계는 사업 형성을 위한 조사부터 사업 종료 후 끊임없는 관리를 통해 추진된 개발협력 사업이 협력대상국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SDGs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농촌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2) 농촌개발분야 적용 가능 SDGs 지표 선정

SDGs 지표 중 농촌개발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농촌개발협력 사업별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는 사업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일반 현황 지표, 농촌 개발 관련 지표, 농업생산 관련 지표, 그리고 범분야 이슈 관련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현황 지표는 동 분야 개발협력사업이나 기타 비농업분야 사업의 추진 시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분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의 SDGs 지표인 초등교육기관 이슈는 농촌 분야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농촌개발 사업이나 기타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수혜지역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로 분류될 수 있다.

농촌 개발과 관련된 지표는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술훈련, 소득 증대 등과 연관된 지표로 선정할 수 있다. 농업관련 지표는 농업생산 활동, 농업기술전수 및 교육훈련, 관개 및 유통 관련 시설 지원 등과 연관이 있는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범분야 지표는 양성평등 및 환경 등에 연관이 있는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3. 농촌개발 분야 SDGs 지표 활용 방안

국제개발협력사업은 효과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다수 존재하고 비용 대비 편익과 효과를 계량화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결정하기 매우 어렵고, 비용효과성 분석 또한 비용과 효과의 단위가 달라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분야의 수많은 지표 규정과 기준치 자료 측정,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행정부담도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원조지원 비용보다 모니터링 비용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성과관리 방법은 투입기반접근법이었으나, 최근 성과기반접근법으로 전환 되었다.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서 활용된 성과기반접근법은 달성목표 대비 투입자원과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한 인과관계에 의해 구성되며, 〈그림 2〉와 같이 성과체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성과체인은 개발협력 사업의 인과적 연계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들을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환류(Feedback)를 한다.

〈그림 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체인



출처: OECD (2013)

성과의 측정은 사업대상 지역(A)와 인구, 소득, 주거 환경, 소득원등이 유사한 지역(B)을 선정하고 동일한 기초선 조사 방식을 적용한다. 매년 (A), (B)지역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자료는 SDGs에 대해 기여한 정도를 정량화하여 보고 하여야한다. 세부 사업 내용이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농촌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성된 농촌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 관련된 SDGs 지표를 선정하고 주민과 교육기관 교사 및 학생 등이 포함된 기술 및 교육훈련과 관련지료를 선정하여 성과 측정에 활용해야 한다.

II.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국제협력

1. 한국 국제농촌개발협력의 개요

한국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심사 특별회의에서 24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이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DAC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빈국이었던 국가가 공여국이 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로부터 1990년대 말까지 120억 불이 넘는 원조를 받으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선진국들의 원조는 한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한국은 이제 그들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농촌개발분야[3]는 해당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농촌개발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김경량 2015).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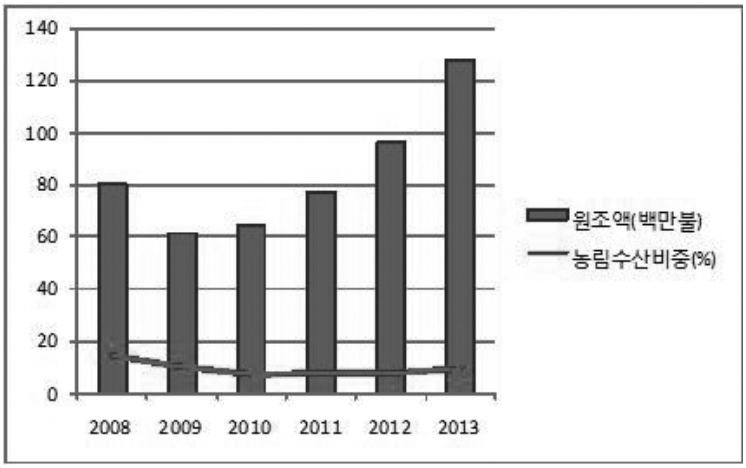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한국의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농촌개발분야에서 농어촌 인프라 구축, 농어업 생산성 향상,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소득원 다양화와 새마을운동을 포함하는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 5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국제원조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수원국의 발전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전략을 통해 각국이 당면한 농어업부분의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2008년부터 농림수산분야의 원조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비중이 전체 원조액의 6%였던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7.5%를 차지하여 금액뿐 만이 아니라 농림수산분야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KOICA의 농림수산분야 사업별 구성을 보면 〈표 1〉과 같이 농어촌인프라 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이 전체 사업비의 62%를 차지하여 편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두 분야가 모든 농업/농촌개발분야에 연계되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민호 2015) 한편, KOICA의 농림수산분야 지원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아시아가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26%, 중남미 지역이 9%를 차지하고 있다(김동인 2014).

3) 주. KOICA는 "농촌개발 사업이란 개발도상국 농촌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구축,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조성과 영농기술 지원, 농산물활용 및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가공시설지원,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지원 및 인력양성 등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함으로서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농촌개발분야를 농림수산분야를 포용하고 대체하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도 일부 논의되고 있지만 추후 이들간의 정확한 범위와 역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KOICA 농림수산부문 원조비중 및 규모 추이



출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2014)

〈표 7〉 KOICA 농림수산분야 전략 목표별 지원 실적(1991~2013)

구분	총사업수	지원액(만불)	비중(%)
농어촌 인프라 구축	47	7,276	36
농어업 생산성 향상	49	5,257	26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11	2,597	13
소득원 다양화	5	544	3
농촌종합개발	21	4,455	22
합계	133	20,129	100

출처: 이민호, Mimeo (2015)

2. 한국 국제농촌개발협력의 문제점

국제개발협력은 통상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나 원조(Aid)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ODA는 인도적인 지원(Humanitarian Aid)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예산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인도적인 지원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2~5% 밖에 되지 않고, 기술협력을 포함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형식의 개발협력 사업 비중이 90% 수준이다(이대섭 2015).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ODA 농촌개발분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수원국의 협력태도, 사전조사 및 지역연구, 사업방식, 평가와 모니터링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수원국과의 협의 및 운영주체의 모호성

선진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빈곤퇴치전략에 기반하여 국가의 지역적 정치、경제 등 맥락을 고려하여 농촌분야 ODA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전략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채로 단기적, 피상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농촌개발사업은 이미 작성된 수원국의 국가지원전략이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한아름 외 2011).

현재 국제농촌개발협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수원국 중앙정부 및 지방공무원들의 태만한 업무수행 및 투자에 부적합한 법제도 등이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 농가 및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도 전에 관료들의 주머니 챙기기 관습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농촌개발분야 관련 정부의 조달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의 부족 및 시설의 낙후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프라 부족은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 시 지원자금의 활용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를 반감시킨다.

2) 사전조사 미흡 및 사업방식의 비전문성

기존에 추진한 개발협력사업 대부분은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1~2회에 걸쳐 단기간 추가로 현지에 나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짧은 출장 기간 동안 대상국의 관련 부서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짧은 만남만 가진 채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실제 사업이 착수된 이후에는 뜻하지 않게 봉착하는 어려움이 많아지게 된다. 사전협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류나 규모의 새로운 개발협력사업이 어느 지역에 얼마간의 기간으로 필요한지 조사되고, 대상국 공무원 혹은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종료 이후에도 개도국의 지속가능하고 책무성 있는 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허장 외 2009).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활용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개발협력사업의 착수를 위한 사전 단계부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연구체계가 미흡하고 DB관리가 안되어 사업실시 주체별로 단편적인 사전지식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곳곳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KOICA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지역별 ODA를 지원하는 지역전문 연구단위가 구성되고 DB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사업 수행 이전에 긴밀한 협의와 지원을 한다면 개발협력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기후 및 자연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또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사업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에 걸쳐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촌개발분야는 다양한 목표들의 종합적인 현장이며 또한 단순화가 어려운 개발분야이다.

3) 원조조직 및 사업방식에서의 비전문성

농촌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조 조직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조수행 조직과 기관들은 본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현장에는 실질적 결정 권한이 부족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조직형태이다. 2010년에 처음 도입된 ODA 통합평가시스템에 따라 시범 평가한 결과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원조기관간 상호협의 없이 추진되어 ODA 사업이 분절화 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최근 지구촌 많은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사업도 비근한 사례가 될 수 있다(김경량 2015). 조직 내 평가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여 학습효과가 매우 더디고, 농촌개발 인력과 조직의 전문화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아름 외 2011). 이와 관련 분야별 많은 전문가들이 작업반이나 위원회와 같은 개방형 조직을 통해 개발원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협력사업간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즉 포괄적, 통합적 지역개발 사업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 부응하여 일관된 통합목표의 설정과 시행이 필요하다.

4) 미흡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국제사회에서는 MDGs/SDGs를 연계한 성과지표 제시 및 관리 부재 등 KOICA 사업성과에 대한 공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 통합적 지역개발 사업방식이 요구되고, 201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하는 SDGs와의 연계, 과학적 증거기반 성과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은 대부분이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분야의 특성상 사업의 성과를 단기간에 도출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후관리나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발성(stand-alone)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가 포함된 프로그램 형식의 개발협력 사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은 현재까지도 프로젝트 형식의 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성과 측정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후관리나 향후 사업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 환류(feedback) 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농촌개발협력은 2015년 9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화된 SDGs에 부응하여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II. SDGs 대응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추진전략

1. ODA 농촌개발의 이론적 접근

SDGs의 채택에 따른 ODA 사업을 추진 시 농촌개발의 접근방향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박진도, 2005)을 고려하여 개도국별로 현지 여건을 감안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지원대상국 농촌의 다면적인 특성이 개발전략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

농촌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료 · 교육 · 복지 · 문화 등)와 사회간접자본(주택 · 도로 · 상하수도 · 교통 · 정보 · 통신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2) 경제활동공간으로서의 농촌

대부분의 수원국에서 농업은 농촌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이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이므로 농업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4] 장기적으로는 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값싼 식량 제공에서 다원적 기능 제고로 전환되

4) 캄보디아의 경우 2015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넘으면서 농촌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젊은 남성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등 해외취업으로 나가고 여성들은 도시주변에 산재한 봉제공장에 대규모 취업하면서 농촌 현장에는 젊은 층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동력을 대체할 농기계가 필요하지만 자본이 없어 외부에 영농을 의탁하고 생산성과 소득은 정체되는 등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업개발의 방향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국민경제 전체에서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의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촌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이 다각화 되어야 한다(김경량 2007). 이는 농민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위한 겸업의 확대뿐 아니라 비농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관련해서는 농산물의 가공 및 마케팅, 중소규모의 기업창업, 전통수공업과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

3) 어메니티 공간으로서의 농촌

농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일부 선발개도국의 경우 농촌 환경 및 경관은 이른바 개발이란 미명 아래 급속도로 파괴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 환경 및 경관을 회복하고 보전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회복하고 보전해야 할 환경 및 경관의 범위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보호, 전통건축물, 문학 및 예술, 축제, 식문화 등 유무형의 전통적 문화유산, 지역의 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이 농촌관광과 연결되어야 한다.

4) 주체적 · 자율적 농촌주민: 주민의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많은 개도국에서 농업 및 농촌개발정책이 일관성 없는 정치논리와 외국의 지원에 의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주체적 역량이 배양되지 못하고 외부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 농촌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농촌지역주민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과 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개도국의 경우 주민역량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마을단위 농촌개발을 이른바 상향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농촌개발은 기본적으로 상향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농촌주민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사업에 세부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역주체간의 협력 및 지역 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파트너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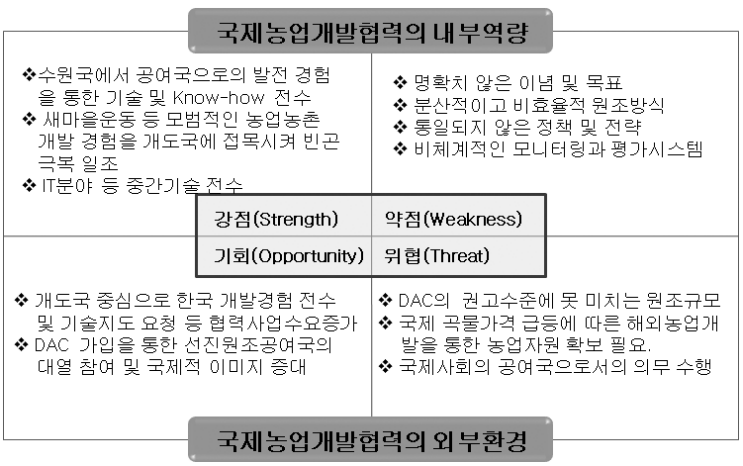
2.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추진전략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과정은 여타의 개발도상국에 주는 함의가 크며, 특히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중심의 경제성장이 되어야 하며,

교육은 언제나 어느 국가에서나 중요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개발의 3대 요소로 리더십-시장주의 경제-교육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3대 요소를 잘 활용하여 성공한 모델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김경량 2015).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글로벌 개발협력의 증진을 위해 좀 더 노력할 의무가 있다.

농촌개발분야에서 한국은 농지개혁 및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비롯한 제도 시행을 통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높은 농업생산기술 등 1960년대 세계최빈국에서 식량난과 빈곤문제를 극복하였다. 한국의 농촌개발분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농격차 해소 및 빠른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농촌발전이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있다(허장 외, 2009). 우리정부는 수원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국제기준에도 부합되는 한국형 ODA 농촌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하여 원조모델을 마련하였다.[5]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농촌개발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도하며 시장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일들이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원조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한국형 국제농촌개발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작물재배기술과 농업기술보급체계, 농업증산을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 농식품산업 육성정책 등 협력 가능한 분야를 분석하고 개

〈그림 4〉 한국 국제농촌개발협력의 SWOT분석



출처: 박민지 외, 한국 농업농촌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선정에 관한 연구 (2011)

5) 국무총리실. 2010.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도국의 농촌개발에 있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제농촌개발협력이 SDGs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다른 원조 국가들과 차별화된 원조로 국가 이미지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국제농촌개발협력의 기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우선 SDGs 의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기아 감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에 따라 농업분야의 대상 및 기술수준이 다르고 생산유형 및 특성이 다양하므로 국가별로 각 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 가이드라인와 프레임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국제농업 · 농촌개발협력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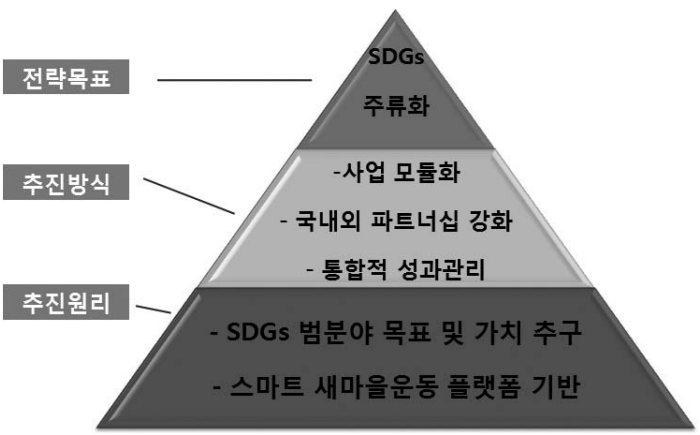


출처: 김용택 외, 우리나라의 국제농촌개발협력체계의 강화 방안 (2007)를 재구성

예를 들어 DAC의 소득별 기준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가인 경우, 농업이 주요 생계수단이므로 식량자원 확보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생계개선전략이 필요하고 저소득국가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크고 주식작물에서 벗어나 기술 전수를 통한 고부가가치농업을 중심으로 비농업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중소득국가 및 고중소득국가는 영세농의 생산성을 개선시키고 비농업경제의 성장을 위해 일자리 및 투자 기회의 접근도를 높여 고용창출과 새로운 식품시장 등으로의 연계로 농촌마을의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고 개도국이 선호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한국형 국제농촌개발협력 모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파악하여 보다 차별화된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처해있는 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짧은 기간 내에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다르게 원조예산의 소규모성이라는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발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수원국의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중점 지원하여 능력배양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는 것도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국가별 맞춤형 정책지원 개발컨설팅과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 프로그램화하고 국내 관련 기관 및 대학 등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6〉 KOICA 농촌개발분야 중장기 전략 체계



출처: 이민호, mimeo (2015)

3. 한국의 SDGs 대응과제

1) 이행목표의 체계화 및 통합

SDGs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이행목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목표를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이 이행할 수 있는 주요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유웅조 2015).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과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보편성, 포용성, 책무성 등이 포괄적 원칙으로 작용해야 한다. 다양

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파트너십 성공의 관건이며, 특히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는 특정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의식, 결과중심, 투명성에 대한 강조가 필수적이다.

SDGs는 국내외 이행체계를 구분하면서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국제개발협력차원의 이행과 국내적 목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이행 체계와 대내적 이행체계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동시에 한국의 SDGs 이행이라는 측면에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2) 포용적 파트너쉽 강화

새로운 SDGs 시대를 맞이하며 각국은 주인의식을 갖고 SDGs 이행을 위해 국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제도를 구축하며 또한 전환적인 개발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삼각협력, 남남협력 및 다자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파트너 기관들과 공동 거버넌스 및 비전을 공유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민간기업 참여 중심의 개발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제개발에서는 남남협력, 삼각협력 및 민간파트너십과 같은 새로운 개발체제가 부상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남협력의 경우, 개도국의 정책과 접근법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현지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남협력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공여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은 향후 포용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주체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하며, 개도국의 주인의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책임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한다.

3) 지속가능에 초점

국제농촌개발협력 사업은 대부분이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분야의 특성상 사업의 성과를 단기간에 도출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후관리나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발성(stand-alone)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가 포함된 프로그램 형식의 개발협력 사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 · 농촌 분야 개발협력은 현재까지도 프로젝트 형식의 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SDGs는 MDGs와 다르게 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MDGs가 국제개발협력의 재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SDGs는 MDGs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

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환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농업 · 농촌 개발 분야는 SDGs 최상위 목표 1과 목표 2에 위치하고 있어 MDGs와 마찬가지로 중점 추진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농촌개발협력은 SDGs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설정을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성과 관리를 위한 전략

우리나라 국제농촌개발협력은 사업의 구성부터 평가 및 환류까지 SDG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SDG 지표와 호환성이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기초적인 통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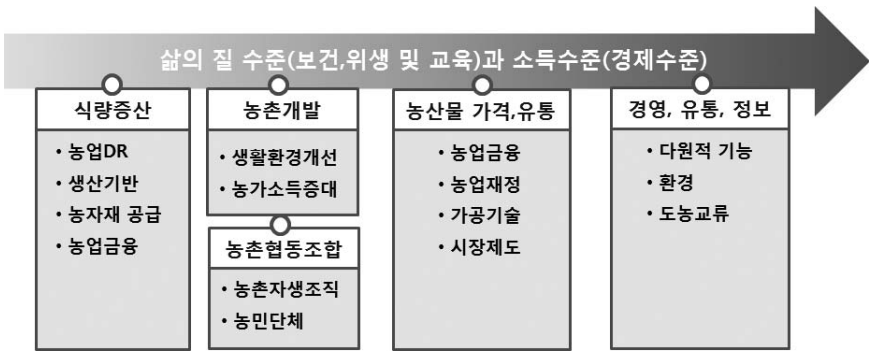
또한 단순한 투입과 성과의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논리보다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다양한 세부 사업과 이들 세부 사업의 성패 여부를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촌개발협력사업은 개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추진하고 성과관리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SDG 지표를 토대로 성과 측정 및 SDGs 기여 정도를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UN에서 합의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4. 한국 농업농촌개발경험의 원용가능성(예시)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분야별 농업 · 농촌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달라진다. 즉 경제발전단계별 중요도는 식량증산 → 농촌개발 → 농산물가격 및 유통 → 경영, 유통, 정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요 개도국의 경우 농촌개발사업 중 농업분야는 R&D, 생산기반, 농자재공급, 농업금융을 기반으로 한 식량 증산사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식량증산사업이 최우선 사업일 경우, 농촌지역의 관개시설 확충 및 활용 증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기술 활용 및 관련투자 증대, 농촌 인프라 구축,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빗물 저장 및 활용,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농기구 보급 및 기술전수, 농업부문의 공공/민간 투자 촉진과 농촌 거주자의 비농업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증대를 위한 정책수립, 농촌지역 금융서비스 확대, 농산물가공업 개발 등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림 7〉 경제발전 단계별 주요 농촌개발사업



출처: 한아름 외,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에 대한 소고 (2011)를 재구성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시 농업 · 농촌개발 조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 농업부문의 성장과 농촌빈곤 감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허장 2013). 대형 농업용수자원 댐이나 RPC, LPC 등 농축산물 가공시설의 건축과 같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이미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 보다는 군 단위 이하의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주산물 기술보급용 시범포 건설, 인구 500명 정도 규모 마을에 대한 새마을운동 같은 주민 자치조직 주도의 마을개발에 대한 지원, 소금융(microcredit)이나 작목반 조직화 등 농업서비스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즉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 위주의 중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차별화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한국만이 가진 농촌개발전략으로 전 세계에 널리 소개되었고 농촌개발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있다. 특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해오면서 겪었던 경험은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모범사례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험한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적용된 방식을 접목시켰을 때 사업성과가 높고 주민 의식이 개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김경량 2015). 한국의 농촌개발분야의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가능하고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을 예시로 분류하면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협력방안(예시)

사업구분	주요내용	소득수준 및 대상국가
새마을운동	• 1970년대 전국의 모든 마을에서 전개된 국민운동이자 농업 · 농촌정책 • 농촌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성공의 원동력임. 이는 한국의 마을 공동체, 역사적 문화전통 등 다양한 구조적, 역사적인 요인들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기여하였기에 개도국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근본적인 농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마을운동의 전수가 필요	• 1인당 국민소득 $1,000 미만 • $1,000~3,000 수준 • $5,000 이상 • 아프리카 • 남부아시아
녹색혁명	• 신품종 개발과 농가 보급을 통해 생산 능력향상과 재배기술의 발전 •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농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정책자문 및 협력 사업 실시	• 1인당 국민소득 $1,000 미만 • $1,000~3,000 수준 • $5,000 이상 • 아프리카 • 남부아시아
백색혁명	• 채소생산의 주년화를 위해 온실의 구조와 자재 및 설비 기술 등 전수 • 농가는 시설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품질 중시 농산물 재배로 전환 • 해당 국가의 생활양상 전반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조 국가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	• 1인당 국민소득 $5,000 • 중앙아시아 • 중남미 국가
협동조합	• 경제사업 전담의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사업 전담의 농업은행을 통합한 종합농협체제 • 식량자급 부족과 부채,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촌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진된 전략 • 식량의 자급과 농촌금융시장의 발전이 시급한 개도국에 적용 필요	• 1인당 국민소득$1,000~5,000 • 중앙아시아 • 중남미 국가 • 반 자급적 소농구조 개도국
수확 후 관리	• 많은 개도국 농산물 감모율 40~50%에 달함 • 개도국의 농산물 생산물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수확 후 관리 기술수준도 매우 낮은 편임 • 수확 후 손실감소,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지원 및 현대화, 정부 관리자 양성, 연구인력육성, 산업 기술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국내 초청 및 현지 연수교육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농산물 유통	• 농산물유통체계는 열악한 수준이며 현대적인 마케팅시스템 도입 필요 • 농산물 유통시스템 전면 개편 및 적절한 저장과 가공, 운송 등 인프라 조성	• 1인당 국민소득저개발단계~고소득단계 적용 • 1인당 국민소득 $500~ • 전반적 적용가능

농업기계화 촉진정책 및 기술개발	•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식량생산을 유지 • 농업기계 산업육성,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후관리 조직의 육성, 농업기계 교육과 훈련, 농업기계 연구 개발 및 검사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아시아의 벼농사지역에 우리나라 경험과 교훈이 정책개발자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임	• 1인당 국민소득 $1,000~5,000 $5,000 이상 • 아시아 농업국가(쌀) • 신흥 공업국
농업용수 개발 및 공급방안	• 기상재해에도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기반정비가 필요 • 농촌용수나 가뭄대책, 경지정리, 우량농지의 유지보전을 위해서 관리시설의 현대화가 필요	• 1인당 국민소득저개발단계~고소득단계 적용 • 1인당 국민소득$500~ • 전반적 적용가능
경지정리	• 개도국의 흩어진 농경지 군집화 및 구불구불한 도로 재정비를 통한 영농의 효율성 증대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농조합 등의 적극적인 제도적 재정지원정책이 필요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농어촌 정비 및 개발	• 개도국들의 입장에서 농어촌 정비 및 개발을 위한 시책이 강구됨. •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비 및 개발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초기의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모델로 하여 농어촌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출처: 김경량 외, "KSP 지식공유사업 평가 연구." 기획재정부 (2013)를 재구성

한국의 사례가 개도국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고 우수 사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이 경험하였던 실패사례에 대한 교훈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험시점이 주로 1970, 80년대에 걸친 것인 반면, 지난 20~30년 동안 국제적인 경제 및 기술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사항을 반영한 국가별, 분야별 맞춤형 모듈화 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김경량 2013). 앞으로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은 특정 개도국의 사례별로 적용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 된 액션플랜과 매뉴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라 하더라도 적용가능성이 높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기술수준이나 정치수준이 변화된 이후로 그 사업시기를 미루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각 농촌개발사업들이 새마을 운동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 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2010.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김경량. 2007. “한국 농촌의 비전과 과제”. 한국농업경제학회 편.『2007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pp.57-80

_____ 외. 2013. “KSP 지식공유사업 평가 연구”. 기획재정부

_____. 2015. “한국의 개발원조와 새마을운동: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동아시아재단 편.『이슈와 정책』25호

김동인. 2014.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논문)

김인 외.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국제협력단

박진도 외. 2005.『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아카데미

유웅조. 201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대섭 외.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촌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농정포커스』제 113호

정기환 외. 2007. “대 개도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한아름 외. 2011.“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에 대한 소고”.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편.『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제23권 제2호. pp.129-137

허장 외. 2009. “국제농업협력의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_____. 2013. “새마을운동과 국제개발협력”. ttp://www.krei.re.kr/web/www/3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200506

강하니. 2014.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들고 지켜야 할 새로운 개발목표 : SDGs”. http://www.odawatch.net/articles/464186

성하은.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시민사회가 걸어야 할 변혁의 길”. http://www.odawatch.net/articles/468579

김영섭 외. 2015. “농업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CEO Focus』제190호. http://www.nonghyup.com/Research/Ceofocus_View.aspx?PAGE=16&Idx=169

_____. 2015.10.2. “국제농업개발협력, 지속가능에 초점을”. 농어민신문

이민호. 2015.11.23. 제 29차 개발협력포럼 발표자료.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중장기 전략수립-농림수산분야”. 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혁신과 ODA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장)

목 차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KOICA의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IV.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혁신 ODA
참고문헌

I. 서론

본 연구는 제29회 개발협력포럼에서 과학기술혁신 세션에서 논의되었던 KOICA의 과학기술 ODA 협력전략에 대한 발표와 논의 내용을 다루고 이러한 KOICA의 과학기술 ODA 전략에 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점에서의 그 중요성과 협력가능성을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발협력 ODA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대외적으로 높아지면서 KOICA 실행체계에서 기술총괄팀이 새로 발족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방향이나 우리나라의 역량적 측면을 보았을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협력이 주로 경제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환경이나 보건, 교육 등의 분야별로 개발협력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제, 산업, 환경, 사회적 이슈들을 관통하는 과학기술혁신의 주류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포럼에서 KOICA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과학기술혁신 ODA전략이 2015년 UN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관성과 맥락이 무엇이며 기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이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어 온 사항들과 연계성을 어떻게 찾아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UN지속가능발전목표들은 기존의 개발협력의 원조관점에서 탈피하여 지구 공동체적인 글로벌 이슈의 공동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개발협력을 논의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ODA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KOICA에서는 적정기술을 통한 개발협력사업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연구의 접점으로서 개발협력과 과학기술협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과학기술협력 관점과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KOICA에서 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4장에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과학기술혁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R&D 프로그램 관점에서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향후의 협력방안과 제언에 대해서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과학기술외교와 관련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명진 외(2014)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글로벌 거점센터 구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글로벌 개방 혁신과 글로벌 가치사슬, 플랫폼의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해외 과학기술혁신 현지거점 사례, 해외 혁신 플랫폼 구축 사례 등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센터 사업 및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성범 외(2013)의 연구에서는 청색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청색경제의 부상과 국제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청색경제 협력 거버넌스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외교

와 관련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영토, 안보, 자원, 국제적 리더십 확보 외교, 즉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 유형 및 각 경제영역별 소수 다자 협력체 진입을 위한 다자 외교, 즉 외교속의 과학기술 차원의 과학기술외교(우주응용 및 우주탐사), 그리고 북극해-다자협력에서 양자협력 중심으로(과학기술을 위한 외교 및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장용석 외(2012) 연구에서는 스마트파워를 갖춘 글로벌 뉴리더로서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종합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즉 스마트파워에 기반한 대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및 다자간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의 개념틀을 개발하고 대 선진국, 대 신흥국, 대 개도국 및 다자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에서는 과학기술 외교전략을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협력, 다자기구 속의 과학기술외교로 구분하고 글로벌 창업경제의 확산이나 청색경제, 혹은 개발협력전략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차원에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과학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외교적 차원의 노력에서 국제기구에서의 과학기술논의의 확대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자기구에서의 외교적 확대,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과 산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발전을 돕기 위한 외교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그것이다. 보고서들에서는 외교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적 차원의 활동 강화가 기존의 기술이전을 위한 목적으로 외교를 활용하는 측면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 OD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내용들 가운데 초기의 연구는 이우성 외(2010)의 연구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과학기술혁신의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도상국가(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에서의 과학기술 ODA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현지 현황분석과 진단을 통해 사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개도국의 역량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책방안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 1.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전략적 지원 강화, 2. 한국형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도국 역량개발, 3.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4.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추진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총리실 주관으로 시행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2012년 미래사회 협동연구로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한국형ODA 모델 가운데 과학기술모델로서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프로그램, 2. KIST 설립/운영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3.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프로그램, 4. 적정과학기술 지원 등 19개 모델을 대표모델로서 제안하고 있다. 이우성 외(2013) 연구에서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 로드맵' 정책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하는 과학기술 ODA 로드맵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과학기술 ODA의 개념과 범위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 ODA의 규모와 분석을 제시하고 중

점 추진과제로서 1.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정립, 2. 적정과학기술 지원 등 상생발전형 ODA 확대, 3.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 4. 개도국 과학기술 연구센터/연구원 설립 및 연구역량강화지원, 5. 과학기술단지/혁신클러스터 설립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의 연구는 과학기술부문과 외교부문에서 제안하고 고민하는 과학기술ODA 협력전략에 대한 정책연구와 현황분석 연구들이지만 개발협력부문의 관점에서의 정책방안 마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번에 KOICA가 개발협력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 초안이다.

III. KOICA의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KOICA의 기술총괄팀은 제29차 개발협력포럼에서 "Mainstreaming STI in KOICA's OD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이라는 제목으로 KOICA가 계획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ODA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KOICA는 과학기술 ODA가 Cross-Cutting하는 이슈이며 전반적인 ODA사업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이 주류화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을 발표하였다.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ODA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회적 요인과 도전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 ODA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5년 UN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지구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평화적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개발원조에 있어서도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역량 측면에서도 과학기술혁신 ODA는 중요성을 갖는다. 한국은 고도 성장기에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과 산업고도화의 모범적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초기부터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경험은 개발도상국가와의 개발원조에 있어서 중요한 개발경험 공유의 자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량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중요한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혁신적인 민간기업 부문 등의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중요한 과학기술혁신 관련 기관들은 개발원조에 있어서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모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혁신 ODA를 추진하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이 중요하여진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산업발전, 경제성장을 이룬 전문적 역량의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이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OICA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혁신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 넘어서야할 몇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KOICA에서 제시한 과학기술혁신 ODA 실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대부분 기존에 이러한 형태의 ODA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반적으로는 ODA 분류체계에서 과학기술혁신 ODA에 대한 분류체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과학기술혁신 ODA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분류와 적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개입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연관되어서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에 대해서 선진국과 신흥공여국 공히 이 영역에 대한 사업경험과 더불어 이론적인 배경과 지식축적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ODA 영역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은 새로운 영역의 등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과학기술혁신 ODA와는 다르게 이미 과학기술계 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해온 영역이지만 이러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ODA라고 하는 개발협력 영역과 융합되어서 진행되어 오지 못했다. 따라서 실상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산업과 무역협력, 국제 개발협력 영역이 상호 어떻게 협력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 KOICA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풀어나가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ODA 측면에서도 과학기술혁신 ODA전략은 매우 초기의 논의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체계와 협력전략에 대한 논의는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 ODA전략에 있어서 빈곤문제 해결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논의가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인데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부터 논의되어온 적정기술과 빈곤문제해결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성공적 사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과학기술혁신 OD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실패요인이 무엇이며 지속가능한 빈곤문제해결로서의 적정기술혁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KOICA가 과학기술혁신 ODA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들과 정책과제들에 대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KOICA의 과학기술혁신 ODA는 크게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1)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을 KOICA의 개발협력 프로젝트에서 주류화하는 통합화 정책, 2) 개발협력의 대상 파트너 국가들의 혁신시스템을 강화하는 과학기술혁신 기반구축정책, 3)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활용한 기술기반의 혁신 ODA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혁신 주류화 통합화 정책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개발협력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에서 과학기술적 해결책들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학습(Learning by Doing)에 의한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식수공급사업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에 지식이전과 역량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농업, 폐기물관리, 보건의료, 수자원, 에너지 등 기존의 대부분의 사업들에서 과학적 연구와 기술지식의 이전을 통한 역량강화 측면이 중요한 사업들에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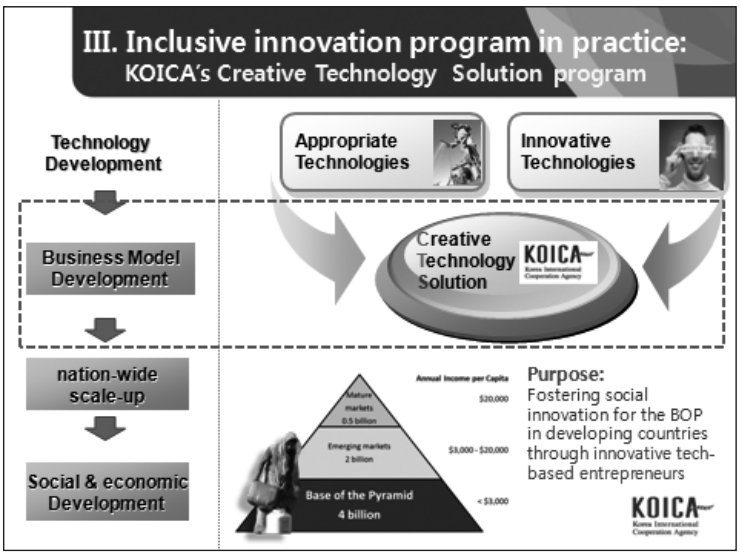
2) 개발협력 대상국가들의 혁신시스템을 강화하는 기반구축정책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을 조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과학적 기반과 기술을 통한 상업화 시스템의 조성에 KOICA가 ODA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주고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상용화를 지원해주며 혁신클러스터와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혁신전략의 수립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인적자원의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례로는 베트남에 추진되고 있는 V-KIST 연구원 설립사업과 개발도상국가의 대학내의 연구개발 센터의 설립과 연구역량강화 지원사업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마지막은 정책방향성은 빈곤계층에서의 시장창출을 위한 혁신 ODA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기술기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BoP(Bottom of Pyramid) 시장에서의 민간시장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민관협력사업(PPP(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서의 창의적 혁신사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 혁신사업들의 결과물들을 사회적기업과 민간부문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의 사례들은 기존에 NGOs와 대학, 기업의 CSR과의 협력을 통해서 PPP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적정기술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농업기술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의적 기술 솔루션 프로그램이 BOP 시장을 향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한 빈곤문제해결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KOICA는 현재 포용적 혁신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창의적 기술 솔루션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Program)을 2015년에 처음 출범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층에 맞는 적정기술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첨단기술들을 가지고 창의적 기술 솔루션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국가적인 스케일업(scale-up) 사업이나 사회, 경제적 개발협력사

업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정신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의 BOP 계층들에게 사회적 혁신을 활성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KOICA의 창의적 기술 솔루션 프로그램



출처: KOICA(2015) "Mainstreaming STI in KOICA's ODA" 29차 개발협력포럼

이러한 과학기술혁신 ODA사업전략과 과제들을 통해서 KOICA가 진행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혁신 ODA의 방향성과 지향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어서 제시되었다. 1) 과학기술부문과 개발협력부문, 민간산업부문간의 지식공유를 통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2) 개발도상국가의 산업발전이 혁신역량의 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역량 제고, 3)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성장을 위한 혁신'과 포용적 발전을 위한 '포용적 혁신'간의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하는 균형성장 제고, 4) 기존 산업발전만이 아닌 새로운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한 기술창업과 민간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혁신적 접근법 제고, 5) 개발협력현장에서 도출되는 우수사례들과 신제품 프로토 타입들이 검증되고 피드백되면서 선순환적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확산의 제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 ODA 사업의 중점사업으로서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이 5가지 중점추진사업방향가운데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혁신 ODA는 우리나라가 추구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과학기술혁신 ODA 방안들의 성

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주체들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실행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진다.

IV.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혁신 ODA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에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의 논의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논의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진전되어 미래 지구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글로벌 국제사회차원에서의 협력방안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로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사회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평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현재의 글로벌사회의 위기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미래를 나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협력원조의 관점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이는 과거의 개발협력원조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을 돕는다는 호혜적 관점에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존에 대한 위기의 관점에서 개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글로벌 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사회적 불안정, 환경적 위기, 평화안보의 위협은 이제 개별 국가차원의 문제와 도전을 넘어서 글로벌 도전과제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가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가가 가지고 있던 가장 취약한 역량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역량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UN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17가지 목표들 대부분에서 과학, 기술, 연구, 혁신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면서 개별 목표들에서 과학기술혁신이 그 기반으로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1〉참조).

〈표 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혁신 연계

목표	분야	번호	내용
G1.	빈곤	1.4.	appropriate new technology(적정기술)
G2.	식량/영양/농업	2.a.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가의 농업생산역량 확대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농업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G3.	보건	3.b.	개도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G4.	교육/평생교육	4.b.	개도국과 저개발국가에 고등교육(ICT, 엔지니어링과 과학프로그램을 포함하는)에 있어서 선진국, 여타 개도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의 증대
G5.	양성평등/여성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enabling technology, 특별히 ICT 기술의 사용을 강화
G6.	물/위생	6.a.	개도국에서의 물과 위생과 관련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위한 국제협력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데 이는 물 관련 기술들 포함
G7.	에너지	7.a.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들(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청정화석연료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에너지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촉진
		7.b.	개도국과 저개발국가에서의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들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
G8.	경제성장/일자리창출	8.2.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통한 경제적 생산성 증대
		8.3.	기업가정신과 창의성,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들의 촉진
G9.	산업화/혁신을 위한 인프라	9.4.	환경 친화적인 기술들과 산업과정 채택의 증대
		9.5.	R&D 연구개발인력과 공공 및 민간의 연구개발투자확대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면서 모든 국가, 특별히 개도국에서의 과학연구와 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
		9.a.	아프리카 국가들 특별히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지속가능 인프라 개발 촉진
		9.b.	산업다각화와 부가가치확대를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서 개도국에서의 자국의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
		9.c.	ICT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대
G10.	불평등	–	없음
G11.	도시거주환경	11.c.	저개발국가에 지역의 재료들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건물들을 짓는데 금융적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
G12.	지속가능소비/생산	12.a.	지속가능한 패턴의 소비와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도국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G13.	기후변화 영향대응	–	없음
G14.	해양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의 산성화 영향을 다루고 최소화
		14.a.	IOCCG(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에 따라서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해양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역량의 강화와 해양기술의 이전, 과학적 지식의 증대
G15.	생태계/산림/사막화/생물다양성	15.6.	유전자 자원들의 활용으로 나오는 유익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촉진할 것
G16.	사회제도/정의	–	없음
G17.	글로벌 파트너십/이행체계	17.6.	북남, 남남, 삼각 협력을 통해서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UN과 글로벌 기술협력강화 체계를 합의하여 상호합의를 통해서 지식의 나눔을 강화
		17.7.	환경 친화적 기술들을 개도국에 호혜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 이전, 확산 등을 촉진
		17.8.	기술은행의 실행과 저개발국가에 대한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체계를 세우도록 하며 특별히 ICT 등과 같은 enabling technology의 활용을 강화
		17.16.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식과 전문성, 기술과 금융재원들을 동원하여 모든 국가들 특별히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의 성취를 지지

출처: U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개발정상회의(2015)에서의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평화적 이슈들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의 관점에 있어서도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이 모두 같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혁신이 지향하는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관련 목표들을 재정립하여 보면 1) 기업가정신, 친환경적 산업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제는 8.2, 8.3, 9.4, 9.5, 9.a., 9.b. 등에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2) 물, 에너지, 보건, 생물다양성, 해양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의 과제는 6.a., 7.a, 7.b., 3.b., 14.a, 15.6 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개도국의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과 농업/식량 문제의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의 과제는 1.4, 2.a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학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한 개발도상국가의 기반구축으로서의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17.6, 17.7, 17.8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학기술혁신 ODA 개발협력사업은 1) 친환경적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경제적 관점의 개발협력에서의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 2) 기후변화에 따른 물, 에너지, 보건, 생물다양성, 해양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한 환경적 문제해결을 위한 관점에서의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 3) 적정기술과 농업/식량 등 빈곤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관점에서의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 4) 개발도상국가의 과학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이 이러한 목적지향적인 분류체계를 갖는다고 한다면 과학기술 R&D 프로그램에서 가지는 목적지향성과 연계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에 대한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과학기술혁신이 신기술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과 경제발전에 주목하는 과학기술혁신 R&D 프로그램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도전과제들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R&D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균형의 이슈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프로그램 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R&D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체 혁신시스템에 대한 기반구축 인프라 사업이 과학기술혁신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혁신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과학기술혁신이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경제적 혁신, 환경적 혁신을 넘어서 최근에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시스템 연구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연계는 충분한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경제적 혁신 (산업혁명)과 환경적 혁신, 사회적 혁신을 순차적으로 과학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진행해 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적 혁신, 환경적 혁신, 사회적 혁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목해야 하는 관건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의 혁신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이다. 국가들의 혁신시스템은 사회적 제도와 맞물려 있어서 어떠한 혁신시스템을 지향하느냐 혹은 강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제도와 법제도, 경제관행이 매우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 대륙국가형 혁신시스템이 사회주의형 경제시스템으로 노동시장과 시장경쟁제도, 금융시장이 경직적이며 안정적이어서 장기적 혁신, 점진적 혁신시스템에 맞는 반면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식 혁신시스템은 창의적 기술발전에 의한 구조조정과 역동성이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신기술발전과 신산업창출에 적합한 혁신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본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혁신시스템, 남부유럽의 라틴형 혁신시스템, 대표적 복지국가인 북구유럽형 혁신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시스템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이 처한 역사적 제도적 관점과 국가의 지향점을 보았을 때 어떠한 혁신시스템을 지향할 것인가는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일형의 혁신시스템은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한 직업훈련교육과 폴리텍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제도가 중요한 반면 영미식의 혁신시스템은 창의적인 연구와 다학제적 협력이 중요한 대학원 중심의 산학 협력체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해당 개발도상국별로 혁신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적 지향점과 더불어 혁신시스템을 설계해나가는 것은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기술이전과 기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UN개발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있어서도 '기술은행(Technology Bank)'의 설립과 '기술활성화체계(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설립에 대해서 언급되고 부속서로 자세한 설명이 뒷받침되었으며 이를 위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이 더 이상 인프라 구축 등 외형적 경제발전의 구축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의 기반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남남협력의 새로운 개발협력의 공여국들이 늘어나면서 남남협력을 통한 기술이전과 지식공유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더 이상 기술이전과 지식공유가 서구 선진국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신흥공여국들이 개발협력을 통해서 과학기술혁신의 역량강화를 개발도상국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과기 ODA 사업 현황

사업명	'14예산	'15예산	증감
1. 개도국과학기술지원	**2,150**	**2,860**	**710**
• 기관간협력지원	950	950	0
•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지원(현지)	1,000	1,500	500
• 지구촌기술나눔센터 지원(국내)	200	410	210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5) "미래부 ODA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부문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과학기술관련 ODA 사업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국제기구(UNDP, UN ESCAP, IAEA, ITU 등)에 대한 분담금 사업과 더불어 양자 차원의 ODA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 ODA는 양자연구개발협력 및 인력교류사업부터 시작되어 적정과학기술센터를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현지설립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적정기술센터는 현지 대학 등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적정기술의 개발에서 상용화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KOICA가 진행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혁신 ODA사업과 연계성이 높으며 이들 거점센터사업들과 개도국협력지원사업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사업의 확산사업으로서 KOICA 사업과의 연계성을 공동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2011. “개도국의 역량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2015. “미래부 ODA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이명진 외. 2014. “글로벌 STI 플랫폼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우성 외. 2010. “아세안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 연구: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우성 외. 2013. “한국형 과학기술 ODA 로드맵”. 미래창조과학부

장용석 외. 2012. “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범 외. 2013. “청색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ICA. 2015. “Mainstreaming STI in KOICA’s ODA”. 제29차 개발협력포럼. 한국국제협력단

U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SDG 에너지 ODA 전략 제언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시장 조성

황인철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전략실 팀장)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SDGs 7번 목표에 대한 이해
III. 한국의 대응전략 방향
IV. 제언: 지속가능한 에너지 ODA 전략
V. 끝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올 해는 지난 2000년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종료시점이다.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2014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제시되었다. 총 17개 목표 중 7번 목표가 에너지에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 강화'란 목표가 제시되었다. 본 원고는 2015년 11월 24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주최한 제29회 개발협력포럼의 3번째 세션 주제였던 기술환경에너지 중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발표되고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SDGs에 부합한 한국형 에너지 ODA 전략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과 개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가 전 세계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2년 12월에 UN총회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10년 계획(2014-2024)'이 채택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2013년 6월에는 세계은행(WB) 그룹에서 에너지 분야 전략으로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4년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서 SE4ALL 목표 중 3번째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배 확대를 IRENA 목표(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로 채택하였다. 이렇듯 '지속가능에너지'는 에너지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UN에서 새로 제시한 SDGs에도 '지속가능에너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Post-2015 중장기 ODA 전략을 수립할 때 SDGs의 지속가능에너지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SDG 7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II. SDG 7에 대한 이해

SDG 7에 대한 이해에는 〈표 1〉과 같은 5개의 세부 목표(Targets)가 있다.

〈표 1〉 SDG 7 세부목표

번호	세부목표(Targets)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공 보장 (By 2030, ensure universal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and modern energy services)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의 실질적인 증대 (By 2030, increase substantially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global energy mix)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속도 두 배 확대 (By 2030, double the global rate of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7.a	선진적이고 보다 깨끗한 화석연료 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 증대와 에너지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By 2030,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acilitate access to clea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including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advanced and cleaner fossil-fuel technology, and promote investment in energy infrastructure and clean energy technology)
7.b	모든 개발도상국에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기술의 업그레이드 (By 2030, expand infrastructure and upgrade technology for supplying modern and sustainable energy services for all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programmes of support)

출처: 기경석, "SDG 7(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 강화", 제29회 개발협력포럼 세션3 발표자료

동 세부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표 1-2와 같은 지표가 제시되었다.

〈표 2〉 SDG 7 세부 목표 관련 성과지표(안)

번호	세부목표(Targets)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공 보장
지표(안)	전기에너지 접근 인구비율(%)/(World Bank, SE4ALL)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의 실질적인 증대
지표(안)	전체 국내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UNSD/OECD)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속도 두 배 확대
지표(안)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있어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율(UNSD)
7.a	선진적이고 보다 깨끗한 화석연료 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 증대와 에너지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지표(안)	에너지 분양에서 총 탄소 집약도 개선(GHG/TFC in CO2 equivalents)/UNFCCC
7.b	모든 개발도상국에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기술의 업그레이드
지표(안)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있어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율(UNSD)

출처: UNSD. 2015.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 List"

위에서 나온 SDG 7을 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면 크게 3가지(에너지 불평등, 보건, 기후변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에너지 불평등을 살펴보자. 7.1과 7.b가 이 주제에 해당된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해당되는 28억 명의 사람들은 난방과 취사를 위해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인구 중 대부분(약 95%)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다(WHO 2014).

다음 두 번째 주제인 보건을 살펴보자. 이 주제는 여성과 영아의 보건 관점에서 본 에너지 문제로서 7.1과 7.a, 7.b에 여기에 해당된다. 취사나 난방목적으로 전통적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는 약 2~3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발생되는 유해 연기로 인해 매년 약 4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O 2014).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기후변화 문제는 7.2와 7.3, 7.가 해당된다. 210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표면 온도가 4도 가량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World Bank 2012). 기후전문가들은 지구 평균온도 2도 상승을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은 산업(19%)과 에너지(26%)에서 발생(IPCC 2007)됨에 따라 에너지가 지구온난화 문제 와 그 해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 ODA 전략을 적절히 수립한다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 부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III. 한국의 대응전략 방향

최근 정부는 올해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에너지신산업에 포함되는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등은 SDG 7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분류이다. 제29회 개발협력포럼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경석 에너지전문관은 4가지 분야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7.1 에너지 접근성에 대해서는 '농촌전력화' 사업으로 개도국 전력 소외지를 대상으로 신규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소득수준을 개선시켜주는 종합적 농촌개발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7.2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송배전 효율 향상' 사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가나, 이집트,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송배전망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송전망을 중심으로 한 효율개선 사업은 전략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7.3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태양광과 소수력 중심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은 태양광과 소수력 분야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범분야 연계' 사업으로는 8개 중점 국가에 대한 지원세부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8개 중점 국가는 아프리카 4개 국가(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와 아시아 4개 국가(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로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 범 분야와 연계한 종합적 에너지 프로그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IV. 제언: 지속가능한 에너지 ODA 전략

한국의 에너지 ODA 중장기 전략은 SDG 7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ODA' 전략이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에너지접근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3가지 주제에 대해 타겟 권역과 국가, 사업 등을 선정하여 집중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 타겟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야별 타겟 권역 및 국가유형, 사업

주제	에너지접근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권역	아프리카, 서남아	동남아, 중앙아	중앙아, 서남아
국가유형	최빈국	도서국, 내륙국	제조업 국가
지역	농촌지역	도서지역, 내륙 오지	산업단지, 도심(건물)
사업	소형디젤발전기(전기) 청정 쿡스토브(열)	태양광 대여, 에너지자립섬	에너지진단, LED, ESCO

출처: 황인철. "Fuel for Thought". 2015. 제29회 개발협력포럼 세션3 발표자료

둘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도국 현지의 청정에너지시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효율을 예로 든다면, ESCO[1], LED 조명 보급 등 한국의 에너지효율정책과 세부 실행 기준 및 절차들을 현지화 해 다년간에 걸쳐 에너지효율제도가 안착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에너지효율제도가 안착되면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에너지효율사업자들의 생태계, 즉 에너지효율시장이 생성될 것이고 이 후부터는 외부의 지원 없이도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한국의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현지화 해 전수하고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본 후 확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 태양광설비 설치 업자 및 유지보수업자, 모바일 뱅킹을 통한 할부금 징수 등 관련 파이낸싱 등 대여사업과 관련된 생태계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Energy Service Company.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을 조달하여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투자에 따른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업

현지 청정에너지시장 조성 지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 사항은 바로 현지 역량강화 교육이다.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시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토착적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역량강화 교육은 현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Train the Trainer' 방식을 통해, 현지에서 자국어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현지 우수인력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통해 인력이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시장 조성이란 기본 취지와 부합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또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권역별 중심국가에 '신재생에너지 A/S 허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개도국에 다수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유지보수의 부재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설비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ODA 사업의 현실이다. 이 경우 당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 중심국가에 유지보수인력이 상주하는 A/S허브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S허브 센터에서는 직접 유지보수도 하지만, 필요시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부품을 신청하거나 현지 주민 대신 제조업체의 A/S를 요청함으로써, 말 그대로 A/S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 하다. 허브 센터의 상주 근무 인력으로는 퇴직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허브 센터에서는 현지 인력 양성 등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허브 센터는 굳이 신규 건물을 짓거나 임차할 필요 없이 현지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한다면 대학이나 연구소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A/S허브 센터 역할도 수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수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 부문, 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다. 오지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새마을 사업과 같은 농업 ODA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 펌프를 이용한 과수농가 소득 확대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에 태양광 펌프를 설치하여 전기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면, 에너지접근성 개선과 농가소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과의 연계도 추진해 볼 만하다. 표 2-1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동남아, 카리브 지역 등의 도서지역에 태양광과 ESS를 설치하는 '에너지자립섬' 모델을 추진한다면, 도서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에너지신산업 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내륙이나 중앙아시아 내륙지역과 같은 내륙 오지에 '태양광 대여' 모델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자가 건물 소유주를 대신하여 대상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후 렌탈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정수기 렌탈과 같이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이

지속적인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은행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모바일 뱅킹을 통한 렌탈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 등에는 ECREEE(서아프리카)[2],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RCREEE)[3], OLADE(중남미)[4] 등 다양한 권역별 에너지기구들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다(UNIDO 2015). 이 외에도 EACREEE(동아프리카)[5], SACREEE(남아프리카)[6], CCREEE(카리브)[7], PCREEE[8]등이 설립 준비 중에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권역별 에너지기구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권역별 에너지기구들과 협력하여 해당 권역에서 에너지 ODA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현지 지향적이면서 권역별 거시차원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현지 정부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권역별 에너지 기구들과 권역별 차원 또는 국가별 차원의 역량강화 교육,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현지 수용성과 사업 효과성이 높은 맞춤형 ODA와 권역형 ODA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V. 끝맺는 말

2015년 12월 12일 드디어 18년 동안 끌어왔던 기후변화협상이 타결되어 역사적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파리협정은 2020년부터 현재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예정이다. 기존의 교토의정서가 하향식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부과 받은 반면, 파리협정은 상향식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협정이 각 국의 에너지 정책 및 산업, 건물, 수송 등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2) ECREEE: ECOWAS Center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서아프리카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센터
3) RCREEE: Regional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아랍지역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센터
4) OLADE: Organizacioón Latinoamericana de Energía.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
5) EACREEE: East African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동아프리카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센터
6) SACREEE: South African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남아프리카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센터
7) CCREEE: Carribbean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카리브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센터
8) PCREEE: Pacific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태평양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센터

이다. 그런 맥락에서 에너지 ODA 전략은 SDGs에 부합하면서 '파리협정'의 취지에도 일치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ODA사업 모델은 관련 제도 안착 지원과 인력 양성,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현지에 청정에너지시장이 조성되어 스스로의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아울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SDGs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지원, 송지혜. 2014.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동향 및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편.『KIEP 지역경제 포커스』Vol 8. no 30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Forum.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to Z”.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

기경석. “SDG 7(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 강화”. 2015. 제29회 개발협력포럼 세션3(2015.11.24, KOICA연수센터)

UNSD. 2015.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 List” http://www.iwgia.org/images/stories/sections/envir-and-devel/sust-development/docs/roundtable/Proposed_Priority_Indicator_List.pdf

WHO. “WHO Guidelines for Indoor Air Quality: Household Fuel Combustion”. 2014.

IPCC.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2007

World Bank. “Turn Down the Heat: Confronting the New Climate Normal”. 2012

황인철. “Fuel for Thought”. 2015. 제29회 개발협력포럼 세션3(2015.11.24, KOICA연수센터)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2015.12.13)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sYBc6rCQEx2n8OgXD1LsYuoSNaIeH5wpwmxcrwXlrBaSxMNWOj3LemncQ5CxsC9R.meweb1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MasterId=1&boardCategoryId=&boardId=587540&decorator=

UNIDO Global Network of Regional Sustainable Energy Centres. 2015. “A post-2015 South-South and Triangular partnership to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and SE4ALL.”

http://www.unido.org/what-we-do/environment/o591190/partnerships-and-networks/global-network-of-regional-sustainable-energy-centres.html

기후변화 적응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시

이정호[1], 강주연[2]

목 차

Ⅰ. 서론
Ⅱ. 국내 · 외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 규모 분석
Ⅲ. 문제점 및 시사점
Ⅳ. 국제 기후변화 적응 지원 사업 추진방향

Ⅰ. 서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13년 발간된 제1작업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해 21세기 후반(2081-2100년)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예측하여도 '1986-2005년 대비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활동이 계속될 경우 최대 4.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2013 IPCC). 또한 IPCC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초대형 태풍이나 초장기 가뭄 등 유례가 없었던 극한기상현상(Extreme Weather Events)의 발생 빈도가 점차 잦아지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극한 기상현상의 주요 발생지역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위치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도상국의 기상 재난에 대한 회복력은 아무래도 선

1)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위원(sr87sr86@kei.re.kr, Tel: 044-415-7682)
2)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원(jykang@kei.re.kr, Tel: 044-415-7441)

진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물적 또는 인적 인프라의 지원과 대책수립이 극한 기상현상에 대한 회복력 강화와 직결되며, 국제적인 개발협력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향후 15년간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합의에 의해 채택되어, 기후변화 대응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 목표로 설정되었고, 동년 12월 13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당사국이 제출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요소가 강화된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지속가능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참여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해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및 공적개발원조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무상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가로서, 개발협력에 대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의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경우 2008년부터 5년간 수행되었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EACP)은 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하나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통한 국제 협력사업과 지난 경제급성장의 경험을 통해 경제 발전 및 환경 보전의 경험을 전파하는 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또한 국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 및 국제화 요구 증대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사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확대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 하에 기후변화 적응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3]을 설립하였고,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를 수립, 전국 단위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및 취약성평가 체계 마련 등 다수의 적응정책 기반(Infra)을 기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개도국 간 기후변화 적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좀 더 협의의 의미에서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국제 협력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동 분야의 국제 협력 사업의 다양화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2009년 7월 9일,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내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설립되었다.

II. 국내 · 외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 규모 분석

1. 환경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개발,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집행 총괄 부서인 환경부의 2013년도 기준 출연된 공적개발원조 총액은 172.9억 원으로, 2012년의 124.3억 원 대비 총액 기준으로 39% 가량 증가하였다(〈표 1〉). 2013년도 총액 중 42%인 71.9억 원은 유엔환경계획(UNE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 환경부문 분담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잔여 101억 원(58%)은 국제 환경협력사업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로 사용되었다. 국제기구 분담금 중에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도 총액은 13억 원으로, 총액 대비 7.5%에 불과한 편이다(〈표 2〉).

〈표 1〉 환경부 공적개발원조 사업내용(12년~13년)

구분	환경부 공적개발원조 사업내용	'12년도 금액 (억원)	'13년도 금액 (억원)
총액		124.3	172.9
	UNEP, OECD 등 국제기구 분담금*	51.6	71.9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화사업	30.0	40.0
	해외환경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13.0	15.0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18.0	30.0
	해외 환경산업센터 운영	5.7	10.0
	해외환경기술인력 초청연수	2.0	2.0
	아프리카 마을상수도지원	4.0	4.0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표 2〉 국제기구 분담금 세부내역(13년도)

구분	금액(백만원)
바젤협약분담금(공적개발원조)	142
자연보전국제협력(공적개발원조)	1,196
화학물질관리 국제협력	416

지구환경금융부담금(공적개발원조)	2,350
OECD 및 유럽환경협력	38
기후변화대응국제협력(공적개발원조)	**1,300**
UN 산하 국제기구 분담금	623
한국–UNEP녹색경제이행지원사업(공적개발원조)	1,130
합계	7,195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2. 한국국제협력단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대표적 랜드마크 사례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EACP)'이라 할 수 있다. EACP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아시아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녹색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으로서 2008년부터 5년간 미화 2억 달러의 자금이 공적개발원조(ODA)형태로 지원되었으며, 이는 당시 국내 주요기관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총 20개국에 32개 사업이 양자원조 사업 형태로 지원되었으며, 주로 물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다(〈표 3〉).[4)]

〈표 3〉 EACP 사업 분야 (13년도)

5대 중점분야 양자사업 (물 관리, 저탄소 에너지, 저탄소 도시, 산림과 바이오매스, 폐기물 처리)	10개국 20개 사업
물 랜드마크 사업	3개국 3개 사업
국제기구 사업	7개 기구 9개 사업

출처: http://eacp.koica.go.kr의 자료 일부 발췌

4) http://eacp.koica.go.kr 의 자료 일부 발췌

3. 일본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국제협력 및 개발 원조에 대한 실무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는 2010년 기준 약 80억 달러가 집행되어 일본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40%를 차지하며, 주로 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상 · 하수도 및 친환경적 발전시설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국익, 자국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환경 공적개발원조 역시 농업, 공업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자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 총액 중 기술 협력은 26.3억 달러로 약 45% 차지하는 것만 봐도 일본의 원조 정책의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 지원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이른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통해, 2010년부터 3년간 총 150억불 규모 자금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이행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4. 독일

독일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수자원 및 수질관리의 선진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원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의 경우 사막화 방지와 건조지역에 대한 천연자원 관리를 원조 사업의 중점 분야로 선정 · 관리하고, 선진국 최초로 환경 국제원조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원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010년 기준 미화 50억 달러 수준으로, 기타 유럽국가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06-'07년, '08-'09년을 제외하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2010년까지의 국제협력사업 상세규모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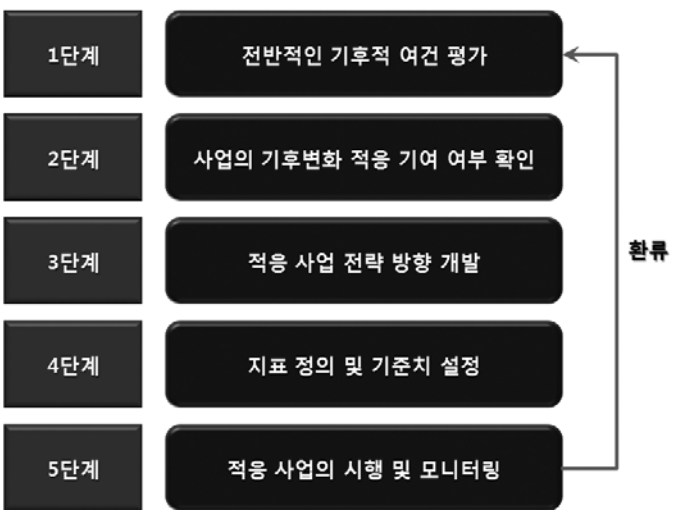
〈표 4〉 독일의 국제협력사업 투자 규모

	연도별 투자액 (단위: 백만 USD)		
	2008년	2009년	2010년
생물다양성 및 사막화 방지 (RIO 협약 관련 사업)	300	500	800
기후변화 완화	2,000	800	3,200
기후변화 적응			700

출처: http://www.giz.de

독일의 경우, 정부 기관의 주요 기능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유형에 차이를 보인다. 독일 연방정부 내 경제개발협력부(BMZ)는[5] 기후변화 문제를 개발협력과 통합하고 개도국의 제도 개혁, 투자환경 조성, 전략 · 프로그램 수립 등을 위해 국제 원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자원조로 UN 지구환경기금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약 3억 달러를 공여하였으며, 양자 공적개발원조로는 '10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 사업에 총 34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국제협력단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 독일 국제협력공사(GIZ)[6]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상재해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적 기후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내 기후 친화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책 · 제도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발전소 및 전력망 운영의 기술?경제적 분석,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GIZ는 인도 농촌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시범사업을 토대로 적응 사업의 설계, 평가체계 개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구축까지의 일련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단계별 지원 모델을 수립하였는데(GIZ 2012), 이는 〈그림 1〉의 흐름도와 같다.

〈그림 1〉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 단계별 지원 모델



출처: GIZ (2012)

5) BMZ: 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6) Deutsche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사업 대상지역의 기후적 여건 평가를 통해 현재 및 미래 기후 조건,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위험 및 취약성 평가, 적응사업 추진에 대한 수혜국의 수요확인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이다. 그 다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기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업 대상지역 이해당사자의 적응능력 배양에 기여 여부, 기후변화 위험 또는 취약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여부,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등이 포함된다. 적응 사업의 전략방향 개발 단계에서는 사업의 예상되는 결과 추론 및 결과 체계(전략)의 설정, 사업의 진행과정과 최종성과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체계를 구성한다. 사업 결과의 평가를 위한 지표는 부문, 목적, 대상 범위, 지표(항목 및 형태), 필요 자료, 조사 방법, 소요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의 기준치(baseline)는 사업 대상 지역의 기후정보, 사회경제, 법 · 정책, 생태계 서비스, 지자체 고유의 전략 및 계획 자료 등을 토대로 기준 범주를 설정한다. 이 때, 사업 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능력 검토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적응사업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설정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사업의 결과체계 및 시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모니터링 절차와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이 환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순환적 모델을 구축한 것이 큰 특징이다.

III. 문제점 및 시사점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부문 국제협력 규모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대상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난 10년간 4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는 자금을 지출하는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별로 따로 작성되어, 효율적인 국제협력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정보 공유 체계가 유지되는 한 부처별 공여된 원조금의 빠른 추적(예, 국제기구로의 공여 규모, 부처 간 규모, 공여된 원조금으로 시행된 사업 등)이 불가하여, 종합적인 공적원조 전략 및 계획수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2008년 이후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정책기조 하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적개발원조 전문기관에서 보유한 통계체계 상 기후변화 · 환경이 독립된 분야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후변화 대응관련 공적개발원조의 사업성과 분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선 추진사업 선정 기준 설정 등의 기본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기술이전이나 능력배양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다각적인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즉, 프로젝트 위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전개는 공여국 시각에서의 기준, 지표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수혜국 내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투입 예정인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에서는 적응사업 성과 평가를 주로 재원 집행에 따른 결과 효율성 및 예산 투명성,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도국 적응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자체적인 적응능력의 계발'에 있다고 할 때, 수혜국의 능력배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독일 사례에서는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개도국 국제 협력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의 가시적인 가이드라인 사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는 데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사례는 현실성은 다소 부족하나, 체계 및 적용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라 할 수 있는 바, 금번 연구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게 되었다.

Ⅳ. 국제 기후변화 적응 지원사업 추진방향

전술된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부문 국제 협력 규모의 분석 결과,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부문 국제협력 및 원조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중 적응 부문에만 한정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기술하며, 추진방향을 단기적 및 장기적 관점에서 구분하여 제안한다.

1. 단기적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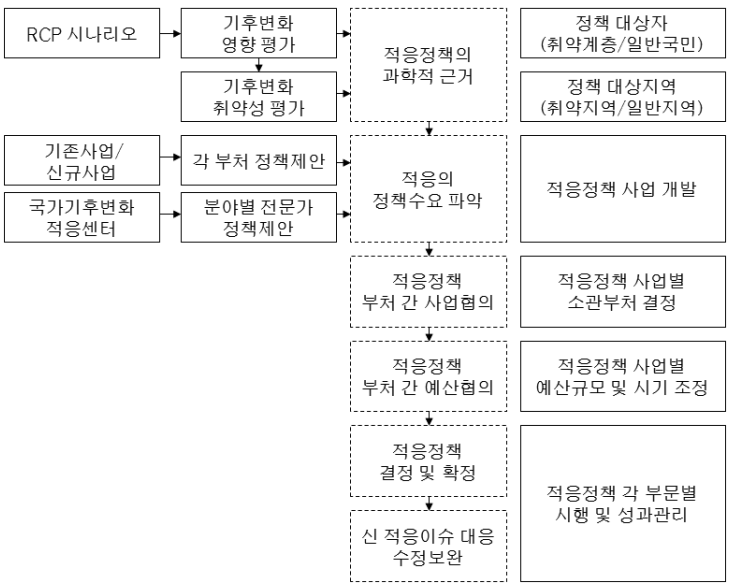
가. 국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일반 모델 구축 및 해외 진출 모색

환경부 및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은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정책 개발 및 이행 지원, 정보 확산 및 국제 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본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및 보유 노하우 중 하나인 국가 단위, 지자체 단위 및 지역사회 단위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경험을 2010년 이후 6년간 지속적으로 축적해오고 있는바

(그림 2), 이러한 노하우를 통한 기술이전 모델을 구축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실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국가 및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과정을 단계별로 일반화하여, 어느 국가에도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단계별로 고도화하는 국제협력사업 전략을 채택 ·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이른바 '칸쿤 적응 프레임워크'가 채택된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적응 논의에서 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수립과 지원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의제화되는 현 상황을 고려,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적응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수원국의 적응역량(인식변화, 제도 · 인프라 등) 개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의 적용 · 유지관리 · 확산 등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종합 프로그램, 국가 단위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사례, 지역 단위 적응대책 계획 및 이행 관련 체계 및 사례 등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2〉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과정[7)]



출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업무를 위한 내부서류 발췌

7)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업무 개념도(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업무를 위한 내부서류 발췌)

나.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중 · 장기 전략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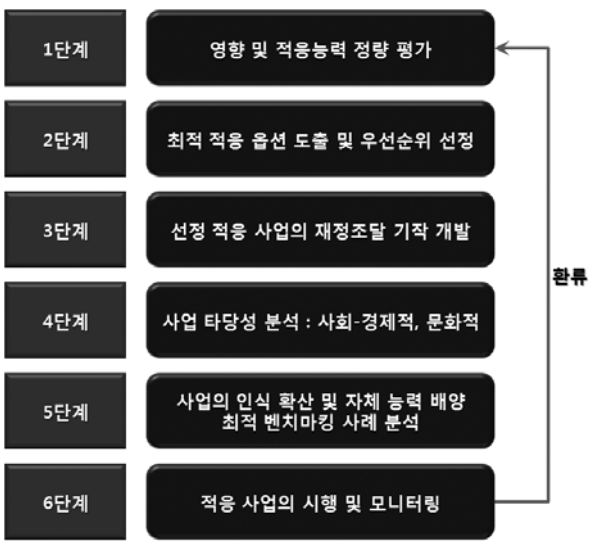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단계적 특징을 보유한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중 · 장기 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먼저, 그간 추진되었던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 중 기후변화 적응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된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정확한 분류 및 분석을 정량화하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의 우선순위 부문 및 국가, 협력 기준 및 절차 등의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현재 개도국이 수행 또는 수행 예정인 개발사업 중 기후변화 적응이 주류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이에 대한 단계적 방법론 및 노하우를 정형화된 체계로 일반화함으로서, 개도국 담당자가 기후변화 적응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을 제공한다. 즉,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적응 정책 수립 및 평가체계(예: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등) 등 무형의 노하우와 민간기업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도구 등을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체계를 개발 · 보급한다.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림 3〉과 같은 국내 여건 및 경험, 추진 옵션 등에 알맞은 단계별 적응 사업 추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의 컨트롤 타워 설정 및 추진 체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업무 분장) 수립한 후, 연차별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의 상세 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3〉 개도국 적응 사업 추진 체계의 개선



출처: Le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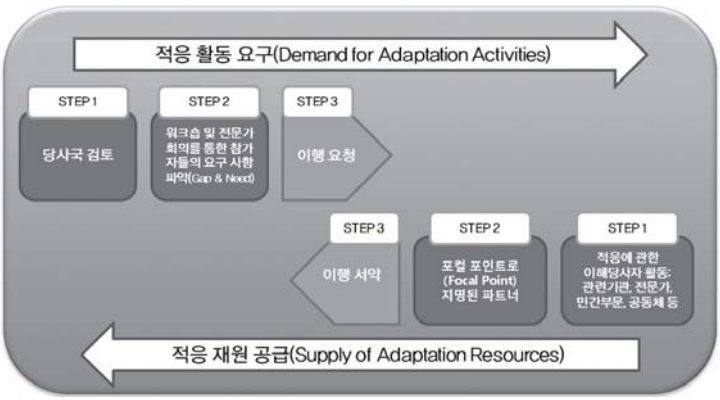
2. 장기적 추진계획

가. 국제기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개도국 적응 역량 강화 지원

기후변화 적응 분야 국제 협력에서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 UNFCCC) 프레임 속에서의 적응분야를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UNFCCC의 적응위원회 또는 부속 이행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airobi Work Programme, NWP)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다.

NWP는 2005년부터 시작된 UNFCCC 차원의 대표적 기후변화 적응지원 프로그램이며, 적응 이행을 위해 '이행요청(적응수요, 수혜국)'과 '이행서약(지원방안, 수원국)'의 쌍방향 절충절차를 통해 각종 적응 활동을 추진한다(〈그림 4〉, 〈표 5〉). NWP는 적응전문가, 정책결정자, 당사자 들이 함께 수요와 지원 규모를 국제회의를 통해 협의한 후, 가장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선정, 지원하며, 현재 FAO, UNDP, UNEP, WMO 등 약 60여개 이상의 국제 및 선진국 소속 기구들이 참여 파트너로서 활약하고 있으나 국내기관 참여는 전무하다. 현재 약 150개의 적응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의 NWP 참여를 통해 국내외 적응지원 사업(예,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지자체 지원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상호 역량강화 도모할 수 있다.

〈그림 4〉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이행 진행 절차



출처: UNFCCC (2015)

〈표 5〉 NWP에서 실시된 '이행 서약' 관련 11개 작업 영역

구분	이행 서약 관련 11개 작업 영역	분류
1	방법 및 도구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2	자료 및 관찰	
3	기후 모델링, 시나리오 및 다운스케일링	
4	기후 위험 및 극한 현상	
5	사회 경제학적 정보	
6	적응계획 및 실행	적응 계획 조치 및 활동
7	연구	
8	적응 기술	
9	경제적 다각화	
10	지역 네트워크 협력	추가 적응 영역
11	적응 옵션에 관한 비용 및 이익	

출처: UNFCCC (2015)

나. 지속적인 적응능력 배양 실시 : 자발적 적응의 추진

개발도상국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관련 국제기금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 국제 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구상 및 계획, 실제 제안서 작성을 개도국 정부 담당자들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 6〉와 같은 포괄적 능력배양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6〉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능력배양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구성 단계	단계별 내용
포괄적 능력배양 프로그램 구성 ↓	분석 능력 배양	세부 프로그램 구성 능력, fund의 구조 및 특성 분석
	설계 능력 배양	기후변화 적응 융합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과물의 비주얼화, fund 수득 절차
	이행 능력 배양	사업 계획의 실현 과정 및 모니터링 능력 배양
	피드백 및 조정 능력 배양	proposal의 작성 및 검토, fund 신청을 위한 절차적 능력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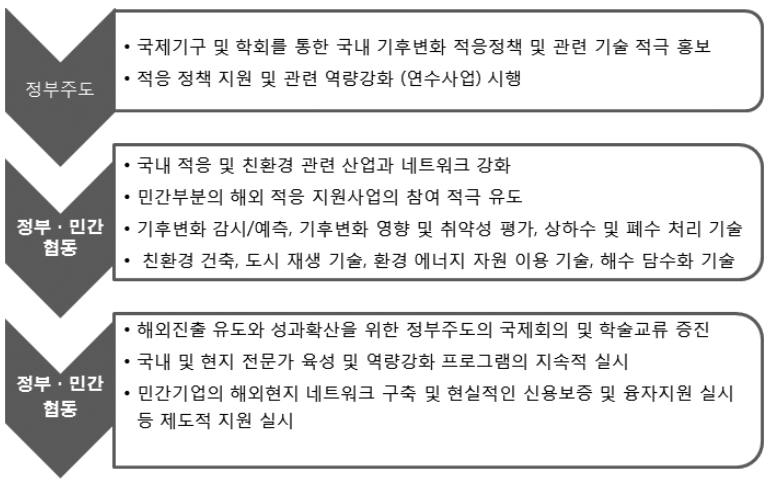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다. 해외 적응 전략 지원 및 관련 산업 진출 프로그램 수행

국내의 종합적 적응정책 수립과 이행의 일련의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연수, 기후변화 정책지원, 국내 관련 산업 해외진출의 과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산업 진출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제기구(UNEP, ADB, UNFCCC, GGGI) 프레임의 참여 등을 통하여 국내의 적응사례와 정책 및 관련기술을 적극 홍보, 국제 적응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고, 확대된 적응협력 네트워크에 국내 적응 관련 기술보유 기업들을 적응사업에 연계하여 능동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수질 및 물관리, 물공급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내 최대 환경산업시장을 차지(41%, 약18조원)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상 · 하수 및 폐수관리 기술보유 업체들을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의 현지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 내 기관 등의 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그림 5〉). 먼저, 정부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참여 및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 보증 및 융자 지원 등의 해외 적응관련 산업의 종합적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지원 프로그램 수행 시 경쟁력 있는 적응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기술검증, 해외 현지의 각종 제도 및 법에 대한 철저한 파악, 진출 대상국의 신뢰할 만한 정부 및 현지기업과 공동사업 및 각종 지원 기술의 현지화 실시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수행 원칙을 설정하여 정부 주도 하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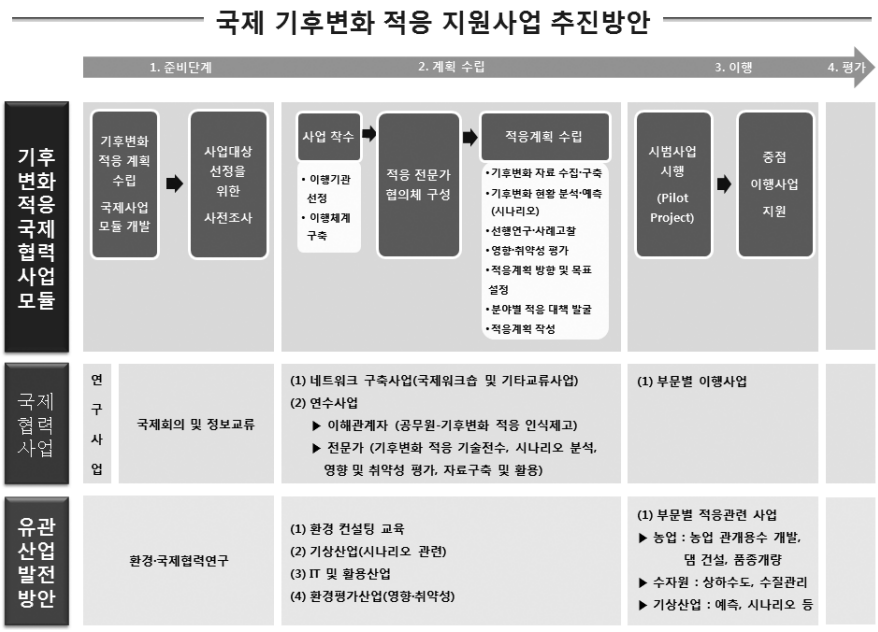
〈그림 5〉 개도국 적응 지원 및 관련산업 진출 전략



출처: 저자 작성

상기에 기술된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및 국제 원조 장 · 단기 계획을 종합하고 일반화 모델을 기초로 한 국제 기후변화 적응 지원사업 추진 방향은 〈그림 6〉과 같다. 준비 → 계획수립 → 이행 → 평가로 구성된 기후변화 적응 사업 과정을 환경 산업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 증대 및 수혜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기후변화 적응 국제 지원 사업 추진방안



출처: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2013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안)” [회의 안건 자료]

IPCC. 2013.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tocker, T.F., D. Qin, G.-K. Plattner, M. Tignor, S.K. Allen, J. Boschung, A. Nauels, Y. Xia, V. Bex and P.M. Midgley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1535 pp, doi:10.1017/CBO978110741532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per 2009”, http://www.mofa.go.jp/policy/oda/white/2009/html/honbun/b1/s3_1.html

U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UNFCCC. 2015. “Nairobi work programme on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NWP)”,

https://www3.unfccc.int/pls/apex/f?p=333:1:4343410395994272

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2012. Adaptation made to measure. Deutsche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Lee, J. 2013. Demonstration of the ecotown Framework in Municipality of San Vicente, The Philippines. GGGI

GIZ. 2013. ODA of Germany,

http://www.giz.de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
:KOICA 교육전략(2016–20)(안)

유성상[1], 장은정[2]

목 차

I. 들어가면서
II. KOICA 교육 전략(2016–2020)
III. 한국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의 주요 쟁점
1. SDGs 교육목표에 관한 비판적 검토
2. KOICA 중장기 전략방안에 대한 논의
IV. 나가면서

I. 들어가면서

2015년 이후 전 지구적 교육개발협력 의제는 '모든 이들을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기회의 보장'으로 요약된다. UNESCO와 UNICEF, World Bank를 포함하는 교육개발 관련 기구들이 중심이 되었던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향후 과제는 UN에서 지난 9월 공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교육 분야 목표와 일치된 것으로 결정되었다(UN 2015). 7개의 목표와 3개의 추진 전략을 포함한 교육 분야 행동강령은 11월 UNESCO 총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UNESCO 2015b). MDGs의 8개 목표보다 훨씬 많은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타겟을 제시한 SDGs는 2030년까지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논의의 토대가 될 것이다.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KOICA 교육보건팀 전문관

교육개발협력 의제로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교육(초 · 중등교육) △영유아 보육 · 교육 △직능 ·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고등교육 · 평생교육) △직업을 위한 기술 △성차별 제거 및 취약계층 보포 △문해 및 기초 수리력 보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 획득'과 실행목표로 '△교육시설 및 학습 환경 제공 △장학금 수 확대 △양질의 교원 공급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개발목표들이 1990년 좀티엔 회의에서 EFA의 최초 의제로 제시되었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다카르 회의를 거치면서 교육개발의제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지하게 되었다.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교육, 그리고 청소년-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학습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MDGs에서 양적인 기회의 확대에 강한 관심을 보였었다면, SDGs에서는 양적인 기회의 부여는 물론 교육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 성과라든지, 기술개발 그리고 학습환경개선 및 교사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로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있는 '인권으로의 교육'은 이제 수사적인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차원의 목표로 제시되었고, 향후 15년 동안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에 발표될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목표별 구체적인 지표가 아직 작업 중에 있기는 하지만, 복잡한 교육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중요한 틀에 대한 사려 깊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의 국제개발협력 담론의 플랫폼으로서 이번 제29회 국제개발협력포럼은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즉, KOICA에서 향후 5년 동안 중기 전략을 통하여 SDGs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통적 개발목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의 전략의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SDGs의 4번째 목표였던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각 세부목표들이 한국사회에서 보다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쟁점들이 제공되고,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 따라 향후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제에 관한 논의거리를 위한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생산적인 논의토대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될 것이다. 하나는 KOICA에서 마련한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중기 발전전략(안)을 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매개로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두 가지 방향에 있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우선, SDGs의 교육목표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KOICA 중기전략에 관한 것이다. 특히 KOICA의 중기 추진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보다는 이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관한 내용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 및 실행전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KOICA 교육 전략(2016-2020)

국제사회는 2000-2015 기간 동안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라는 MDGs 두 번째 목표를 달성기 위하여 지난 15년간 초등학교 등록률 제고를 위해 교육 분야 지원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전 세계 평균 초등학교 순 취학률(net enrollment ratio)은 2000년 83%에서 2012년 90%로 크게 증가되었고, 그 결과 학교 밖 아동 수는 2000년 1억 명에서 2012년 5,8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UNESCO 2015a).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 밖 아동 수 감소 속도가 늦춰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분쟁지역의 아동들이라는 사실은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 더 많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개발도상국 아동 중 4분의 1은 중도 탈락 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초적 문해 능력(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전 세계 7,800만 명의 성인과 1억 2,600만 명의 청소년 중 6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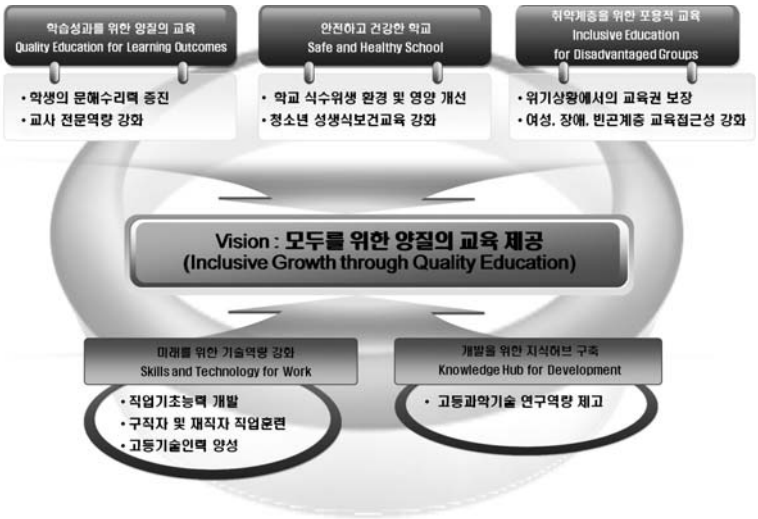
KOICA는 SDGs 교육 목표별 분석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KOICA의 대응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이미 정립한 바 있다(장은정 외 2015). KOICA는 제29회 국제개발협력포럼을 계기로 2016-2020 기간 추진할 KOICA 교육 전략 초안을 국내 교육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SDGs의 첫 번째 5개년을 이끌어 갈 기관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SDGs 시대를 맞아 국내적으로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2기 국가협력전략(CPS) 수립되고 있는 바, KOICA는 국가 차원 차기 ODA 전략 수립에 따른 KOICA 교육 분야 사업 추진전략 및 국가별 교육 프로그램 수립방향 연계하여 차기 교육 전략을 수립해가고자 한다. 또한 교육 ODA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하여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프로젝트 위주 성과관리에서 탈피하여 전략목표 중심 다양한 사업형태별 핵심 성과지표 풀(pool)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성과관리를 지향하고자 한다.

KOICA는 지난 포럼에서 학습 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미래를 위한 기술역량 강화, 개발을 위한 지식허브 구축 등 다섯 가지 세부목표〈그림 1 참조〉를 제시하고 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포럼에서 제시된 전략(안)은 2015년 3월부터 8개월여 간에 걸쳐 KOICA와 시민사회가 테스크포스[3]를 구

3) KOICA-시민사회 TF는 KOICA의 제안으로 국내 시민사회 대표기관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교육개발협력분과 내에서 자체 선정한 시민사회 기관와의 협력을 통해 구성함.

〈그림 1〉 KOICA 교육 전략 (2016-2020) 초안



출처: 제29회 개발협력포럼 교육 세션 발표자료

성하여 발간한 '2016-2020년 기초 및 취약계층 교육지원 공동제안서'를 통해 특히 기초교육과 취약계층 대상 교육지원에 대한 공동논의에 기반을 두어 수립된 것이다.

KOICA는 포럼을 통해 각 세부목표(안)의 주요 내용과 성과지표 pool을 공유하고, 더불어 지난 UN 개발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의 구체 내용 및 파트너십 방안에 대한 KOICA의 계획을 발표하였다.[4)]

III. 한국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의 주요 쟁점

1. SDGs 교육목표에 관한 비판적 검토

지속가능발전(SD)은 다섯 가지의 가치에 토대하고 있다. 5Ps(People, Planet, Peace, Prosperity, Partnership)로 상징되는 것들로, '사람,' '지구,' '평화,' '번영' 그리고 '협력'이다. 이를 상

4) 자세한 내용은 KOICA 홈페이지 'ODA알기'에 게시된 제29회 포럼 발표자료 및 동영상 참조.

기해 보면, 향후 전 지구적 발전의 근본적인 토대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교육은 단지 학교교육으로 표상되는 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 삶의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육적 관계'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제도, 사람과 환경, 사람과 공동체, 사람과 자본을 이어주는 것으로, 이것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사회적 진보나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Rogers 1995). 교육은 인간과 지구,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매개하고 발전적 상호작용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

실제 SDGs의 17개 전략을 교육을 중심으로 성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에서 교육의 필수불가결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7개 목표들을 살펴보면서, 교육이 단지 인간의 제도화된 형식교육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생 학습'이라는 용어가 단지 전 생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일어나는 형식, 무형식, 비형식 학습 전반을 개발(development)의 구성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 있어, 어쩌면 SDGs의 다른 목표들과의 관련에 대해서 살펴볼 때, 교육적 관계와 교육적 개발의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향후 커지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SDGs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목표가 보이는 특징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이 SDGs의 교육목표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기술해 볼 수 있다.

우선 제안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교육목표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SDGs의 교육목표는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까지 포괄하고 있다. 접근성 확대라는 양적 목표에서부터 학습 이후 구체적인 성과까지 측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질적 목표까지 아우르고 있다. 제도 안팎의 교육적 관계를 포괄적인 발전의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형식적 교육체제를 넘어 ESD, GCED,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등 비가시적인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까지 담고 있다.

교육의 성과는 단지 접근성에 의한 기회부여를 넘어서서 개인의 삶의 질을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직업세계로 연계할 수 있는 경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즉, 학교교육에서의 일반교육과 연계하여 직업기술교육/훈련은 직업연계의 가능성, 취업에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 유무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 향후 교육의제들이 교육의 질을 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리 새로울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달리 양질의 교육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학습 성과(academic performance) 측정 및 비교, 교사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여 교사들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 및 투입 강조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취약계층을 아우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고 보인다. 여성, 장애자, 원주민, 난민/이민자 등 기존의 개발목표에서 별도로 다루어졌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공동체를 적극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때문에 SDGs 교육목표가 갖는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하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작 어느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봐야한다.
- 둘. 지나치게 교육의 성과를 직업세계와 연계하다보면, 직업세계가 교육, 특히 제도화된 교육세계의 정책에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셋. 학습 성과 또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화되거나, 가시적인 시험 결과로 표상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교육본연의 교수-학습의 의미가 급속도록 퇴색될 수 있을 것이다.
- 넷, 성과로 측정하기 어려운 주제들, 즉 GCED, ESD, EIU 등의 활동과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활동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 관심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곧 현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OICA의 중기전략이 한국의 개발협력, 특히 교육 분야 개발협력에서 어떻게 이행/실현될 수 있는지 의미를 검토해보고 조망해보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2. KOICA 중장기 전략방안에 대한 논의

SDGs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KOICA 중장기 전략은 그 의미가 크다. 교육 분야의 경우 2011-2015년까지의 이전 전략에서 진일보한 가치와 사업영역을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논의가 SDGs의 교육 분야 목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행을 위한 전략 및 가치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다 실행 가능한 사업의 내용들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 형식의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1) 본 전략은 SDGs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7가지 목표 중 영유아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ESD/GCED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고 있다. 지난 MDGs에서 조차 강조되지 않고, 큰 진전이 없었던 영유아 교육에 대해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전략안에 따르면 다양한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염두

에 두고 사업을 형성, 추진할 의지를 보였음에도 굳이 영유아 교육이 제외된 근거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 제도로서의 초중등교육, 과학기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직업연계 기술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성과로 높은 취학률과 취학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환경의 개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 속에서의 형식교육에의 접근성 강화와 질 높은 교육학습 환경 구축, 그리고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목표 실현을 연계하고 있다.
- '질 높은 교육'에 대한 KOICA의 해석은 교사역량, 인프라 개선, 학습 성과, 구체적인 직업기술 습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KOICA의 이해가 이전 MDGs에서의 교육목표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한다면, 이번 전략은 '양질의 교육'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만한 실행수준의 방안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논의를 깊이 할 수 없지만, 향후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 본 전략은 SDGs 이행을 위한 어떤 가치에 입각해 있는가?

- 중기 전략은 지속가능성, 인권으로서의 교육, 포용성, 전문성 등의 가치들을 표방하고 있고, 사업성과 관리측면에서 효율성/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KOICA는 교육 분야의 목표 달성이라는 전 지구적 요구에 있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상징적으로 내세운 전략의 내용은 교육 분야의 중요한 가치를 잘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세부 목표를 아우르는 목표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 평생학습 제공'이라는 목표를 잘 인식하고 있다.

3) 본 전략은 SDGs 이행을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KOICA는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을 따르는 양자협력 기관이다. 따라서 DAC/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인 성과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의 추진과 평가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한 두 층위의 교육사업 내용은 이러한 KOICA의 성과관리 체제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1) 학습 성과 기반 교육의 질 강조, (2) 산업수요기반 직업훈련 강조, (3)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SDGs의 교육목표들은 어떠한 지표를 구체적인 성과로 인지하고, 실현할 것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SDGs에서의 교육목표는 성과지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는 MDGs에서의 지표가 양적 성장과 표면적인 개발의 측면을 측정

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SDGs에서는 비가시적이고 의식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와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실행목표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기존의 성과관리에 강조를 두던 KOICA에서 교육의 질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의 질 문제를 단지 학습 성과의 탁월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후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4) 'Better Life for Girls' 추진 전략에 관한 쟁점

한국은 2015년 10월에 열린 UN 개발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여아 및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 내용은 교육과 보건 분야, 그리고 구체적인 직업기술을 익히도록 하여 소득창출과 함께 공동체의 리더쉽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 세계 15개국(아시아 6개국, 아프리카 6개국, 중동 1국가, 중남미 2개국 + 기타)을 대상으로 한 여아들의 양질의 삶을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아 및 여성청소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제설정과 구체적인 사업재원 확보라는 것이 굳이 새로울 것은 없다. MDGs의 세 번째 목표와 SDGs의 다섯 번째 목표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성 평등을 개발의 목표로 제시한 만큼, 전 지구적인 성 차별, 성별 격차의 문제는 심각한 개발의 과제였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이번 약속은 적어도 개발협력의 큰 틀에서 성평등의 문제에 단지 수사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실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Better Life for Girls' 의제(initiative)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적어도 아래 이야기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여아의 교육은 사회문화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개발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해서,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다. 즉, 개도국의 실제 개인들의 삶 속에서 '여성 됨'의 의미와 '여아로 살아가기'의 실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는 매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 이러한 점에서 성공적인 '여아교육/보건'의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례가 바로 확산될 수 있는 또 다른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어렵다. 즉, 사례와 사례 간의 성과와 의미를 서로 공유

하고 여아 교육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여아들의 삶'을 둘러싼 차별과 문제는 단일하지 않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계급적/경제적인 모순이 공히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교육과 보건을 대표적인 실행 프로그램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과 보건 프로그램은 보다 문화적인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 한국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직 배워야 할 전문적인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성인지 제고 및 성차별 극복을 위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지, 특정 지역의 여아 교육/보건 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국제사회에서 여아/여성의 빈곤, 건강, 교육문제를 통한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 기구, 단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과연 우리나라의 지역전문가들과 젠더 전문가들이 충분한지부터 질문하는 것이 옳다.
- 지나치게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한다. 이는 여성의 차별이 단지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면, 당장의 개입과 지원으로 대단한 성과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지원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나가면서

일반적으로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KOICA가 지원하는 사업(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보인다. 특별히 SDGs의 학교교육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교육의 질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Better Life for Girls' 추진전략의 경우, 한국이 전 세계적인 성차별 문제에 보다 큰 관심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만큼, 재원의 추가확보까지 고려하여 본 전략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기 바란다.

SDGs에 조응하는 KOICA의 교육 분야 중기 전략(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 및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KOICA가 추진해 온 교육사업에서 기초교육–직업교육훈련–고등교육의 비중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아마 이러한 기조에서 향후 5년의 중기전략에서 동일한 영역에 대한 사업들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지금 제시한 중기전략과 이전의 중기전략(2010–2015)

과의 차이가 어떠할지 생각해본다. 그러나 (솔직히) 본 중기전략이 내세운 의미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차별화된 사업(프로그램,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여전히 Scholarship Aid, WFK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직업기술교육훈련이 훈련원 건립, 기자재 제공 및 훈련원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사실 기존 전략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KOICA의 지금까지 교육 분야 성과가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 질문하고 싶다. 성과라는 것은 어떤 결과보고가 있었고, 이들이 양적 누계가 어떠하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공과에 대해 실행차원의 경험, 노하우, 인적자원의 전문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있어 단순히 재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교육 분야의 성공적인 사례와 이유, 이를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구안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보다 다각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MDG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SDGs의 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KOICA의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과 모델의 축적 및 확산 보고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특히 'Better Life for Girls' 전략을 위한 사업형성 및 성과 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떠할지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넷째,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에서 흠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당장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을 떼는 순간 청사진에서 제시한 것에 비추어 사업의 내용, 형식, 방법, 참여방식 및 모니터링 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의도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업의 형성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 있어 핵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사업의 최종 성과를 상당히 융통성 있게 잡는다면, 세 가지 이행목표와 두 가지 추진목표를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목표로 이해하고 사업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여전히 교육 분야 사업에 있어서 실제 추진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정치적 역학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염려가 된다. 무엇보다도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플랫폼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SDGs 시대의 교육 분야 성과평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 KOICA 교육 전략(2016-2020)은 제 29회 개발협력포럼 이후 지속적인 대내외 검토결과 및 제언을 수용하여 수정 후 2016년 확정 공표할 예정임.

〈참고문헌〉

장은정 외. 2015.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한국국제협력단 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국제협력단

굿네이버스,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한국국제협력단. 2015. “2016-2020년 기초 및 취약계층 교육지원 공동제안서(발간예정)”. KOICA-시민사회 공동제안서 테스크포스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RES/70/1)”. UN

UNESCO. 2015a.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UNESCO

UNESCO. 2015b.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UNESCO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보건분야 중장기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오충현 (KOICA 교육보건팀 전문관)

목 차

I. 보건분야 SDGs 논의 흐름과 구조
1. 논의 흐름
2. SDGs에서의 보건
3. SDGs에서의 보건관련 목표현황
4. 이행방안 및 재원

II. KOICA 보건분야 중장기 전략의 역할과 SDGs

III. 보건분야 SDGs 비전과 KOICA 전략에 대한 제언
1. 보건분야 SDGs 비전 & 가치
2. KOICA 보건전략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에 대한 제언

IV. 보건분야 SDGs 주요목표와 KOICA 전략에 대한 제언
1. 아동, 모성 등 취약계층 건강향상
2. 감염병,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3. 약물남용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감소
4. 성생식 보건 및 보편적 건강보장
5. 영양, 식수위생, 건강한 환경
6. 담배규제, 공중보건을 위한 지적재산권, 출생등록, 보건안보

V. SDGs 이행수단과 KOICA 전략에 대한 제언
1. 재원
2. 기술향상 및 공유
3.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4. 다자간 파트너십

VI. 종합 제언

I. 보건분야 SDGs 논의 흐름과 구조

1. 논의 흐름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목표달성 시기를 2015년까지 정해 두면서 MDGs 이후의 Post-MDGs의 Goal과 세부목표(target)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2010년부터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65, 66차 UN총회와 연간 MDG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전예비논의를 시작하였고, 2012~2013년까지 리우회의(2012.6월), UN 고위급패널 보고서(2013.5월)을 통해서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3~2014년에는 SDGs 공개작업반 회의, SDGs 고위급정치포럼에서 의제를 구체화하고 목표와 세부목표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15년 9월 70차 UN 총회에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공식문서를 채택하였다.[1)]

위와 같이 SDGs(지속가능목표)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WHO를 비롯한 보건분야 주요 기관에서는 보건분야 주요목표를 어떻게 수립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2년 WHO와 UNICEF가 공동 주관한 회의에서는 건강의 사회결정적 요인인, 소녀의 교육, 건강 형평성, 양성 평등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MDGs의 주요목표였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던 모자보건과 감염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MDGs에는 세부목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령화, 비전염성질병,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변화, 인구이동 및 난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2)]

또한, 보건분야의 향후 15년간 추구해야할 목표로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제시하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건강권 보장,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가 주요 이슈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3)] 이와 함께 보건이 발전의 결과를 가늠하는 지표이자 주요 이행수단임을 명시하며 보건에 관련된 이슈가 17개의 전체목표에서 주류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4)]

---

1) KOFID ISSUE brief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2) Informal Member State Consultation on Health in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14 December 2012, World Health Organization, Executive Board Room, Summary Report

3) Positioning Health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HO discussion paper, October 2012

4) Draft, WHO, January 2015, 1, Towards a monitoring framework with targets and indicators for the health goals of the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 SDGs에서의 보건

UN 70차 총회 공식문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서문(Preamble), 선언(Declaratio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후속조치 및 평가(Follow up and review) 로 총 91항으로 이루어져 있다.[5)]

91개 항 중에서 health 또는 healthy 라는 언급은 총 33회 나타나고 있다. 보건(health)관련 주요 언급을 살펴보면 서문의 비전 7항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well-being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와 사회적 보호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에 대한 16항에서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MDGs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그 성과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아젠다 제시인 26항에서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여 'No one must be left behind' 원칙을 지키고, 성생식보건, 말라리아, HIV/AIDS, 결핵, 간염, 신종 감염병, 비전염성 질병, 정신질병 등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였다. 34항에서는 도시,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37항에서는 스포츠의 건강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였다.

3. SDGs에서의 보건관련 목표현황

SDGs에서 보건관련 주요 목표는 SDG 3에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영양과 관련된 것은 SDG 2의 세부목표 2.1과 2.2, 식수 위생과 관련된 것은 SDG 6의 세부목표 6.1, 6.2, 6.b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SDG 5의 세부목표 5.6에는 성생식 보건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SDG 12의 세부목표 12.4에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에 의한 건강 부작용에 대한 목표를 언급하고, SDG 16의 세부목표 16.9에는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지위 부여를 논하고 있다.

SDG 3를 세부목표별로 살펴보면 9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이행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의 세부목표는 신생아, 아동, 모성 등 보건에 대한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목표 3.1 모성건강, 3.2 아동건강,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목표 3.3 감염병, 3.4 비전염성질병,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외부요소인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세부목표 3.5 약물남용, 3.6 교통사고, 3.9 공해와 오염, 필수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장을 위한 세부 목표 3.7 성생식 보건서비스 3.8보편적 의료보장을 설정하였다. 또한 4개의 이행목표는 3.a 담배규제, 3.b 의약품 지적재산권, 3.c 보건의료인력, 3.d 보건안보를 제시하였다.[6)]

---

5) Seventieth sessio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6)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 7 KOICA

〈표 1〉 SDGs 중 보건관련 세부목표[7)]

2.1 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 하고, 고영양의,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2.2 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
3.1 2030년까지 전 세계 모성사망비를 70/10만 live birth 이하로 감소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아동의 예방 가능한 죽음을 종식시켜서, 신생아 사망률을 12/1000 live birth 이하로, 5세 이하 아동사망율을 25/1000 live birth 이하로 감소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병의 유행을 종식시고, 간염, 수인성 질병과 다른 감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
3.4 2030년까지 정신건강 증진과 비전염성질병 예방과 치료로 비전염성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
3.5 마약과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3.6 203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과 상해를 1/2 이하로 감소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을 포함한 성생식 보건 서비스에 보편적 접근 보장, 생식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
3.8 의료비의 재정위험으로부터 보호,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접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비용지불가능한 필수의약품 및 백신 접근 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3.9 2030년까지 유해물질, 공기, 물,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기인한 사망과 질병의 감소
3.a 모든 국가에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강화
3.b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는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약품의 개발과 연구 지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값싼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
3.c 개발도상국 의료 인력의 고용, 발전, 훈련, 유지를 위한 보건재정의 확충
3.d 국가적, 국제적 보건 위험 관리, 위험 감소, 조기 경보를 위한 모든 국가의 역량강화
5.6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와 북경행동강령에 부합하는 성생식 보건과 성생식 권리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접근 보장
6.1 2030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

7)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 7 KOICA(전체 세부목표 중 보건분야 저자 편집)

6.2	안전 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율(%)
6.b	물과 위생 관리 향상에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12.4	2020년까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협약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물질의 분해 주기에 따른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달성과 이들의 공기 · 물 · 토양 배출 대폭 경감
16.9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출생등록 포함)

4. 이행방안 및 재원

UN 70차 총회 공식문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60-91항에는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이행방안과 재원을 위한 후속조치와 평가에 대해서 기술되고 있다.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개발재원의 다양화, 기술의 공유 향상, 역량강화, 무역을 통한 개발, 제도일관성, 파트너십 증진, 데이터 모니터링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수단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와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 각 주체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II. KOICA 보건분야 중기 전략의 역할과 SDGs

KOICA에는 KOIC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있는 'KOICA 중기전략'과, 다자협력 전략, 민관협력 전략과 같이 사업형태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업형태별 전략', 그리고 아프리카 전략, 아시아 전략과 같이 지역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전략'이 날줄과 씨줄처럼 얽혀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분야 중기 전략은 대내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첫째는 KOICA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보건에서의 비전과 미션을 제시해주는 '방향제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KOICA 보건분야 중기전략에 제시된 비전과 미션은 '개발도상국 건강수준 향상을 통한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기여'(2008-2010), '건강한 삶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라는 명확하지 못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KOICA 보건분야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서는 전략의 비전과 미션을 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와 비전, 보건분야 주요 이슈와 연계시켜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프로젝트

사업, 다자협력 사업, 민관협력 사업, 역량개발 사업, 봉사단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보건분야 프로그램의 성과를 관리하는 틀을 제시하고 성과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KOICA 보건전략(2008-2010)과 KOICA 보건전략(2011-2015)에서는 성과관리의 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SDGs에서는 보건분야의 Goal, 세부목표, 이행목표 그리고 각 목표별 지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수단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어 KOICA 보건전략에도 성과관리의 틀을 제시하고 각 형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분야 사업의 성과를 KOICA 기관 차원의 성과로 모아낼 수 있도록 전략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국에서 제안하는 제안서 중에서 KOICA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전략에서는 모든 분야의 보건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협력국의 특수한 상황과 요청을 반영하는 것에는 유의한 역할을 해왔으나 다양한 제안서 중에서 선택과 집중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하였다. SDGs에서는 20여개 가까운 세부목표를 제시하여 60여개 가까운 보건 이슈를 주요 목표와 지표화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KOICA의 보건중기 전략에는 모든 중요한 보건이슈 중에서 KOICA가 잘 할 수 있고 더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8)]

III. 보건분야 SDGs 비전과 KOICA 전략에 대한 제언

1. 보건분야 SDGs 비전 & 가치

SDGs는 서문에서 비전 및 가치로서 5P(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를 제시하고 인간의 존엄성, 지속가능한 지구, 경제사회 기술적 번영,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평화, 파트너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 가치를 반영하여 보건분야의 SDGs 비전으로는 7항에서 "A world with equitable and universal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t all levels, to healthy care and social protection, wher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re assured."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26항에서는 "To promote physical and mental healthy and well-being, and to extend life expectancy for all, we must achieve universal healthy coverage and access to quality healthy care. No one must be left behind" 마지막으로 SDG 3의 Goal로서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나타내고 있다. 위에 언급한 7항, 26항,

8) KOICA 보건중기 전략 평가 2015. 12 KOICA

Goal 3를 보았을 때 보건분야의 주요 가치로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평성이 보장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9)]

2. KOICA 보건전략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에 대한 제언

KOICA의 보건전략은 KOICA가 왜 보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가 포함된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에는 SDGs의 핵심가치로 제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건의료와 그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건강을 명시하고 KOICA의 보건 프로그램이 SDGs의 보건분야 핵심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SDGs 보건분야의 비전인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해 기여하는 것을 KOICA 보건전략의 미션으로 삼아 KOICA 보건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목표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명시한다면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DGs에서 제시된 보건분야 핵심가치로서 형평성을 KOICA 보건분야 중기전략의 핵심가치로 삼아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보건분야 SDGs 주요목표와 KOICA 전략에 대한 제언

1. 아동, 모성 등 취약계층 건강향상

SDGs에서는 보건분야의 주요목표로 세부목표 3.1과 3.2에서 아동과 모성의 건강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목표는 MDGs에서도 Goal로 제시된 바 있으며, 향후 15년 동안에도 주요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한민국은 무스코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을 활용하여 모자보건 initiative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KOICA는 PMNCH(Partnership for Maternal Neonatal Child Health)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KOICA 보건중기전략에는 모자보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여 더 확실한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 관련 국제사회 활동을 늘리고, SDGs 모자보건 관련 지표와 KOICA 보건전략의 모자보건 프로그램의 지표를 연동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9) Seventieth sessio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2. 감염병,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SDGs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세부목표 3.3에서 HIV/AIDS, 결핵, 말라리아, 간염, 수인성 전염병 등 다양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감염병뿐만 아니라 신종감염병의 예방, 대응, 감시도 거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KOICA 보건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전략목표,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고, 최근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initiative인 Safe life for all을 고려할 때 KOICA 보건 중기 전략의 중요 프로그램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전염성 질병은 세부목표 3.4로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계 질환, 정신 질병 등을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MDGs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SDGs에 새롭게 제시된 점,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그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KOICA에서도 주목해야할 이슈이다. 하지만 국내의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질병부담이 여전히 높은 시점에서 KOICA의 보건분야 중점 프로그램으로 비전염성 질병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눈높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약물남용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감소

SDGs에서 건강분야 세부목표로 새로이 제시한 3.5 약물남용과 3.6 교통사고 이슈는 그 동안 보건분야 개발협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분야이며, 보건에 특화된 이슈라기보다는 거버넌스 등 타 분야와 다양하게 연결된 분야이다. 그 동안 KOICA의 이 분야에 대한 활동은 미미 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ODA활동에 대해서 국내적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할 때 이 목표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심을 환기하는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성생식 보건 및 보편적 건강보장

SDGs에서는 세부목표 3.7 성생식 보건, 세부목표 3.8의 보편적 건강보장, 세부목표 5.6 성생식 보건 보편적 접근에서 강조되고 있다. 보편적인 건강보장은 SDGs의 보건분야 핵심가치일 뿐만 아니라 주요목표로서 국제적, 국내적으로도 주요한 이슈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성생식 보건이 젠더관련 이슈이자 성생식 권리의 인권에 관한 이슈로서 KOICA가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KOICA 보건 프로그램의 철학적 가치의 수준, 전략적 방향에 대한 수준,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적용 방안을 고민하여 각각의 수준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치, 철학적 수준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

함하여 KOICA 보건전략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략적 방향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수준에서도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 재정을 포함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5. 영양, 식수위생, 건강한 환경

영양은 SDG 2에 제시되며 농업과 보건의 다분야적 접근이 요구되며, 식수위생은 SDG 6에 제시되며 환경과 보건의 다분야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물질, 환경오염 등은 SDG 3과 SDG 12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한 이슈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은 SDGs의 특징이기도 하다. 영양과 식수위생은 그 동안 KOICA 보건 프로그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슈였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KOICA가 보다 더 선택과 집중하여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유해물질, 환경오염 등 건강한 환경 프로그램은 최근 실내 공기오염 감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KOICA 내에서는 활발하지 않아 KOICA 보건전략에서는 중점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프로그램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6. 담배규제, 공중보건을 위한 지적재산권, 출생등록, 보건안보

SDGs에서는 세부목표 이외에 보건이슈에 대한 협약과 규제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향상시킬 있도록 이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담배규제에 대해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확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등 공중보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협약의 준수 및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KOICA는 프로그램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양한 국제보건 회의 및 컨퍼런스에서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V. SDGs 이행수단과 KOICA 전략에 대한 제언

SDGs에서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재원 조달방안, 기술향상 및 공유,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개발을 위한 무역,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다자간 파트너십,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을 제안하고 있다.

1. 재원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전통적인 ODA자금 뿐만 아니라 협력국의 국내 세금 및 공공수익, 공공투자 등을 포함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KOICA의 보건전략에는 이러한 다양한 재원 활용의 가능성을 반영하여 한국 국민의 세금을 기본으로 다양한 투자 및 외부재원과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협력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술향상 및 공유

SDGs에서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기술공유뿐만 아니라, 남남협력, 삼각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적정기술의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KOICA의 보건전략에는 한국의 보건의료 관련 기술과 지식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보건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프로그램 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SDGs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OICA 보건전략에는 협력국이 스스로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분야 PBA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반영해야 한다.

4. 다자간 파트너십

SDGs에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향상하고 특히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증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번의 KOICA 보건전략에는 KOICA 보건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파트너십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핵심 보건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기관과의 다자간 파트너십 방안과, 다변화 되고 있는 국제보건 활동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방안을 수립하고 전략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평가 및 책무성

『세계의 변혁: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는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UN은 2016년 3월까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와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정된 지표와 목표치는 각 국가, 지역, 글로벌한 수준에서 모니터링되고 평가될 예정이다. 또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공유할 것을 개별 국가 및 모든 기관의 책무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KOICA도 이러한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전략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KOICA 주요 보건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틀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유된 틀을 통하여 개별 프로젝트가 전체 KOICA 보건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시한 성과관리 틀을 통하여 양자 간 프로젝트 사업, 다자간 사업, 역량개발사업, 민관협력 사업, 봉사단 파견사업의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분야 프로그램의 성과를 KOICA 기관 차원의 성과로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KOICA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협력국과 국내외 보건분야 개발협력 전문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명시화 하여야 한다.

VI. 종합 제언

향후 15년간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가 제안되었다. KOICA도 지난 두 번의 보건중기전략을 바탕으로 2016-2020년까지 활용될 새로운 보건중기전략을 작성하는 중이다.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보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SDGs의 내용이 KOICA 보건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는 보건분야 SDGs의 주요 비전 및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건강보장'을 KOICA 보건전략의 비전 및 미션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SDGs에서 보건분야 목표 및 세부목표로 제시된 것을 KOICA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 중 KOICA의 현황, 국내외의 상황, 대한민국의 initiative를 고려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모든 것이 포함된 SDGs의 보건목표에서 KOICA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는 SDGs의 보건분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와 파트너십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이성훈. 2014. “KOFID ISSUE brief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KOFID ISSUE brief』. 서울: KOFID

한국국제협력단.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오충현, 박유애, 백지원. 2015. “KOICA 보건중기 전략(2011-2015) 이행현황 평가 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예정)

WHO. 2012. “Informal Member State Consultation on Health in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WHO

_____. 2012. “Positioning Health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HO

_____. 2015. “Towards a monitoring framework with targets and indicators for the health goals of the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O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

섹터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ssistance to Tackle Youth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Park, Sangbaek
ODA Expert, KOICA Cambodia Offic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ssistance to Tackle Youth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Park, Sangbaek (ODA Expert, KOICA Cambodia Office)

목 차

Ⅰ. Introduction

Ⅱ.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1. VET in developing countries
2. Public vs. private VET

Ⅲ. Korea's VE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1. Background of Korea's VET programs
2. Amount of Korea's VET assistance
3. Type of Korea's VET assistance
4. Organizational structure of Korea's VET assistance
5.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Korea's VET assistance
6. Problems with Korea's VET assistance

Ⅳ. Policy options to improve Korea's VET assistance
1.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
2. Career guidance programs
3. Informal sector training

Ⅴ. Evaluation of policy options
1. Policy option #1 – Continue current VET assistance policy
2. Policy option #2 – Implement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
3. Policy option #3 – Provide youths with career guidance
4. Policy option #4 – Promote informal sector training
5. Recommended policy option –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

Ⅵ. Implementation strategy for recommended policy
1. Raise civil society's awareness of the problem
2. Utilize expertise of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nsulting firms
3. Ensure support from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4. Start with a pilot project
5. Improve capacity of project contractors

Ⅶ. Conclusion

Reference

Appendix: Korea's VET assistance projects (2006 to 2013)

Executive summary

There are 1.2 billion youths (population aged between 15 and 24 years old) in the world, constituting 17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ith the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have turned to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s a possible policy solution, both domestically and as part of their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y. Unfortunately, the VET system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critical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funding, low quality of the training programs, and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different government ministries.

During the past few decades, the Republic of Korea (henceforth "Korea") has supported numerous VE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Korea's VET assistance policies. This paper examines four policy options: 1) status-quo, 2) ALMP, 3) Career guidance, and 4) training in informal secto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VET assistance i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I.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UN World Youth Report 2012, youths (population aged between 15 and 24 years old) make up 17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totaling 1.2 billion people. Eighty-seven percent of these youths live in developing countrie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s high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 phenomenon described as the "youth bulge". With good policies in place, this youth bulge c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Howev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n 2012, close to 75 million youths were unemployed worldwide, an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as 12.6 percen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adult unemployment rate of 4.5 percent. Biavaschi et al. (2012) also claimed that youths often face difficulties and disadvantages in the labor market compared to adults. 〈Table 1〉 and 〈Table 2〉 show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an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se tables,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as higher than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for all levels of economies and in all years between 2005 and 2013.

Interestingly, the unemployment rate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s lower than that of high-income countries. This reflects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While developed countries have well-designed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the unemployed, developing countries do not. This pushes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o take jobs that they are over-qualified for, or jobs in the informal sector which generally provide less income and other benefits to employees (King, 2012). Therefore, in spite of the seemingly low unemployment rat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problem of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s more serious than it looks, especially among youths.

The high unemployment rate among youths in developing countries could have negative consequences on their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hreaten the social stability (Engel, 2012). For example, the high youth unemployment rate is cited as one of the causes of the Arab Spring and the recruitment of youths into international terrorist networks (Urdal, 2006).

〈Table 2〉 Youth unemployment rate (% of labor force) by country income classification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World	14	13	12	13	14	14	14	14	14
High income countries	15	15	14	14	18	18	18	18	18
Low & Middle income countries	13	13	12	13	13	13	13	13	13
Low income countries	9	10	9	10	10	9	10	10	10
Least developed countries (UN classification)	10	11	11	11	11	11	11	11	11

Note: Modeled ILO estimate
Source: Created with data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bsit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programs can be very effective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Well-designed VET programs can increase the employability of those who are not suited for academic education, giving them a second chance to enter the labor market (Meer, 2007; Hoeckel & Schwartz, 2010). Also, VE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ducing blue-color workers demanded by the labor markets (Hoeckel, 2008). In addition, VET can contribute to social equity, because it has a higher rate of return for women and the poor, compared to other population groups (OECD, 2004).

The next section of this paper analyzes the VET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VET programs. The third section explains Korea's VE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starting with the history of Korea's VET programs. It also explains the amount, type, organizational structur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Korea's VE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points ou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policies. The fourth section presents thre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Korea's VET assistance, and the fifth section evaluates these policy options on a set of criteria. The sixth section presents strategies to implement the recommended policy, which is to support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

II.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programs

1. VET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established innovative VET policies to address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OECD, 2012; OECD, 2014), many developing countries still lack effective VET systems. The effectiveness with which developing countries bring unemployed youths into the labor market through VET program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Urdal, 2007; Nilsson, 2010).

There are two commonly-cited problems of public VET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First, many govern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do not have enough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an effective public VET system. Thus, the budgetary allocation for public VET programs is often less than the amount that had been committ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 quality of public VET programs is low. The skills taught in public VET programs are often not aligned to labor market demands, due to the inflexible curriculum, low participation of the employers, incompetence of the instructors, and outdated training equipment (Engel, 2012).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with the overall coordination of the VET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VET strategies and policies are frequently addressed in various sections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s. Also, VET programs are implemented by different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Youth, without much overall coordination (Engel, 2012). The system is even more fragmented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private sector, as there are many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provided by the informal sector.

2. Public vs. Private VET

A real strength of VET is that it can help youths acquire skills, and in turn, get a job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past few decades, there have been ongoing debates on whether public VET programs (conducted in public vocational training schools and institutions) or private VET programs (conducted by firms through on-the-job training) are more effective in doing this.

According to a study by Heckman (1999), public VET programs were found to be less effective and efficient compared to private VET programs. Psacharopoulos (2005) supported this claim, explaining that this was because the private sector was more responsive to the labor market demands, and also because competition in the private sector increased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VET programs.

On the other hand, Bennell and Segerstrom (1998) contended that the private sector often failed to provide trainings demanded by the labor market, and that public VET program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overty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1998) also pointed out that public VET program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Highly-Performing Asian Economics, such as Korea and Taiwan, by effectively training the youth population with skills that were needed in the labor market.

In Germany, two papers examining the effects of public VET programs produced somewhat contradictory conclusions. Lechner (1999) claimed that despite large public expenditures on public VET programs, there were no positive effects in the first years of the program. Contrarily, Rinne et al. (2007) found that public VET program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and wages of the participants.

Due to the limited research conducted on the effectiveness of public vs. private VET programs, as well as the diversity of both public and private VET programs, it is not possible to conclude whether public or private VET programs are more effective. However, in general, private VET programs are less costly and more responsive to market demands than public VET programs.

III. Korea's VE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1. Background of Korea's VET programs

Korea's VET syste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untry'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Beginning in the 1960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detailed economic development plans as well as corresponding VET and general education policies to produce the skills that would be needed by the new industries. The rapid development of Korea's human capital is said to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country's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in spite of the country's lack of natural resources.

During the 1960s and 1970s, Korea's VET programs were centralized and supply-oriented, and the Korean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many important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for Korea's VET system were established. In 1963, the government enacted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established the curriculum for vocational high schools. In 1967, the government began to implement the "Five-year Scientific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Plan (1967-1971)" (Chun & Eo, 2012). In 1973,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Law" was enacted to standardize the testing and certification process for technical skills,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VET system,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technical workforce (Lee, 1989).

In 1973, the government revised the "Industrial Education Promotion Law" which made it mandatory for firms to share the costs of VET programs. According to this amendment, firms had to provide in-company training to their employees, and if the firms did not comply, they had to pay a fine which the government used to fund public VET programs (Lee, 2012). Although the goal of this policy was to increase vocational training in the private sector, many firms opted to pay the fine instead (Bennell & Segerstrom, 1998).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e Korean government also requested international assistance to support VET programs. Aid from Germany, Japan, the United States,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were used to expand the public VET system (Lee, 2009).

With the increase of vocational training schools and institutions, vocational high schools enrolled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t one point (Kuczera et al., 2008). The massive number of graduates from these vocational schools and institutions were easily absorbed by firms, due to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he high demand for skilled workers in the new industries.

In the 1980s and 1990s, many important VET institutions were also established, including the Korea Vocational Training Research Institute,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nd the Joong-Ang Vocational Training Center which trained VET instructors (Lee, 2012).

It is undeniable that Korea's VET polici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untry's rapid economic development by providing the skills that were demanded by the new industries which emerg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national development plans.

2. Amount of Korea's VET assistance

Korea's history of implementing successful VET policies is one reason why developing countries are actively requesting Korea's support for VET programs. As shown in 〈Table 3〉, Korea's VET assistance reached USD 53 million in 2013, accounting for 15.74 percent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the education sector (or 4.05 percent of Korea's total bilate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share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VET assistanc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donor countries (Prime Minister's Office, 2011).

〈Table 3〉 Amount of Korea's bilate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education and VET projects (USD million)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ve.
Total bilateral ODA	376.08	490.54	539.21	581.1	900.60	989.52	1,183.17	1,309.58	769.23
ODA for Education (%)	135.15 (35.94)	160.17 (32.65)	112.46 (20.86)	139.02 (23.92)	324.4 (36.02)	199.17 (20.13)	127.53 (10.78)	337.05 (25.74)	191.86 (24.10)
ODA for VET (%)	9.72 (7.19)	25.44 (15.88)	30.66 (27.26)	19.73 (14.19)	39.39 (12.14)	45.32 (22.75)	47.34 (37.12)	53.07 (15.74)	33.83 (17.63)

Note: Net disbursement (in current prices)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data from OECD Aid Statistics (http://stats.oecd.org/qwids)

〈Table 4〉 indicates that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e largest government agency executing Korea's grant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spent a total of USD 143.57 million in 31 countries and 1 territory, in terms of project-type interventions, from 2006 to 2013. Annuall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pent an average of USD 17.95 million for 18 VET projects. In addition,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agency which executes Korea's loan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spent a total of USD 88.21 million for VET assistance from 2006 to 2013. Annually,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pent an average of USD 11.03 million on 5 VET projects.

〈Table 4〉 Amount of VET assistance prov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USD million)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verage
KOICA (number of projects)	6.44 (15)	17.94 (19)	11.05 (17)	8.68 (7)	15.06 (17)	24.30 (21)	22.57 (22)	37.49 (29)	17.95 (18)
EDCF (number of projects)	1.09 (2)	4.86 (2)	7.31 (2)	4.64 (3)	21.02 (6)	18.37 (8)	19.88 (9)	11.04 (5)	11.03 (5)

Note 1: Net disbursement (in current prices)
Note 2: Only project-type interventions are included. Project-type interventions account for more than 90 perc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s VET interventions (PMO, 2011). Other types of interventions includ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support to NGOs.
Source: Author's calculations using data from OECD Aid Statistics (http://stats.oecd.org/qwids)

3. Type of Korea's VET assistance

Korea's VET assistance in developing countries focuses mostly on strengthening the public VET system by building vocational training schools and institutions. To support these schools and institutions, Korea also gives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provides equipment and training materials, dispatches technical advisors, and invites trainees to attend trainings in Korea (Chun & Eo, 2012).

〈Table 5〉 shows that between 2006 and 2013, nearly 90 percent of Korea's VET assistance projects were based in vocational training schools and institutions. (The full list

〈Table 5〉 Korea's VET assistance projects based in schools and institutions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Number of VET projects	17	21	19	10	23	29	31	34	184
Number of school and institution-based VET projects (% of above)	15 (88.24)	20 (95.24)	17 (89.47)	10 (100)	20 (86.96)	26 (89.66)	28 (90.23)	29 (85.29)	165 (89.67)

Note: Projects with unclear information on activities and objectives were not counted (i.e. Colombia-Triangular Cooperation Project, Ethiopia-Project for Vocational Capacity Building, Vietnam National Skill Testing Systems)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data from OECD Aid Statistics (http://stats.oecd.org/qw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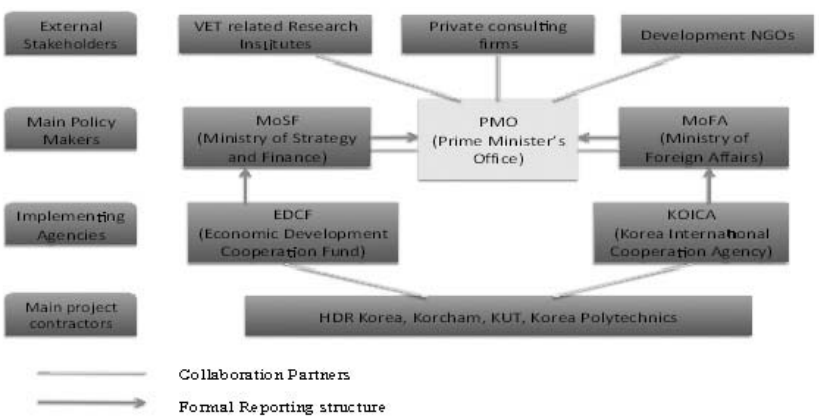
of Korea's VET assistance projects from 2006 to 2013 is included in the Appendix.) Korea's focus on this type of VET assistance reflects its own history of implementing successful VET policies in the past, as explained above.

4. Organizational structure of Korea's VET assistance

All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are coordinated by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2011, this committee established Korea's first mid-term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for 2011 to 2015, which serves as the government's overarching strategy for administering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OECD, 2013).

At the ministerial level, bot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re key institutions in Korea's VET assistance policies. These ministries supervise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respectively, which are the implementing agencies for Korea's VET assistance projects. These projects are usually sub-contracted to governmental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 (HDR Korea),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Korcham),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nd Korea Polytechnics.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Korea's VET assistance are depicted in 〈Exhibit 1〉.

〈Exhibit 1〉 Stakeholders involved in Korea's VET assistance



Source: made by author

5.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Korea's VET assistance

According to the mid-term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for 2011 to 2015 establish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education sector is one of the priority sectors for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The goal of Korea's educational assistance is to enhance the productivity and employability of workers in developing countries (Prime Minister's Office, 2010).

In 2011, the Prime Minister's Office reconfirmed VET to be one of its priority sectors in its education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giv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VET sector and Korea's own development experience based on government-led VET interventions (Prime Minister's Office, 2011). The overarching goal of Korea's VET assistance is to increase the human capital of developing countries by establishing training infrastructure, providing qualit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nhancing the capacity of the VET sector (Chun & Eo, 2012).

The Prime Minister's Office also presented two principles for Korea's VET assistance. The first principle is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of Korea's VET assistance should be selected after a careful analysis of the countries' labor market and industries, taking into account their specific VET demands. The second principle is that Korea's VET assistance should follow a program-based approach, covering various areas such as institutional reforms, training infrastructure, and capacity building. This is in contrast to the stand-alone project approach of the past.

6. Problems with Korea's VET assistance

As explained above, Korea's VET assistance mostly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recipient country's public VET system by building vocational training schools and institutions. Such an emphasis on strengthening the public VET system reflects Korea's own development experience. However, this strategy may not be effective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a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context from Korea's past.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stated goal of Korea's VET assistance, which is to "increase the human capital of recipient countries." First, developing human

capital through VET programs will not necessarily address the problem of unemployment, which is the real issue that should be tackled in developing countries. Thus, the link between the VET programs and employment should be expressed more clearly in the goals of the VET programs. Second, in terms of increasing human capital, VET programs are less effective than general education. Psacharopoulos (1994) examined the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worldwide, and found that the rate of return to vocational education was 10.6 percent, while the rate of return for general education was 15.5 percent. Also, in terms of graduates' income, VET is less cost-effective compared to general education, since vocational education has higher costs due to more expensive equipment, higher maintenance costs, and smaller classes (Psacharopoulos, 2005; IIEP, 2007). Therefore, since VET is neither the most effective nor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increase human capital, stating this as the goal of Korea's VET assistance does not make sense. Instead, as stated above, the primary goal of VET programs should be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among the graduates of the VET programs.

Another problem is that the implementing agencies do not have a clear strategy for their VET assistance. According to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3), the goal of its VET assistance is to develop a skilled workforce in recipient countries. However, it does not have a systematic approach for its VET assistance or specific areas for support. In the case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it only has policy-level guidelines for its VET assistance which were largely set by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013), and its strategies and specific areas of support are very vague.

Without addressing the issues mentioned above, Korea's VET assistance will not be as effective as it could be.

IV. Policy options to improve Korea's VET assistance

This section will present possible policy options to improve Korea's VE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These policies have been proven to be effective i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1.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 include a broad range of interventions such as job search assistance, in-classroom and on-the-job trainings based on market demand, subsidize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Although the effects of ALMPs vary across the programs, well-designed ALMPs can be effective i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by equipping youths with marketable skills (Biasvaschi et al., 2012).

Since ALMPs include a wide range of policy options, countries are able to choose the alternative that best fits their needs and situation. For example, job search assistance programs will be effective in countries that are aiming for high impact in the short-term, while in-classroom and on-the-job training will be effective in countries that are aiming for medium and long-term impact (Card et al., 2010).

ALMPs have been proven to be successful i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in Nepal, the Employment Fund[1] was a very successful ALMP that focused on on-the-job training, apprenticeships, and market-oriented short-term training for youths, women, and other marginalized people. From 2008 to 2013, more than 70,000 young people were trained through this program, and more than seventy percent of them remained employed three years after the trainings. In 2013, this program won the second prize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call for good practices on youth employ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n NGO called Education for Employment[2] has also been implementing successful ALMPs. This NGO provides employability trainings, short-term job trainings, and entrepreneurship trainings to help unemployed youths find jobs.

2. Career guidance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many youths lack information about the careers that are available to them in the labor market. As a consequence, many do not give careful thought

1) Website: http://employmentfund.org.np

2) Website: http://www.efe.org/

to their career and education choices, which leads to a higher likelihood for them to be unemployed, compared to those who receive proper career guidance.

According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areer guidance is defined as services and activities intended to assist individuals of any age, at any point in their lives, to make choices regarding their education, training, and occupation, as well as to manage their career (Hansen, 2006). Career guidance programs can help youths identify and pursue available jobs, find relevant training resources, and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educational path (OECD, 2014). This can prevent some youths from blindly pursuing higher education with the expectation of getting a higher-paying job, only to be unemployed at the end of their studies. This way, career guidance programs can also help reduce the social and cultural misperceptions of VET, especially in countries where VET is regarded as an inferior educational option for students.

3. Informal sector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informal training (such as apprenticeships) is prevalent, because the size of the informal sector is large. Compared to formal VET, which is often inflexible and lacks the involvement of employers, informal training is very responsive to the demands of the labor market, since it is provided directly by the employers. Also, informal training focuses on work-based learning, consistent with the current trends in VET (OECD, 2014). Some even claim that participants of informal training have higher employability than those who participated in formal VET programs (Biavachi et al., 2012). For these reasons, promoting informal training can be an effective policy for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formal training has some critical problems regarding certification and quality assurance. In addition, informal training is weak in increasing general skills which increases workers'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in the labor marke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informal training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exploiting children and marginalized people, due to the lack of regulations and monitoring. Therefore, proper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informal training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rainees while ensuring the quality of the trainings.

V. Evaluation of policy options

As mentioned before, VET programs can be very effective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f the VET programs are not carefully designed, youths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 may not be able to find jobs later, which can increase their frustration, possibly leading to social instability (Urdal, 2007). Thus, it is important for donors to make sure their VET assistance directly addresses the issue of youth unemployment.

In order to make Korea's VET assistance more effective i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the three policy options presented above, as well as the option of maintaining the current policy, will be evaluated on a set of five criteria. This analysis may prove to be useful at the policy level,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level of Korea's VET assistance programs.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policy options are:

- Effectiveness i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 Political feasibility among policy makers in Korea
- Technical practicality
- Local participation
- Financial sustainability in recipient countries

〈Exhibit 2〉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each policy options using the five criteria.

〈Exhibit 2〉 Matrix of policy options and key criteria

Criteria	Effectiveness	Political feasibility	Technical practicality	Local participation	Financial sustainability
Option #1: Current policy		*	*		
Option #2: ALMP	*	*	*	*	*
Option #3: Career guidance	*			*	*
Option #4: Informal sector training	*			*	*

1. Policy option #1 – Continue current VET assistance policies (focusing on public VET programs in vocational training schools and institutions)

Continuing the current VET assistance policy is the easiest option in many ways. It meets the criteria of political feasibility, because it fits in well with the Korean government's overarching aid policy of promoting Korean-style development assistance based on Korea's own development experience (OECD, 2013). Also, it meets the criteria of technical practicality, because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ave been implementing this type of VET assistance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as mentioned previously, this policy option does not meet the criteria of effectiveness, because public VET programs are often less effective than private or market-oriented training programs. The curriculum is inflexible due to administrative obstacles, and there is limited participation from the employers. Furthermore, this policy option does not meet the criteria of financial sustainability, because it is expensive to maintain high-quality training programs in public VET schools and institutions. Considering that Korea's VET assistance often stops once the training school or institution is constructed, and that the govern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often lack fiscal resources to support public programs, this policy option is not financially sustainable in the long-run.

2. Policy option #2 – Implement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

As mentioned before, ALMPs include a broad range of interventions, including job search assistance, in-classroom and on-the-job trainings based on the market demand, subsidize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Thus, it can be tailored to the needs of each country.

ALMPs are very effective i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In particular, on-the-job trainings provide unemployed youths with valuable experience which can help them prepare for the labor market. Also, job search assistance reduces the unemployment spell among youths by address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job market.

Although ALMPs are not categorized as Korean-style development programs, most ALMP interventions are commonly implemented in Korea, and the main contractors that are carrying out Korea's VET assistance in developing countries also have experience implementing these programs in Korea. Thus, introducing ALMPs into Korea's VET assistance will be politically as well as technically feasible. (However, subsidizing the public sector employment programs may meet some political opposition, due to the reluct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form of subsidies.)

Another advantage of ALMPs is that it can increase local participation, because ALMPs directly involve employers and the local community in the implementation of on-the-job trainings and job search assistance. In addition, ALMPs are financially sustainable, because it does not require the maintenance of expensive training institutions and equipment. Also, existing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ommunity centers), NGOs, and private training providers can efficiently provide youths with various trainings and job search assistance.

3. Policy option #3 – Provide youths with career guidance

Currently, VET is often provided as remedial support for youths who lack market-relevant skills. By providing youths and their parents with career guidance, there will be less demand for remedial support, because they will be able to make more informed choices beforehand about their career and educational path.

As mentioned above, by giving information to youths about the jobs available in the labor market, youths can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education and career, and it can also address the misperceptions that VET is an inferior educational option. Thus, it is an effective policy option for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in the long run. (However, it may not be effective in the short run, because it will take time to reap the benefits.) In addition, this option is financially sustainable, because it does not require as much resources as maintaining public VET schools and institutions. Also, this policy can increase the involvement of the local community, because career guidance programs will be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local firms.

However, this policy option may not be politically feasible, considering the Korean policy makers' preference for supporting Korean-style development assistance. Another drawback

is that career guidance can be biased towards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limited options for marginalized groups.

4. Policy option #4 – Promote informal sector training

Considering the large inform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promoting training in the informal sector could be an effective policy option to address youth unemployment. The bigger the informal sector in a country, the bigger the impact of informal sector training will be.

As mentioned above, informal sector training can be effective in providing marketable skills and valuable work experience for youths, and it is also very responsive to the skills demand of the labor market, because it is provided directly by the employers. By definition, it also involves local participation. In addition, it is financially sustainable, since it does not require much financial support other than to standardize the informal training system.

However, the main contractors that are implementing Korea's VET assistance have little experience in supporting informal sector training, so it does not meet the criteria of technical practicality. Also, it will be politically difficult to push for this option, since policy makers in Korea prefer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based on Korea's own development experience.

5. Recommended policy option–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

Based on the evaluation above, promoting ALMPs is the best policy option to improve Korea's VET assistance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is the only policy option that meets all five criteria of effectiveness, political feasibility, technical practicality, local participa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First, it is effective i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especially when it is designed to be flexible and market-oriented. Second, it is politically feasible,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is familiar with ALMPs which are also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ird, it meets the criteria of technical practicality, because the implementing agencies of Korea's VET assistance have experience implementing ALMPs domestically. Fourth, it ensures local participation, because ALMPs directly involve

employers and the local community in on-the-job trainings and job search assistance. Lastly, it is financially sustainable, because it does not require the maintenance of expensive training institutions and equipment.

VI. Implementation strategy for recommended polic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the policy recommendation above, a holistic strategy needs to be taken by the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civil society,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nsulting firms,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implementing agencies, and project contractors. This section describes how to involve each stakeholder, ensure their support, and ultimately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a new VET assistance policy. Although it may be challenging to carry out all the steps mentioned below, it is important to involve as many stakeholders as possible in adopting this new policy.

1. Raise civil society's awareness of the problem

In recent years, as Korea's budget for foreign aid increased, so has the general public's interest in monitoring how the foreign aid is being used. In particular, NGOs involved in development assistance are making efforts to raise the public's awar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le also demand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rom the Korean government. For example, ODA Watch[3] is one of the most active NGOs in Korea to monitor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Korean government pays close attention to the demands and criticisms of the civil society, since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financed through tax payers' money.

Therefore, one of the first steps in changing Korea's VET assistance policy would be to gain the support of the civil society. This can be done by making the civil society understan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Korea's current VET assistance, and that there are more effective policy options, such as supporting ALMPs.

---

3) Website: https://odawatch.wordpress.com

The civil society will be enthusiastic in supporting this, since they are concerned with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However, one problem is that the civil society often lacks sector-specific expertise, so they may not have the capacity to engage in a policy discourse about the specific problems with Korea's current VET assistance policy and the way forward. Nevertheless, this shortcoming can be overcome through cooperation with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nsulting firms, as explained below.

2. Utilize expertise of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nsulting firms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nsulting firms can be helpful in producing rigorous research and evidence on the problems with Korea's current VET assistance policies as well as strategies for improvement.

There are many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with expertise in VET and development assistance, including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4] the Korea Labor Institute (KLI),[5] and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6] The main responsibility of these public research institutes is to analyze Korea's public policies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Although most of these public research institutes focus on domestic issues, some of these institutes have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VET assistance projects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placing them in a good position to provide expertise in this area.

There are also a number of private consulting firms in Korea that focus on Korea's foreign aid policies, including the 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ReDI),[7] the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 (KDS),[8] and the Korea Association for

4) Website: http://eng.krivet.re.kr/eu/index.js
5) Website: http://www.kli.re.kr/kli_ehome/main/main.jsp
6) Website: http://eng.kedi.re.kr/khome/eng/webhome/Home.do
7) Website: http://redi.re.kr/?lang=en
8) Website: http://eng.kds.re.kr/Main/index.htm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AIDEC).[9] In 2011, the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was established as a cooperative network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providing a channel for th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field of development assistance. These private consulting firms can produce rigorous research and evidence on the problems with Korea's current VET assistance policy as well as strategies to improve it.

3. Ensure support from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Besides the Prime Minister's Office, two ministries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n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They 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ch administers loans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ch administers grant aid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se two ministries discuss major policy issues regarding Korea's foreign aid, such as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specific countries, the annual aid budget allocation plan, and Korea's mid-term foreign aid policy.

However, these two ministries have a competitive relationship when it comes to the budget, because each ministry is aiming to increase their share of Korea's budget for development assistance. Also, a lack of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se two ministries can pose a barrier to agreeing on an alternative VET assistance policy. Even if the Prime Minister's Office were to unilaterally decide to shift Korea's VET assistance policy, it will not be effective on the ground without the buy-in from these two implementing ministrie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change Korea's VET assistance policy, it is necessary to get bot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board. They should hold regular meetings to discuss the problems regarding Korea's current VET assistance policy, as well as ways to improve it.

9) Website: http://www.kaidec.org/english/

4. Start with a pilot project

After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change its VET assistance at the policy-level, the new policies should be tested through small-scale pilot projects. Even though many of the implementing agencies have experience conducting ALMPs in Korea, the context of each country is different, so the programs will need to be customized to the needs and challenges of each country. Thus, the pilot projects will give the implementing agencies a chance to improve the project design and fix any unforeseen problems before the projects are scaled up.

When designing the pilot projects,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hould review the ALMPs that have been successful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e Employment Fund in Nepal and the NGO Education for Employment's work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By reviewing these projects, they will be able gain valuable insights into how to effectively implement ALMPs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learning from the mistakes that had already been made. In addition, they should also review the VET assistance projects that they implemented in the past, which will help them understand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each country, as well as their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5. Improve capacity of project contractors

Lastly, in order to make the new policy successful,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project contractors' capacity for implementing ALMPs in developing countries.

Due to Korea's history of focusing on public sector VET programs, governmental and semi-governmental agencies (such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Korea Polytechnics, and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have been the major project contractors to implement Korea's VET assistance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s government agencies, they have an equal footing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o they can also have an influence o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ese reasons, it is very important to get these project contractors on board in order to change the direction of Korea's VET assistance, as well as to develop their capacity for this new type

of assistance.

Although these project contractors have carried out ALMP interventions in Korea to address youth unemployment since the 1990s, they do not have experience implementing similar types of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very different from Korea'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ir capacity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ALMPs that are suitable for developing countries. Inviting them to participate in pilot projects can be a good opportunity for them to develop these capacities an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hanging the direction of Korea's VET assistance.

VII. Conclusion

With the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have turned to VET as a possible policy solution, both domestically and as part of their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y. Korea is at the forefront of providing VE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its own experience of establishing an effective public VET system which contributed to the country'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continuing the current VET assistance policy would be the easiest op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many ways, it is not the most effective way to tackle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found that promoting ALMPs would be the best policy option for improving Korea's VE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First, ALMPs will be effective i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especially when it is designed to be flexible and market-oriented. Second, it is politically feasible,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is familiar with ALMPs which are also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ird, it meets the criteria of technical practicality, because the implementing agencies of Korea's VET assistance have experience implementing ALMPs domestically. Fourth, it ensures local participation, because ALMPs directly involve employers and the local community in on-the-job trainings and job search assistance. Lastly, it is financially sustainable, because it does not require the maintenance of expensive training institutions and equipme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this new VET assistance policy, a holistic strategy needs to be taken by the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civil society,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nsulting firms,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implementing agencies, and project contractors. By following the strategies outlined in this paper, Korea will be able to improve its VET assistance policies so it can better tackle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ontributing to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References〉

Ajufo, B. I. (2013). "Challenges of youth unemployment in Nigeria: effective career guidance as a panacea." African Research Review. 7(1). 307-321

Alam, G. M. (2008). "The role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in the national development of Bangladesh." Asia-Pacific Journal of Cooperative Education. 9(1). 25-44

Axmann, M. (2004). "Facilitating Labour Market Entry for Youth through Enterprise-based scheme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SEED Working Paper(48).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Bennell, P., & Segerstrom, J. (1998).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Has the World Bank got it righ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18(4). 271-287

Biavaschi, C., Eichhorst, W., Giulietti, C., Kendzia, M. J., Muravyev, A., Pieters, J., Zimmermann, K. F. (2012). "Youth un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Buddelmeyer, H., & Herault, N. (2010). "The Role of VET in Preventing the Scarring Effect of Youth Joblessness". A 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and Evaluation Program Report: ERIC

Card, D., Kluve, J., & Weber, A. (2010). "Active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s: A Meta Analysis". The Economic Journal. 120(548). F452-F477

Chun, H. M., Eo, K. C. (2012). "Aid for Skills Development: South Korea Case Study".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Education for All Monitoring Report 2012: UNESCO

Dundar, H., Millot, B., Savchenko, Y., Aturupane, H., & Piyasiri, T. A. (2014). Building the skills for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Sri Lanka: World Bank Publications

EDCF (2013). EDCF Annual Report 2012.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Engel, J. (2012). "Review of policies to strengthen skills-employment linkages for marginalized young people".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Education for

All Monitoring Report 2012: UNESCO

Hansen, E. (2006). Career guidance: A Resource Handbook for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Geneva: ILO

Heckman, J. J. (1999). "Doing It Right: Job Training and Education". Public Interest. 135. 86-107

Hilson, G., & Osei, L. (2014). "Tackling youth unemployment in sub-Saharan Africa: Is there a role for 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 Futures. 62. 83-94

Hoeckel, K. (2008). Costs and benefit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oeckel, K., & Schwartz, R. (2010). Learning for Jobs: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Austria.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orowitz, A. W., & Schenzler, C. (1999). "Returns to general,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recent evidence from Suriname". Education Economics. 7(1). 5-20

IIEP (2007).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Newsletter. XXV. N° 4

ILO (2012).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2.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 (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A generation at risk.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KOICA (2013). 2012 KOICA Annual repor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Kuczera, M., Kis, V., & Wurzburg, G. (2008). Learning for Jobs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orea.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Lechner, M. (1999). "An evaluation of public-sector-sponsored continuou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in East Germany". University of St. Gallen Working Paper (9901)

Lee, S. J. (1989).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Seoul: Korea Vocational Training and Management Agency (KVTMA)

Lee, Y. H. (2009).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Malamud, O., & Pop-Eleches, C. (2010). "General education versus vocational training: Evidence from an economy in transi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1). 43-60

McGrath, S. (2012).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development: A policy in need of a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32(5). 623-631

Meer, J. (2007). "Evidence on the returns to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5). 559-573

Middleton, J., Ziderman, A., Van Adams, A. (1993). Skills for productivity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Nilsson, A. (2010).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an engine for economic growth and a vehicle for social inclu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4(4). 251-272

Nordman, C. J., & Pasquier-Doumer, L. (2014). "Vocational education, on-the-job training, and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young workers in urban West Africa". PROSPECTS. 44(3). 445-462

OECD (2004). "Improving Skills for More and Better Jobs: Does Training Make a Difference?"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p. 183-224). Paris: OECD

OECD (2010). Learning for jobs: Synthesis Report of the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aris: OECD

OECD (2013).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Korea 2012. Paris: OECD

OECD (2014). Skills Beyond School: Synthesis Report of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aris: OECD

Pillay, P. (2010). Linking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Africa from three successful systems: African Books Collective

PMO (2010). Mid-term ODA Policy (2011-2015). Seoul: Prime Minister's Office (PMO)

PMO (2011). National Strategy on Aid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oul: Prime Minister's Office (PMO)

Psacharopoulos, G (1994). "Returns to investment in education: A global update". World development. 22(9). 1325-1343

Psacharopoulos, G (2005). "Link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A Personal View". European Journal: Vocational Training, 36. 69-73

Rinne, U., Schneider, M., & Uhlendorff, A (2007). "Too bad to benefit? Effect heterogeneity of public training programs". IZA Discussion Papers, No. 3240

Tripney, J. S., & Hombrados, J. G (2013).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for young people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mpirical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5(1). 1-14

Urdal, H (2006). "A clash of generations? Youth bulges and political viol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3). 607-629

Urdal, H (2007). "The Demographics of Political Violence: Youth Bulges, Insecurity, and Conflict". In Brainard, L., & Chollet, D. H. (Eds.), Too poor for peace? Global poverty, Conflict,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pp. 90-100).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orld Bank (2011). Learning for All: Investing in People's Knowledge and Skills to Promote Development: World Bank Group Education Strategy 2020. World Bank

Appendix: Korea's VET assistance projects (2006 to 2013)

Year	Agency	Country	Project Title	Amount (USD million)	Income group
2006	KEXIM	Cambodia	National Cambodia–Korea Vocational Training School Project	1.04733	LDCs
2006	KEXIM	Uzbekistan	Voc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	0.04964	LMICs
2006	KOICA	Afghanistan	Establishment of Korea – Afghanista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1.01003	LDCs
2006	KOICA	Algeria	Improve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Algeria	0.86915	UMICs
2006	KOICA	Egypt	Improvement of the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0.24251	LMICs
2006	KOICA	Egypt	Upgrading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1.05013	LMICs
2006	KOICA	Guatemala	Establishment of the Textile High Technical Training Workshop	0.1644	LMICs
2006	KOICA	Honduras	2nd Project to Upgrade Korea–Honduras TTC	0.3413	LMICs
2006	KOICA	Indonesia	Construction of Korea–Indonesia Technical & Cultural Center	0.15387	LMICs
2006	KOICA	Iran	Establishment of Automotiv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Iran	0.03921	UMICs
2006	KOICA	Iraq	Establishment of the Korea–Iraq Vocational Training Center	0.01112	LMICs
2006	KOICA	Myanma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0.01211	LDCs
2006	KOICA	Pakistan	Reconstruction of Government College of Commerce	1.57286	LMICs
2006	KOICA	Sri Lanka	The Project for Upgrading Jaffna Technical College	0.91013	LMICs
2006	KOICA	Vietnam	Project to Upgrade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School	0.00026	LMICs
2006	KOICA	Vietnam	Upgrading of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School	0.01251	LMICs
2006	KOICA	Vietnam	The 1st Vocational Training Project in Vietnam	0.04747	LMICs

2007	KOICA	Afghanistan	Workshop on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or Afghanistan Officials	0.806411	LDCs
2007	KOICA	Algeria	The Improve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Algeria	0.125909	UMICs
2007	KOICA	Bangladesh	Program for the Effective Vocational Training in Bangladesh	1.130107	LDCs
2007	KOICA	Egypt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Luxor Mechanical Industry Secondary School	0.55512	LMICs
2007	KOICA	Egypt	Upgrading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Embaba, Guiza	1.110239	LMICs
2007	KOICA	Egypt	The Improvement of the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0.260761	LMICs
2007	KEXIM	Sri Lanka	Upgrading National Vocational Training Center at Niyagama	0.090567	LMICs
2007	KEXIM	Tanzania	Vocational Training Centers Establishment Project	4.770771	LDCs
2007	KOICA	Guatemala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motive Center of the INTECA	0.0247	LMICs
2007	KOICA	Honduras	The 2nd Phase of Upgrading of Korea-Honduras Technical Training Center	0.583221	LMICs
2007	KOICA	Indonesia	Construction of the Korea-Indonesia Technical & Cultural Cooperation Cen	2.311122	LMICs
2007	KOICA	Iran	Establishment of Automotiv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Iran	4.550788	UMICs
2007	KOICA	Iraq	Establishment of Korea - Iraq Vocational Training Center, Iraq	1.170364	LMICs
2007	KOICA	Jordan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sistance to EETI in Zarqa, Jordan	1.151016	UMICs
2007	KOICA	Libya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struction Vocational Training	0.397349	UMICs
2007	KOICA	Myanma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Myanmar	0.416632	LDCs
2007	KOICA	Pakistan	Reconstruction of Government College of Commerce in Mansehra District	0.685971	LMICs
2007	KOICA	Sri Lanka	The Project for Upgrading Jaffna Technical College	1.536571	LMICs
2007	KOICA	Uzbekistan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0.046656	LMICs
2007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the Upgrading of the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1.055002	LMICs

2007	KOICA	West Bank and Gaza Strip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enin Industrial School in Pale	0.025354	LMICs
2008	KOICA	Afghanistan	Project for Vocational Training in Parwan Province of Afghanistan	0.029454	LDCs
2008	KOICA	Afghanistan	Workshop on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or Afghanistan Officials	0.420294	LDCs
2008	KOICA	Bangladesh	The Program to Enhance the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of Bangladesh	2.450923	LDCs
2008	KOICA	Ecuado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ICT Training Center of the Guayas Province in Ecuador	0.284968	UMICs
2008	KOICA	Egypt	The Improvement of the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0.000356	LMICs
2008	KOICA	Egypt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Luxor Mechanical Industry Secondary School	0.319757	LMICs
2008	KOICA	Egypt	The Project for Upgrading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Embaba Guiza	0.107474	LMICs
2008	KOICA	Guatemala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Guatemala ICT Training Center	0.312554	LMICs
2008	KOICA	Guatemala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mobile Center of the INTECAP Training Center in Guatemala	0.547591	LMICs
2008	KEXIM	Sri Lanka	The Upgrading National Vocational Training Center at Niyagama	6.340894	LMICs
2008	KEXIM	Tanzania	Vocational Training Centers Establishment Project	0.973405	LDCs
2008	KOICA	Iran	Establishment of Automotiv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Iran	0.539749	UMICs
2008	KOICA	Jordan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the Vocational Training Centre in Zarqa	2.042966	UMICs
2008	KOICA	Libya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Libya	0.522073	UMICs
2008	KOICA	Myanma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1.142702	LDCs

2008	KOICA	Nepal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EPAL	0.139425	LDCs
2008	KOICA	Uzbekistan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0.1875	LMICs
2008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the Upgrading of the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School	1.224828	LMICs
2008	KOICA	West Bank and Gaza Strip	The Establishment of the Jenin Industrial Secondary School	0.822292	LMICs
2009	KOICA	Afghanistan	Project for Vocational Training in Parwan Province, Afghanistan	4.842557	LDCs
2009	KOICA	Bangladesh	Program for the Effective Vocational Training in Bangladesh	0.222765	LDCs
2009	KEXIM	Nicaragua	Creation of technical-methodological capab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centers	3.447892	LMICs
2009	KEXIM	Sri Lanka	The Upgrading National Vocational Training Center at Niyagama	0.807649	LMICs
2009	KEXIM	Tanzania	Vocational Training Centers Establishment Project	0.381632	LDCs
2009	KOICA	Jordan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sistance to EETI in Zarqa, Jordan	0.085041	UMICs
2009	KOICA	Myanma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Myanmar	0.390137	LDCs
2009	KOICA	Nepal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EPAL	0.928792	LDCs
2009	KOICA	Uzbekistan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0.750995	LMICs
2009	KOICA	West Bank and Gaza Strip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enin Industrial School in Palestine	1.460497	LMICs
2010	KOICA	Afghanistan	Project for Vocational Training in Parwan Province, Afghanistan	5.642752	LDCs
2010	KOICA	Ghana	The project for the rehabilitation of Accra Technical Training Center in Ghana	0.33117	LMICs
2010	KOICA	Honduras	Establishment of Technical Training Center in SPS, Honduras	0.367967	LMICs

2010	KOICA	Iraq	Project for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Sulaimanyah, Iraq	0.980198	LMICs
2010	KOICA	Jordan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Vocational Training in Zarqa and Maan	0.052531	UMICs
2010	KOICA	Mongolia	The Project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Korea-Mongolia Technical College in Ulaanbaatar	0.180579	LMICs
2010	KOICA	Morocco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the Automobile Industry in Casablanca	0.431463	LMICs
2010	KEXIM	Nicaragua	Creation of technical-methodological capab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centers	4.710109	LMICs
2010	KEXIM	Kenya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Extension Project	0.19634	Other LICs
2010	KEXIM	Cameroon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Vocational Training Center Project	0.534742	LMICs
2010	KEXIM	Sri Lanka	Upgrading of Niyagama National Vocational Training Center Project	0.820159	LMICs
2010	KEXIM	Uzbekistan	Voc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	8.755899	LMICs
2010	KEXIM	Tanzania	Vocational Training Centers Establishment Project	6.001994	LDCs
2010	KOICA	Myanma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mobile	0.940043	LDCs
2010	KOICA	Nepal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EPAL	2.306065	LDCs
2010	KOICA	Pakistan	Cooperation on the Project of Vocational Training for Crisis Affected Persons	0.063066	LMICs
2010	KOICA	Pakistan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Garment Technology Training Centre in Karachi	0.886233	LMICs
2010	KOICA	Paraguay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CT Training Center in	0.024884	LMICs
2010	KOICA	Rwanda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icukiro Technical Training Centre within the IPRC-Kigali	1.879944	LDCs
2010	KOICA	Uzbekistan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0.935093	LMICs

2010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Korea–Vietnam College of Technology in Bac Giang	0.020297	LMICs
2010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kill Testing and Certification System	0.007239	LMICs
2010	KOICA	West Bank and Gaza Strip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Secondary Industrial School	0.010092	LMICs
2011	KOICA	Afghanistan	Project for Vocational Training in Parwan Province, Afghanistan	4.213718	LDCs
2011	KOICA	Bangladesh	The Project for Enhancing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of TTC, Chittagong	0.430979	LDCs
2011	KOICA	Ghana	The project for the rehabilitation of Accra Technical Training Center in Ghana	0.476049	LMICs
2011	KOICA	Honduras	/Establishment of Technical Training Center in SPS, Honduras	2.100722	LMICs
2011	KOICA	Iraq	Supporting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Southern Part of Iraw	0.387963	LMICs
2011	KOICA	Jordan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Vocational Training in Zarqa and Maan	0.474627	UMICs
2011	KOICA	Mongolia	The Project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Korea–Mongolia Technical College in Ulaanbaatar	0.198961	LMICs
2011	KOICA	Morocco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the Automobile Industry	2.259293	LMICs
2011	KOICA	Myanma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mobile	1.501254	LDCs
2011	KOICA	Nepal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EPAL	1.722906	LDCs
2011	KOICA	Nepal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ical training center at Kathmandu University	0.273603	LDCs
2011	KEXIM	Kenya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Extension Project	3.841767	Other LICs
2011	KEXIM	Nicaragua	The Creation of Capab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Centers Project	3.938713	LMICs
2011	KEXIM	Cameroon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Vocational Training Center Project	0.55797	LMICs

2011	KEXIM	Sri Lanka	Upgrading of Niyagama National Vocational Training Center Project	0.105003	LMICs
2011	KEXIM	Uzbekistan	Voc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	3.054124	LMICs
2011	KEXIM	Tanzania	Vocational Training Centers Establishment Project	2.031891	LDCs
2011	KEXIM	Viet Nam	Vocational Training Equipment Supply to Ha Tinh Vocational Intermediate School Project	2.153931	LMICs
2011	KEXIM	Viet Nam	Vocational Training Equipment Supply to Quang Binh Vocational Junior College Project	2.688706	LMICs
2011	KOICA	Pakistan	Cooperation on the Project of Vocational Training for Crisis Affected Persons in Malakand Division	0.450144	LMICs
2011	KOICA	Pakistan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Garment Technology Training Centre in Karachi	0.274374	LMICs
2011	KOICA	Paraguay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CT Training Center in	0.001633	LMICs
2011	KOICA	Rwanda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icukiro Technical Training Centre within the IPRC-Kigali	0.352445	LDCs
2011	KOICA	Uganda	Establishment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in Uganda	0.278576	LDCs
2011	KOICA	Uzbekistan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1.598405	LMICs
2011	KOICA	Viet Nam	/Project for Upgrading Secondary Vocational Training School of Quang Tri Province, Vietnam/	2.095527	LMICs
2011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Korea-Vietnam College of Technology in Bac Giang	4.584271	LMICs
2011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kill Testing and Certification System	0.411998	LMICs
2011	KOICA	West Bank and Gaza Strip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Secondary Industrial School	0.210435	LMICs
2012	KOICA	Afghanistan	Project for Vocational Training in Parwan Province, Afghanistan	3.220349	LDCs

2012	KOICA	Bangladesh	The Project for Enhancing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of TTC, Chittagong	1.203811	LDCs
2012	KOICA	Colombia	Triangular Cooperation Project for Technical Capabilities in Latin America	0.131119	UMICs
2012	KOICA	Ethiopia	Project for Vocational Capacity Building Korean	4.423595	LDCs
2012	KOICA	Ghana	The project for the rehabilitation of Accra Technical Training Center in Ghana	1.239542	LMICs
2012	KOICA	Honduras	Establishment of Technical Training Center in SPS, Honduras	1.644934	LMICs
2012	KOICA	Iraq	Supporting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Southern Part of Iraw	1.109615	LMICs
2012	KOICA	Jordan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Vocational Training in Zarqa and Maan	0.869626	UMICs
2012	KOICA	Mongolia	The Project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Korea-Mongolia Technical College in Ulaanbaatar	0.07329	LMICs
2012	KOICA	Morocco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the Automobile Industry in Casablanca	2.806764	LMICs
2012	KOICA	Myanma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mobile	0.117693	LDCs
2012	KOICA	Nepal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EPAL	0.453079	LDCs
2012	KOICA	Nepal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ical training center at Kathmandu University	0.550994	LDCs
2012	KOICA	Pakistan	Upgrading of the Pak-Korea Garment Tech Institute in Karachi	0.216034	LMICs
2012	KOICA	Paraguay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CT Training Center in	0.537015	LMICs
2012	KOICA	Philippines	Upgrading and Enhancement 0f Korea-Philippines Vocational Center Davao	0.380605	LMICs
2012	KOICA	Uganda	Establishment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in Uganda	0.102334	LDCs
2012	KEXIM	Kenya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Extension Project	3.833761	Other LICs
2012	KEXIM	Nicaragua	The Creation of Capab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Centers Project	0.578918	LMICs

2012	KEXIM	Cameroon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Vocational Training Center Project	10.029156	LMICs
2012	KEXIM	Nicaragua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s Project – Phase II	0.398098	LMICs
2012	KEXIM	Uzbekistan	Voc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	0.496141	LMICs
2012	KEXIM	Tanzania	Vocational Training Centers Establishment Project	0.670951	LDCs
2012	KEXIM	Viet Nam	Vocational Training Equipment Supply to Ayunpa Vocational Intermediate School Project	2.692282	LMICs
2012	KEXIM	Viet Nam	Vocational Training Equipment Supply to Ha Tinh Vocational Intermediate School Project	0.883018	LMICs
2012	KEXIM	Viet Nam	Vocational Training Equipment Supply to Quang Binh Vocational Junior College Project	0.293809	LMICs
2012	KOICA	Uzbekistan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0.293976	LMICs
2012	KOICA	Viet Nam	Project for Upgrading Secondary Vocational Training School of Quang Tri Province, Vietnam	0.055563	LMICs
2012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Korea–Vietnam College of Technology in Bac Giang	0.593767	LMICs
2012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kill Testing and Certification System	0.706756	LMICs
2012	KOICA	West Bank and Gaza Strip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Secondary Industrial School	1.83476	LMICs
2013	KOICA	Afghanistan	Project for Vocational Training in Parwan Province, Afghanistan	4.34563	LDCs
2013	KOICA	Bangladesh	The Project for Enhancing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3.453777	LDCs
2013	KOICA	Bangladesh	The Project for Modernization and Strengthening of Training Institute	0.03019	LDCs
2013	KOICA	Cambodia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HRD Center in Royal University	1.727578	LDCs
2013	KOICA	Cameroon	The Project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Vocational Trainers	0.577618	LMICs

2013	KOICA	Colombia	Triangular Cooperation Project for Technical Capabilities	0.42089	UMICs
2013	KOICA	Ethiopia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VET College in Tigray, Ethiopia	0.709417	LDCs
2013	KOICA	Ethiopia	Project for Vocational Capacity Building Korean	0.015617	LDCs
2013	KOICA	Haiti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arment technology training	1.814994	LDCs
2013	KOICA	Honduras	Establishment of Technical Training Center in SPS, Honduras	0.12006	LMICs
2013	KOICA	Iraq	Supporting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Southern Part of Iraw	2.85008	LMICs
2013	KOICA	Jordan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Vocational Training	2.943297	UMICs
2013	KOICA	Morocco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raining Institute	1.179439	LMICs
2013	KOICA	Mozambiqu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Matola Industrial Institute	1.059455	LDCs
2013	KOICA	Nepal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EPAL	0.051577	LDCs
2013	KOICA	Nepal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echnical training center	1.698509	LDCs
2013	KOICA	Pakistan	Upgrading of the Pak-Korea Garment Tech Institute in Karachi	0.132682	LMICs
2013	KOICA	Paraguay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CT Training Center in	1.748454	LMICs
2013	KOICA	Philippines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HRD Center in Philippine	1.023285	LMICs
2013	KOICA	Philippines	Upgrading and Enhancement 0f Korea-Philippines Vocational Center Davao	0.75392	LMICs
2013	KOICA	Rwanda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icukiro Technical Training	0.838176	LDCs
2013	KOICA	Sri Lanka	Modernization and Upgrading of Automobile Centers in the Colleges	0.415635	LMICs
2013	KOICA	Uganda	Establishment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in Uganda	0.680161	LDCs
2013	KOICA	Uzbekistan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Vocational Training Education	0.365082	LMICs

2013	KOICA	Viet Nam	Project for Improving Central Highlands Vocational college	0.571545	LMICs
2013	KOICA	Viet Nam	Project for Upgrading Secondary Vocational Training School	2.32192	LMICs
2013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Korea-Vietnam College of Technology	3.54822	LMICs
2013	KOICA	Viet Nam	The Project for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kill	0.154708	LMICs
2013	KOICA	West Bank and Gaza Strip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Secondary Industrial School	0.942108	LMICs
2013	KEXIM	Kenya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Extension Project	1.249328	Other LICs
2013	KEXIM	Cameroon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Vocational Training Center Project	2.937746	LMICs
2013	KEXIM	Nicaragua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s Project – Phase II	6.124538	LMICs
2013	KEXIM	Uzbekistan	Voc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	0.417027	LMICs
2013	KEXIM	Viet Nam	Vocational Training Equipment Supply to Ayunpa Vocational Intermediate School Project	0.307696	LMICs

Source: OECD Aid Statistics (http://stats.oecd.org/qwids)

III

KOICA 개발협력 자료 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2. KOICA ODA도서관 2015년도 학술DB 구독 목록
3. KOICA 2015년 9월~2015년 12월 발간물 목록
4.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5.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6.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한국국제협력단 ODA도서관은 국제개발협력 및 개발도상국 관련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보고서 등을 수집 · 정리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 · 관리 하고 있습니다.

ODA도서관은 개가제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 하시며 자료보유현황 및 열람시간, 자료 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자료검색, 자료 이용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료보유 현황(2015년 12월 현재)

-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보고서: 8,991권
- 국내/국외 학술DB: 13종

  ※ 구독목록은 'KOICA ODA도서관 2015년도 학술DB(국내/국외) 구독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34,284권
- 비도서자료: 1,641점

2. 자료 열람시간

구분	시간	비고
평일(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1:50~12:5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3. 자료 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 직원: 열람, 대출, 복사 가능
- 외부이용자: 열람, 복사 가능

  (단, 자료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원문 공개파일은 외부이용자 모두 열람 및 출력 가능)

4. 자료 검색

-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 ODA도서관
- KOICA ODA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

5. 자료 이용문의

- 전화: 031-7400-618, 619
- 이메일: library@koica.go.kr

KOICA ODA도서관 2015년도 학술DB 구독 목록

학술DB 통합검색은 ODA도서관 → 자료검색 →'학술DB' 부분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번호	DB명		내용	비고
1	KISS	한국학술정보	국내 학회지, 학위논문 원문검색시스템으로 1,299개 학술기관의 학술지 및 논문들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2	DBpia	누리미디어	국내 학회, 협회 및 출판사 367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1,837여종의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3	Academic Search Premier	EBSCOhost ASP	ASP(Academic Search Premier)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교육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하여 생물, 환경, 수학, 물리, 화학, 지리, 컴퓨터, 전기, 전자, 토목공학, 재료공학, 의학 등 광범위한 다 학문분야(Multi-disciplinary) 원문 데이터베이스 학문 전분야에 걸친 14,100여종의 해외 학술저널 색인, 초록정보를 바탕으로 그 중 4,800여종의 저널에 대한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4	Business Source Premier	EBSCOhost BSP	BSP(Business Source Premier) 비즈니스 분야 연구정보원으로서 경영/경제/회계/금융/무역/행정 등 비즈니스 전반의 2,200여종의 학술저널 및 매거진을 비롯한 23,000여종의 출판물에 대한 원문 제공 전세계 200여 국가 1,000여종의 국가보고서를 비롯하여 5,600여종의 산업보고서, 시장보고서, Case Studies, Company Profiles등 폭넓은 연구정보 수록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5	JSTOR	JSTOR	주요 학술저널의 현재 및 과거자료에 대한 Archive 자료를 제공하며 최근 1~2년 전까지의 논문 원문을 이용할 수있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JSTOR 전체 옵션 중 'Art & Science Ⅶ(256종)', Business Ⅰ(69종), Business Ⅱ(83종)' 에 대한 학술지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6		ScienceDirect (World Development Journal)	Elsevier 발행자료인 'World Development' 저널 원문 기사 제공 2011년 Vol. 39, no. 1 부터 이용가능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7	Taylor & Francis Online	Taylor and Francis	Taylor & Francis 발간 저널 중 SSH(Social Science & Humanities) 분야의 1,196종 저널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8	Wiley Online Library	Wiley Online Library	Wiley 발간 저널 중 SSH(Social Science & Humanities) 분야의 436종 저널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9	IMF eLIBRARY	IMF eLibrary	IMF 발간물 온라인 서비스로 'Books and Analytical Papers', 'Periodicals and Reports',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IMF 'Statistics Collection' 부분을 통해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등 통계자료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번호	DB명		내용	비고
10	OECD iLibrary	OECD iLibrary	OECD Publishing에서 발행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 자료 원문 구독 OECD Books(17종), Papers(16종), Statistics(34종), IEA Statistics(10종)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11	eLibrary	World Bank e-Library	World Bank에서 출판한 에너지, 국제, 사회, 경제개발에 관련 Books, Reports, Working Paper, Documents의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12	OECD	OECD OLIS Net	OECD의 보고서, 출판물, 통계, 회의자료 등 주요 자료를 OECD 회원국 중 입증된 기관에게만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1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s	EIU사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경제, 정치, 국가 기본정보 및 분석 리포팅 서비스.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열람가능	로그인 후 이용

KOICA 2015년 9월~ 2015년 12월 발간물 목록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1	베트남 ODA 법령집 2014.12	동남아시아1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2	베트남 새농촌개발(NRD) 2016~2020 정책 자문 보고서 2015.8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	몽골 한-몽 기술대학교 역량강화사업 설계 및 CM 용역 2015.10	동북아태평양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4	몽골 국회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최종보고서 2015.7	동북아태평양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5	케냐 국가산업훈련청(NITA) 역량강화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5.10	동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6	스리랑카 기능대학(TC) 자동차공과 개선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2.12	서남아시아팀	2012	한국국제협력단
7	스리랑카 콜롬보광역시 지역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사업 2차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2013.1	서남아시아팀	2013	한국국제협력단
8	스리랑카 Nilwala 지역 수자원개발 타당성조사사업 2차 조사 결과보고서 2013.1	서남아시아팀	2013	한국국제협력단
9	글로벌 새마을 사업 세네갈 농업기술학교(CIH) 역량강화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4.4	서아프리카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10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ISEP) 설립사업(2015-2019/900만불) 사전타당성조사 2차 보고서 2014.12	서아프리카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11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2014.3	서아프리카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12	글로벌 새마을 사업 세네갈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4.4	서아프리카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13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ISEP) 설립사업(2015-2019/900만불)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5.6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4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2015-2018/500만불)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5.5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5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알제리 2015.8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6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모로코 2015.8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7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세네갈 2015.8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8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튀니지 2015.8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9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코트디부아르 2015.8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0	세네갈 식수개발사업 PMC 용역 사업종료 보고서 2015.5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1	국제개발협력 CSO 실무자를 위한 평가 안내서	시민사회협력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22	분쟁 및 취약국 지원현황분석: 뉴딜이행현황을 중심으로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3	정치경제분석법(PEA)에 기반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개선방안 고찰: DFID와 Sida 사례를 중심으로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4	신흥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슬로바키아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5	신흥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체코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6	신흥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슬로베니아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7	신흥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폴란드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8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포용적 개발을 향하여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9	사례 분석을 통한 원조사업 다각화 및 Post-2015 체제 개발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프로그램형접근법(PBA)과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0	OECD DAC 개발협력 주요이슈 논의동향과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계방안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1	Post-2015 체제의 개발재원 논의 분석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2	개발협력사업 성과의 계량화 사례연구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3	무상원조의 경제성 효과분석 2015.9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4	KOICA Annual Report 2014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5	2014 코이카 연보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6	2014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 2014 KOICA Aid Statistics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7	영원한 청년 in 파라과이: KOICA 해외봉사단원 활동경험담	월드프렌즈 운영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8	쑤쑤 아줌마 쑤쑤 코이카: KOICA 해외봉사단원 활동경험담	월드프렌즈 운영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9	자메이카 지적도 제작 및 토지등록 사업('11~'14 / 210만불)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2015.10	중남미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40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시 훈련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5.8	중동중앙아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41	(KOICA)2014 Annual Evaluation Report	평가심사실	2015	한국국제협력단
42	KOICA 프로그램형 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모듈) 개발 2015.10	평가심사실	2015	한국국제협력단
43	알기 쉬운 홍보 메뉴얼: 코이카 홍보 가이드라인 2015.9	홍보실	2015	한국국제협력단
44	제12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ODA교육원	2015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대한미국 대개도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ODA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NGO 및 민간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조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원조사업 관련 정보 수집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음답(70%)하였으며, 이는 △원조관련 정보의 분산(41%),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름(26%),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 비공개(22%)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구축완료 후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ODA원조정보의 공유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동 시스템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NGO및 민간기업 등 ODA 유관기관 간 서로 원조정보를 등록, 조회, 평가, 검색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중복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기관별 연간 사업계획 공유, 정보 Q&A, 커뮤니티 개설 및 이슈토론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간 공유가 가능한 자료로는 원조정책,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평가관련 정보, 선진원조 동향, 연구보고서, 국별, 지역별, 분야별 정보,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평가 및 통계 자료 등입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무상원조사업 수요조사를 동 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 할 예정으로, 우량사업에 대한 적기의 검토와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은 ODA 유관기관 간 원조정보 및 지식, 노하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원조 분절화 방지 및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원조 선진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동 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각 기관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한 후, 기관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아래의 팩스 번호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E-mail: oda@koica.go.kr
  FAX: 031-7400-658
- ODA원조정보 공유시스템: www.oda.go.kr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한국국제협력단은 계간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슈 중 아래에 정한 내용이어야 하나, 이 외에도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사업 종사자 및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I. 『국제개발협력』 발간 목적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ECD/DAC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

II. 『국제개발협력』 원고게재 절차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하다. 단, 우편접수시에는 논문이 원본 파일이 저장된 CD 1대를 동봉한다.
  Email: callforpapers@koica.go.kr
  Tel: (+82)31-740-0556 FAX: (+82)31-740-0682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461-833)

- 원고접수는 각 호의 원고마감일에 따른다.

호	개발협력이슈 주제	원고마감일
2016년 1호	기후변화와 과학기술	2016년 1월 31일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I. 원고 제출 및 게재

1.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의 성격 및 형태는 순수이론적인 논문, 실증분석논문, 사례연구, 응용연구 및 정책분석 등 방법론상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2. 제출 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창작 글이어야 한다. 단 제출된 원고가 편집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제개발협력』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국제개발협력』은 매년 분기별로 네 차례 발간한다. 매호의 원고는 출판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접수된 것에 한하며, 매호의 원고마감일은 직전 호의 국제개발협력지에 별도 안내된다.

4. 원고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5. 원고 제출시 연구자는 영문 또는 국문초록이 포함된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원고를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전자메일(callforpapers@koica.go.kr)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한다.

   전자메일: callforpapers@koica.go.kr
   전화: (+82)31-740-0556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461-833)

6. 제출된 원고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비공개 심사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게재 승인을 받은 논문의 저작권은 협력단에 귀속된다.

7. 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8.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9.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10. 공동집필인 경우에는 대표저자와 공저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I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 분량

1) 원고는 표지, 목차, 표 또는 그림 일체를 제외한 기타 부분(참고문헌 산입)에 대해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로 제한한다.

2)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원고분량의 경우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매로 산정한다.

2. 원고 구성

1) 원고는 표지, 국문(영문)요약, 주제어(3~5개),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구성한다.

2) 표지에는 논문제목, 목차,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 · 전화 · 팩스), 간단한 필자소개를 명기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3)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4)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5)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7)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표와 그림의 번호는"〈표 1〉· · · "과 "〈그림 1〉· · ·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서 삽입한다.

(2) 설명주는"주:"로 시작하고, 출처는"출처:"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3)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4)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만 표현됨에 유의 한다.

8) 원고의 각 쪽에는 반드시 쪽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표지인 첫 페이지를 제외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한다.

3. 원고의 형식

1)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2)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 · 절 · 항 · 목의 번호는" Ⅰ .","1.","1)","(1)"의 순차로 매긴다.

(2) 강조어는", 인용구는""로 둘러싼다.

4. 저자명 표기

1)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5. 표 및 그래프 작성

(1) 제목은"〈표 1〉 …"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2) 설명주는"주:"로 시작하고 출처는"자료:"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3) 표와 그림의 길이는 가로 113mm를 초과할 수 없다.

Ⅲ. 전거 표시 요령

1. 전거 표시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전거 표시 요령을 준용한다.

2.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 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이상백(1949: 23)…"; [예2] "…라 했다(이상백, 1949: 23)."

(2)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킬 경우,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 번역서와 원서에 관계없이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한다.
[예] "…밀스(Mills, 1956)"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중간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이상백 · 김채윤, 1966)"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문승규 · 윤근섭 · 한상복, 1967)"; "…(문승규 외, 1967)"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김일철, 1999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Ⅳ.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2.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 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1) 국문저서나 간행문명은『 』, 신문제호는「 」, 논문제목은" "로 둘러싼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3)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5)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6)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 이상백 · 김채윤, 1996.『한국사회계층연구』. 민조사.
- 차종천. 1990a.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회이동 비교." 송호근 편.『노동과 불평등』. 나남출판. pp.125-149.
- _____. 1990b.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 편.『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pp.193-122.
- 菅谷章 (스가랴 아키라). 1988.『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論社.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力移動." 森田桐郎 編,『國際勞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1-54.
- Beger, Peter. L., and Xinhuang Michael X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Cannel, Charles F., Peter Miller, and Louis Oksenb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389-437 in Sociological Methodology, edited by Samuel Leinhardt. San Francisco, CA: Jossy-Bass.
-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인근달 역. 1990.『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 시사영어사).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 최재석, 1964. "한 · 일 · 중 동양 삼국의 동족 비교"『한국사회학』1(2): 88-99.
-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 Shin, Ho Hyun. 1990.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Krafcik, John F., and John Paul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The International Automotive Assembly Plant Study." Working Paper of 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 (IMVP),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 Kollock, Peter, and Marc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3) 번역서

- 베버, 막스(Weber, Max). 1990.『유교와 도교』이상율 역. 문예출판사.
- 클레그 · 히긴스 · 스파이비(Clegg, Stewart R., Winton Higgins, and Tony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혁래 · 박길성 · 유홍준 편.『신경제사회와의 이해』. 역사비평사. pp.195-210.
- Weber, Max. 1951(1920).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17-189

국제개발협력 2015년 제4호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인 김영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전략기획부 연구개발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031)740-0556
팩 스 031)740-0682
홈 페 이 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다인스케치

[무단복제를 금함]

ISSN 2093-212X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17-189

ISSN 2093-212X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